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 19-09

장애인 맞춤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역일자리 탐색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본 보고서의 연구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재)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www.ko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연 구 진

연 구 책 임 : 이혜경(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연구개발팀장)

공 동 연 구 원 : 이수용(전 울산여성가족개발원 부연구위원)
이선화(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연구개발팀 부연구위원)

자문위원

박경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센터장

박주영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이인재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최혜원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이한석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사무관

발간사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지 18년 만에 2018년부터 고령인구 비율이 14%를 초과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6년에는 전체인구의 4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에 따른 문제점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소득 및 건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고 건강상의 문제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고령자들을 위한 취업이나 일자리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노화와 장애로 인한 신체적 어려움과 환경적 제약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기술혁신, 자동화 등으로 일자리가 감소하여 경제활동에 활발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중증장애인이나 학령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을 경험하는 청년장애인들은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얻는 것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고령자, 청년 등 취업이 어려운 이들에게 지역 중심의 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역중심의 고용전략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제외하면, 지역 중심의 일자리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장애인일자리사업도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지역에서는 예산을 배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고용과 취업활성화, 일자리 개발에 있어 지역 중심의 일자리 창출 전략이 필요하며, 장애인의 욕구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장애인의 고용 및 일자리 개발과 유지를 위해 지역 중심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습니다.

연구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에 대한 자문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박경하 센터장님, 전주대학교 박주영 교수님, 한신대학교 이인재 교수님,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의 최혜원 사무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증장애인은 다양한 취업경로를 경험하지 못하고 주로 보호고용이나 장애인일자리에 국한되어 있는 한계를 고령 및 청년 일자리처럼 지역 중심의 일자리 지원 전략을 통해 새로운 출구를 모색하고자 수행된 본 연구가 장애인 고용 및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책과 사고의 전환이 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10월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최 경 숙**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목 차

연구요약 ····· xi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4
3. 연구수행체계 ····· 5

Ⅱ. 우리나라 고용 및 일자리 정책 현황 ····· **7**

1.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제도 ····· 9
2.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과 제도 ····· 19
3. 대상자별 고용 및 일자리 정책 ····· 77
4. 소결 ····· 85

Ⅲ. 해외 장애인 고용 및 일자리 정책 현황 ····· **87**

1. 일본 ····· 89
2. 독일 ····· 100
3. 미국 ····· 106
4. 영국 ····· 113
5. 호주 ····· 121
6. 소결 ····· 127

Ⅳ.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 ····· **131**

1. 경제활동 실태 총괄 ····· 133
2. 지역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 ····· 165
3. 소결 ····· 171

Ⅴ. 지역중심의 장애인일자리 창출 방안 ····· 175

1. 지역중심의 일자리 현황 논의 ····· 177
2. 장애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 모델 개발 ····· 186
3. 장애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방안 ····· 190

참고문헌 ····· 193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목차

〈표 Ⅱ-1〉 지역일자리사업의 지역자율성 강화방안 주요 내용 ····· 11
〈표 Ⅱ-2〉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 ····· 12
〈표 Ⅱ-3〉 고용 및 일자리 관련 국정과제(고용노동부) ····· 14
〈표 Ⅱ-4〉 2019년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 20
〈표 Ⅱ-5〉 서울시 일자리사업 주요내용 ····· 22
〈표 Ⅱ-6〉 부산광역시 일자리 사업유형 ····· 25
〈표 Ⅱ-7〉 2019년 부산광역시 일자리 사업 ····· 26
〈표 Ⅱ-8〉 2019년 부산광역시의 일자리 정책 예산 ····· 26
〈표 Ⅱ-9〉 2019년 인천광역시 일자리정책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 29
〈표 Ⅱ-10〉 2019년 인천광역시의 일자리 정책 예산 ····· 31
〈표 Ⅱ-11〉 2019년 대구광역시 일자리정책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 32
〈표 Ⅱ-12〉 2019년 대구광역시의 일자리 정책 예산 ····· 34
〈표 Ⅱ-13〉 2019년 대전광역시 일자리 정책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 34
〈표 Ⅱ-14〉 2019년 대전광역시의 일자리 정책 예산 ····· 36
〈표 Ⅱ-15〉 2019년 울산광역시 일자리 사업 추진과제 및 추진내용 ····· 37
〈표 Ⅱ-16〉 2019년 울산광역시의 일자리 정책 예산 ····· 38
〈표 Ⅱ-17〉 2019년 세종특별자치구 일자리 사업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 39
〈표 Ⅱ-18〉 2019년 세종특별자치구의 일자리 정책 예산 ····· 40
〈표 Ⅱ-19〉 2019년 세종특별자치구의 추진 일자리사업 ····· 41
〈표 Ⅱ-20〉 2019년 광주광역시 일자리 사업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 42
〈표 Ⅱ-21〉 2019년 광주광역시의 일자리 정책 예산 ····· 43
〈표 Ⅱ-22〉 광주광역시 일자리 사업유형 ····· 44
〈표 Ⅱ-23〉 광주광역시 전략과제별 일자리 사업 ····· 44
〈표 Ⅱ-24〉 2019년 경기도 일자리 사업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 46
〈표 Ⅱ-25〉 경기도 전략과제별 일자리 사업 ····· 46
〈표 Ⅱ-26〉 2019년 경기도의 일자리 정책 예산 ····· 47

〈표 Ⅱ-27〉 2019년 강원도 일자리 사업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 48
〈표 Ⅱ-28〉 2019년 강원도의 일자리정책 예산 ····· 49
〈표 Ⅱ-29〉 2019년 충청북도 일자리 사업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 50
〈표 Ⅱ-30〉 2019년 충청북도의 일자리 정책 예산 ····· 52
〈표 Ⅱ-31〉 2019년 충청남도 일자리 사업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 54
〈표 Ⅱ-32〉 일자리 대상별 재원 ····· 56
〈표 Ⅱ-33〉 2019년 경상북도 일자리 사업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 57
〈표 Ⅱ-34〉 2019년 경상북도의 일자리 정책 예산 ····· 57
〈표 Ⅱ-35〉 2019년 경상북도의 추진 일자리사업 ····· 58
〈표 Ⅱ-36〉 2019년 경상남도의 추진 일자리사업 ····· 60
〈표 Ⅱ-37〉 2019년 경상남도의 일자리 정책 예산 ····· 62
〈표 Ⅱ-38〉 경상남도 일자리 사업유형 ····· 62
〈표 Ⅱ-39〉 2019년 전라북도의 일자리 정책 예산 ····· 64
〈표 Ⅱ-40〉 2019년 전라북도의 일자리 사업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 64
〈표 Ⅱ-41〉 2019년 전라남도의 일자리 사업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 66
〈표 Ⅱ-42〉 2019년 전라남도의 일자리 정책 예산 ····· 67
〈표 Ⅱ-43〉 전라남도의 일자리 사업수행 기관 ····· 67
〈표 Ⅱ-44〉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일자리 사업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 70
〈표 Ⅱ-45〉 2019년 제주도 일자리 정책 예산 ····· 70
〈표 Ⅱ-46〉 제주도 일자리 사업 실천과제 및 주요내용 ····· 70
〈표 Ⅱ-47〉 장애인일자리사업 내용 ····· 80
〈표 Ⅱ-48〉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내용 ····· 81
〈표 Ⅲ-1〉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른 사업주 지원 조치 내용 ····· 89
〈표 Ⅲ-2〉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른 장애인 당사자지원 조치 내용 ····· 90
〈표 Ⅲ-3〉 일본의 보호고용 유형 ····· 91
〈표 Ⅳ-1〉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15~64세 인구, 전체 인구 비교) ····· 133
〈표 Ⅳ-2〉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1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비교) ····· 134
〈표 Ⅳ-3〉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 - 성별(2018년 5월 기준, 전체 인구 비교) ·· 135
〈표 Ⅳ-4〉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 - 연령별(2018년 5월 기준, 전체 인구 비교) ··· 136
〈표 Ⅳ-5〉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 - 연령계층별 ····· 137
(2018년 5월 기준, 전체 인구 비교) ····· 137
〈표 Ⅳ-6〉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 - 장애정도별(2018년 5월 기준) ····· 137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odi.or.kr

〈표 Ⅳ-7〉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 - 장애유형별(2018년 5월 기준) ····· 138
〈표 Ⅳ-8〉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 - 학력별(2018년 5월 기준, 전체 인구 비교) 139
〈표 Ⅳ-9〉 주요 인구통계학 변수별 경제활동지표(2017년 조사 비교) ····· 140
〈표 Ⅳ-10〉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 - 연령별, 성별
(2018년 5월 기준, 전체 인구 비교) ····· 142
〈표 Ⅳ-11〉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 - 연령계층별, 성별
(2018년 5월 기준, 전체 인구 비교) ····· 143
〈표 Ⅳ-12〉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 - 장애정도별, 성별(2018년 5월 기준) ····· 144
〈표 Ⅳ-13〉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 - 장애유형별, 성별(2018년 5월 기준) ···· 144
〈표 Ⅳ-14〉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 - 학력별, 성별
(2018년 5월 기준, 전체 인구 비교) ····· 146
〈표 Ⅳ-15〉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 - 연령별, 장애정도별(2018년 5월 기준) ···· 147
〈표 Ⅳ-16〉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 -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2018년 5월 기준) ·· 148
〈표 Ⅳ-17〉 취업자의 인구통계학 변수별 분포(전체 인구 비교) ····· 149
〈표 Ⅳ-18〉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전체 인구 비교) ····· 150
〈표 Ⅳ-19〉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 사업체 규모별 ····· 151
〈표 Ⅳ-20〉 취업자의 직장(일자리) 산업(전체 인구 비교) ····· 152
〈표 Ⅳ-21〉 취업자의 직업(전체 인구 비교) ····· 153
〈표 Ⅳ-22〉 취업자의 직장(일자리) 사업체 규모(전체 인구 비교) ····· 154
〈표 Ⅳ-23〉 취업자의 지난 주 취업시간(전체 인구 비교) ····· 154
〈표 Ⅳ-24〉 취업자의 현재 직장(일자리) 근속기간 - 종사상 지위별, 사업체 규모별 ···· 155
〈표 Ⅳ-25〉 취업자의 현재 직장(일자리) 유형 - 종사상 지위별 ····· 156
〈표 Ⅳ-26〉 실업자의 인구통계학 변수별 분포(전체 인구 비교) ····· 157
〈표 Ⅳ-27〉 실업자의 과거 취업경험(전체 인구 비교) ····· 158
〈표 Ⅳ-28〉 과거 취업경험이 있는 실업자의 직장(일)을 그만둔 사유 ····· 158
〈표 Ⅳ-29〉 실업자의 실업상태 지속이유(1순위) ····· 160
〈표 Ⅳ-30〉 실업자의 취업을 희망하는 고용형태, 산업, 직업 ····· 161
〈표 Ⅳ-31〉 실업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직장(사업체) 종류 ····· 162
〈표 Ⅳ-32〉 실업자의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시간 형태 ····· 162
〈표 Ⅳ-33〉 실업자가 시간제 근무를 희망하는 주된 이유 ····· 163
〈표 Ⅳ-34〉 실업자의 희망하는 월평균 소득 ····· 163
〈표 Ⅳ-35〉 실업자의 주관적 근로 가능 정도 ····· 164

〈표 Ⅳ-36〉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 - 지역별(2018년 5월 기준, 전체 인구 비교) ···· 165
〈표 Ⅳ-37〉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 - 지역별, 성별(2018년 5월 기준, 전체 인구 비교) ··· 166
〈표 Ⅳ-38〉 권역별 취업자 사업체유형 ····· 167
〈표 Ⅳ-39〉 권역별 취업자의 직장(일자리) 산업 현황 ····· 168
〈표 Ⅳ-40〉 권역별 취업자 직업 ····· 170
〈표 Ⅴ-1〉 지역별 일자리 정책 특성 및 장애인 경제활동 특성 ····· 179
〈표 Ⅴ-2〉 지역중심 장애인 일자리사업 모델 설정 방향 ····· 186
〈표 Ⅴ-3〉 장애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 수요 발굴 방법 ····· 187
〈표 Ⅴ-4〉 장애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 분류 ····· 189
〈표 Ⅴ-5〉 장애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 ····· 191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그림목차

[그림 Ⅰ-1] 연구수행체계 ····· 5
[그림 Ⅱ-1] 지역별 고용률 ····· 20
[그림 Ⅱ-2] 서울시-자치구 추진체계 및 역할 ····· 21
[그림 Ⅱ-3] 부산광역시 일자리정책 조직도 ····· 27
[그림 Ⅱ-4] 인천광역시의 일자리정책 추진체계 ····· 31
[그림 Ⅱ-5] 대전광역시 일자리 정책 추진체계 ····· 36
[그림 Ⅱ-6] 경상북도 일자리정책 추진체계 ····· 59
[그림 Ⅱ-7] 전라남도의 일자리정책 추진체계 ····· 68
[그림 Ⅱ-8]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 79
[그림 Ⅱ-9]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 82
[그림 Ⅲ-1] 일본 후생노동성의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조직도 ····· 92
[그림 Ⅲ-2] 취업취약 집단 대상 고용복지서비스 체계 ····· 105
[그림 Ⅲ-3] 미국 직업재활프로그램 주요 지표(2012년과 2013년) ····· 110
[그림 Ⅲ-4] 미국 직업재활프로그램 참여자의 고용 현황(2004-2013) ····· 110
[그림 Ⅴ-1] 사업추진 개요 ····· 188
[그림 Ⅴ-2] 장애인의 개별 욕구와 지역일자리 사이의 디딤돌 역할 ····· 189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연 구 요 약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연구요약

Ⅰ. 서론

○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저히 낮고, 특히 중증장애인이나 특수학교를 졸업한 이후 학령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을 경험하는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고용의 기회를 얻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임. 이에 정부에서는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같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을 통해 단기 혹은 일시적 일자리 제공을 통해 안정적 취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회가 충분하지 않음.

○ 이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고용전략을 위해 지역 중심의 자원개발과 지역 중심의 전략 개발이 필요함. 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일자리가 늘면, 소득이 늘고, 실업에 따른 사회 병폐가 사라지게 되어 도시가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이영성, 2009) 지역 경제력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임.

○ 장애인 고용 및 일자리사업은 중앙부처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며, 지방정부는 일부 예산을 중앙부처로부터 받고 중앙부처의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되어 지방정부의 역량이나 지역별 장애인의 욕구 및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율이 저조하고 장애인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점을 지역일자리 창출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며, 장기적으로 장애인의 고용 및 일자리를 유지시키기 위한 지역내 지역 중심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사회 기반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첫째, 관련 선행연구와 통계자료들을 분석함. 둘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추진의 일자리 정책 현황과 특성을 분석함. 셋째, 장애인 고용특성과 정부의 일자리 지원 사업 현황을

종합하여, 지역 중심의 장애인 고용 및 지원 방향, 장애인일자리 창출방향, 지역 중심의 장애인 고용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

Ⅱ. 우리나라 고용 및 일자리 정책 현황

○ 우리나라 고용 및 일자리 정책 현황은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과 제도, 대상자별 고용 및 일자리 정책을 살펴보았음.

○ 국정과제와 우리 정부의 고용 및 일자리 정책 방향을 분석한 결과, 좋은 일자리,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안전한 일터, 차별없는 좋은 일터와 같은 용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고용 및 일자리 정책 추진 기관으로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경우 사업별, 대상자별로 매우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고용 및 일자리 정책은 장애인 고용을 하는 사업주를 위한 정책이 더 많이 추진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는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일을 통한 적극적인 자립을 위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지역별로 상이한 고용 및 취업 여건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세부사업을 설계하고 행정안전부는 기본적인 사업유형과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은 17개 시도에서 고용 및 일자리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을 하고 있음. 각 지역마다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특성별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하고 있었으며, 지역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과정을 평가하는 추진체계를 갖추는 지자체도 있었음.

○ 대상자별 고용 및 일자리 정책은 장애인, 노인, 여성, 청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여성이나 청년의 경우에는 고용 및 일자리 정책이 다양하지 못하고 제한적이며, 취업준비단계나 실업자를 위한 한시적이고 일시적 지원 정책에 머물러 있어 다소 제한점으로 보여짐.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odi.or.kr

Ⅲ. 해외 장애인 고용 및 일자리 정책 현황

○ 해외 장애인 고용 및 일자리 정책 현황은 일본, 독일, 미국, 영국, 호주 등 5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의 장애인 고용 및 일자리 정책을 살펴보았음.

○ 지역고용정책에 관한 몇몇 해외사례를 살펴본 결과 사례국가들 사이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지역고용정책을 위한 자금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반면, 지방정부는 지역고용정책에 소규모 자금을 제한적으로 제공하거나 프로그램 · 서비스전달기관에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음.

○ 사례 국가 대부분은 중앙정부가 자신이 지원하는 자금을 활용 · 집행하는 지역에 대해 목적, 분야, 대상집단 등과 관련된 일정한 기준이나 조건을 부과하는 대신에 일정한 재량권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음.

○ 공통적으로 중앙정부, 지역사무소, 지방정부, 산업계, 노조조직, 지역고용센터, 지역고용관련기관들을 포괄하는 폭넓은 지역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고용정책 거버넌스·전달체계를 가짐. 그러나 지역고용정책 거버넌스·전달체계의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구조 · 성격, 구성 주체들의 위상·역할, 주도주체 등 여러 측면에서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임.

Ⅳ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

○ 장애인 경제활동상태를 총괄적으로 알아보고, 이에 따른 취업자와 실업자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지역별 현황조사를 통해 각 권역별 장애인 일자리 특성을 분석해보았음.

○ 분석 결과,

- 첫째, 장애인의 경제활동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둘째, 주요 인구통계학 변수별 경제활동지표를 2017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남성과 여성 모두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하락하였고 실업률이 상승하였으며, 연령대별로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는 상승하여

장애인의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임.

- 셋째, 취업자의 주요특성을 살펴보면 장애인 임금근로자는 전체 인구의 임금근로자 비중에 비해 6.9%p 낮은 비중 보여 장애인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수 있음.
- 넷째, 실업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인구 실업자 분포와 비교하면, 성별로는 남성, 연령별로는 40세 이상, 지역별로는 기타 시도,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고졸의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다섯째, 지역별 현황조사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은 '기타 시도'가 37.4%로 '수도권'(36.9%)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난 반면, '광역시권'은 36.4%로 다소 낮았다. 실업률의 경우 '광역시권'이 10.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경제활동상태 총괄 현황을 전국과 권역별로 살펴본 결과, 장애인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특별한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음.

Ⅴ. 지역중심의 장애인일자리 창출 방안

○ 장애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 모델 개발

1) 지역 맞춤형 일자리 모델 설계 방향

- 지역별 일자리 정책과 장애인의 고용 및 실업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맞춤형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목적은 "지역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장애인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을 확대"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을 제안.
- 세부 추진과제로는 첫째, 장애유형별 정도별 특성을 반영하고 전문성 활용이 가능한 일자리 수요 발굴, 둘째, 직업재활 서비스를 통한 촘촘한 디딤돌 역할 강화, 셋째, 지역의 장애인 일자리 주도 역량 강화, 넷째, 사업 차별화 및 시너지 제고로 제안.

2) 장애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 기본유형 설계

- 장애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 기본 유형을 제안해 보면, 크게 지역사회서비스형과 지역취업지원형으로 구분
- 지역사회서비스형은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목표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여 장애인 일자리로 연계를 하는 사업임.

- 지역취업지원형은 지역의 사회적경제와 마을사업장(마을기업, 농어업법인 등)과의 매칭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추구하는 사업임.

3) 장애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 모델 운영 방향

- 장애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는 낮은 생산성의 단순 노무에 치우치지 않도록 직업재활전문가를 두고 직무개발 및 배치 등의 촘촘한 디딤돌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함.

○ 장애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방안

-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이 지역사회내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타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의 차별성이 필요
- 대상이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문인력 지원과 전문직업재활서비스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며, 지역사회내 장애인복지관, 단체, 협회 등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임.

www.koddi.or.kr 한국정보인재개발원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저히 낮고, 특히 중증장애인이나 특수학교를 졸업한 이후 학령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을 경험하는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고용의 기회를 얻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같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을 통해 단기 혹은 일시적 일자리 제공을 통해 안정적 취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 젊은 계층의 장애인[1]과 중증장애인 보다는 고령장애인[2]이나 경증장애인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으며, 지역별로도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형 일자리고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추진하고 있는 '특화형일자리(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의 경우, 전체 1만 6천명이 넘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277명(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지역은 고용이 창출·유지되는 공간이며, 고용창출의 최종 전달체계는 지역 단위임으로 지역 차원의 고용개발이 중요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고용전략(지역숙련전략, 일자리창출전략, 고용정책 전달체계의 유연성, 지역파트너십) 개념이 등장하였다(OECD, 2014 ; 전인 외, 2015).

이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고용전략을 위해 지역 중심의 자원개발과 지역 중심의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일자리가 늘면, 소득이 늘고, 실업에 따른 사회 병폐가 사라지게 되어 도시가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이영성, 2009) 지역 경제력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포함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여러 사업들을 집행위탁형태로 예산을 지원받으나 이들 사업에 대한 재량권이 많지 않아 자율성이나 책임성에 기초하여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보다는 중간 전달체계의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이 크다(이규용외, 2012). 이러한 이유로 전달체계의 효율화 관점에서 지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1) 2017년 기준 만 24세 이하 참여자 비율은 14.1%임
2) 2017년 기준 50세 이상 참여자 비율이 51.1%이며, 특히 65세 이상이 27.1%를 차지하고 있음

지역 일자리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산업이 창출한 고용으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을 방지하는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의미한다. 지역마다 특성과 고유의 산업이 다른 이유로 경제적 기반 역시 상이하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역시 지역마다 다른 해법이 필요하다(김태영외, 2018).

장애인 고용 및 일자리사업은 중앙부처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며, 지방정부는 일부 예산을 중앙부처로부터 받고 중앙부처의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되어 지방정부의 역량이나 지역별 장애인의 욕구 및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율이 저조하고 장애인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점을 지역일자리 창출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며, 장기적으로 장애인의 고용 및 일자리를 유지시키기 위한 지역내 지역 중심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사회 기반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과 방법을 실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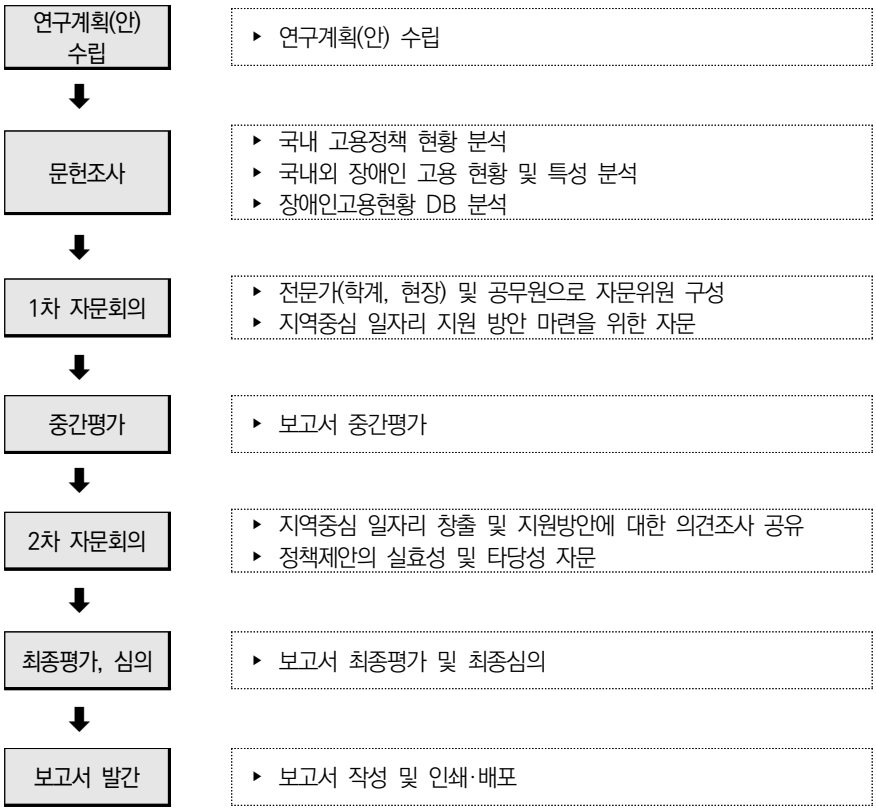
첫째, 관련 선행연구와 통계자료들을 분석한다. 장애인의 고용 및 일자리 참여 현황, 지역기반의 일자리사업 현황 등에 대해서 정부정책 자료와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한다. 또한 장애인고용통계(장애인고용기업체조사,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장애인고용 특성을 분석하여 함의를 도출한다.

둘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추진의 일자리 정책 현황과 특성을 분석한다.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정책 현황과 장애인 고용 및 일자리사업과 유사한 사업(자활사업,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등을 분석하여, 유사사업의 정책을 통한 장애인 고용 및 일자리사업에 함의를 도출한다.

셋째, 장애인 고용특성과 정부의 일자리 지원 사업 현황을 종합하여, 지역 중심의 장애인 고용 및 지원 방향, 장애인일자리 창출방향, 지역 중심의 장애인 고용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수행체계

본 연구의 목적인 지역 중심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기 위한 연구수행체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Ⅰ-1] 연구수행체계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Ⅱ. 우리나라 고용 및 일자리 정책 현황

1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제도

우리나라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5대 국정목표를 두고 있으며, 그 중에 고용 및 일자리와 관련된 목표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 부문에서 첫 번째 전략을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으로 일자리정책을 최우선으로 정하고 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 부문의 하위전략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이 있다.

그 중에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일자리 경제는 첫 번째 하위전략인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로써, 이 전략의 추진과제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고용노동부),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보건복지부),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고용노동부),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고용노동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기획재정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금융위원회),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금융위원회)가 제시되어 있다.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4개의 부처가 협업하여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일자리 확대가 가계소득 증가시키고, 소득증대가 소비확대 및 내수 활성화를 유도시킴으로써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것이다[3].

문제인정부의 일자리정책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 · 민간 분야 일자리 창출, 일자리의 질 개선,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다.

일자리 인프라 구축하기 위해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일자리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련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국내 일자리 상황을 ① 일자리 창출 기반 지속적인 약화, ② 근로환경 열악 및 노종시장의 이중구조 등의 고용의 질 저하, ③ 고용 악화 실태로 인한 취업애로 및 소득양극화 심화, ④ 4차 산업혁명 등을 대비한 패러다임

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일자리 정책' 2019.9.28. 참조

변화 필요 등으로 보았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2017.5.16.일에 설치하고,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2017.10)'을 수립 · 발표하고 관련 재정사업과 정책을 시행하였다. 제1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한 후 '사람 중심 일자리 경제'를 실천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이 로드맵의 기본 방향은 4차 산업혁명, 저출산 · 고령화 등 미래변화에 선제적 대비, 상생형 생태계와 혁신성장기반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일자리 질 제고, 청년 · 여성 · 신중년 등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중점을 두었다.

최근까지 제11차 일자리 위원회(2019.6.4.) 개최가 되었고, 위원회에서 발표한 정책은 공공고용서비스 발전 방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직업능력개발 혁신 방안, 사람투자 10대과제, 지역일자리 사업의 지역자율성 강화방안,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방안, 사회서비스 원 설립 운영방안,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 지식재산 기반 민간 일자리 창출 대책, 소프트웨어 일자리 창출 전략, 바이오헬스 일자리 창출계획, 뿌리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방안,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창업 붐 조성방안,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해외 지역전문가 양성 방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일자리 통계 개선방안,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과학기술 · ICT 기반 일자리 창출방안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가 되었다.

특히 제9차 일자리 위원회에서 "지역일자리 사업의 지역자율성 강화방안" 안건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는데,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하여 지역맞춤형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안건이다. 지역일자리 사업의 지역자율성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① 지역기획형 일자리 사업 확대 및 신설, ② 기존 지역일자리사업 자율성 확대, ③ 지역일자리 사업 인프라 강화 등 3가지의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지역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Ⅱ-1〉 지역일자리사업의 지역자율성 강화방안 주요 내용

주요방향	사업내용	대상	예산	부처
1) 지역기획형 일자리 사업 확대 및 신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확대	-지자체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취·창업을 지원하는 사업	2,6만명	2,086억원	행안부
지역기획형 일자리사업 신설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2,500명	80억원	고용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119명	11억원	복지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 신유형 신설	-	1,040억원	고용부
2) 기존 지역일자리사업 자율성 확대				
주요 대규모 사업의 탄력적 운영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재량권 강화, 사업기간 유연화 등 지자체 역할 확대	61만명	8,220억원	복지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대상 인건비 지원제한 등 운영상 제약요인 완화	-	-	고용부
지역별 수요 맞춤형 사업대상자 선정	-지역공동체 일자리-신규사업심사시 심사 최소화	1만명	331억원	행안부
	-산림재해 일자리	1.3만명	909억원	산림청
	-산림서비스 도우미	718명	93억원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	1,378명	174억원	산림청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374명	76억원	해수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2,740명	378억원	문체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효적 운영 강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2만명	1,950억원	복지부
	-산불예방진화대	1만명	576억원	산림청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3천명	59억원	문체부
3) 지역일자리 사업 인프라 강화				
지역일자리 사업의 체계적 관리	-지역일자리 대상자 선발 관리 '일모아시스템' 활용 -지역일자리 사업 분류 및 관리 -중앙부처 유사 및 중복 사업 정비	-	-	고용부
	-성과관리 지원	-	-	행안부, 고용부, 일자리 위원회
	*컨설팅 및 교육 지원 강화 -지자체 일자리사업 컨설팅 제공 -지역일자리사업담당자교육 실시 -부처별 지역특화모델 발굴 및 확산	-	-	고용부 및 사업부처
	* 지역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 -(지역단위)지자체·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고용청, 지방중기청 등), 지자체 일자리센터와 고용복지+센터 -(중앙단위) 행안부 주관, 관계부처 「지역일자리사업 자율성 확대 TF」구성	-	-	행안부

출처 : 지역일자리사업의 지역자율성 강화방안 회의자료(2018.12.14.)

그리고 정부에서는 취업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4]'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고용안정을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를 포함하는 사업은 중앙부처 사업, 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자치단체 사업으로 관리한다. 일자리 사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을 준용하여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1) 일 경험 · 소득보조를 위한 한시적 직접일자리, 2) 구직자 · 재직자 직업훈련, 3) 취업알선 고용서비스, 4) 채용 · 고용안정 장려금, 5) 창업 지원, 6)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이 있다. 이 사업은 취업취약계층[5]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키기 위해 한시적 일자리, 일 경험을 제공하되 정부가 임금의 대부분을 지원한다.

아래의 표는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의 현황이다. 공공업무지원형, 소득보조형, 인턴형, 사회서비스형, 사회봉사복지형으로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행정안전부, 특허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의 정부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다.

〈표 Ⅱ-2〉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

사업유형	소관부처	해당사업
공공업무 지원형	고용부	업종별재해예방(안전보건지킴이)
	문체부	문화예술교육활성화(학교예술강사, 복지기관예술강사),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재해일자리
	행안부	국가기록물정리,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소득보조형	복지부	자활근로사업,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재능활동형 외)
	산림청	숲가꾸기
	특허청	국내지식재산권보호활동지원강화
	행안부	지역공동체일자리
	환경부	상수원관리지역관리,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환경지킴이

4) 고용노동부(2019). 2019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고용노동부.

5) 취업취약계층은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북한 이탈주민, ⑥ 위기청소년, ⑦ 여성가장, ⑧ 성매매 피해자, 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⑬ 만 55세 이상 고령자들이다.

사업유형	소관부처	해당사업
인턴형	과기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지원
	농림부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 농식품수출다변화(농식품청년해외개척단)
	농진청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문체부	박물관진흥지원,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육성
	복지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및일자리운영(지역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
	산림청	국제산림협력
	여가부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새일여성인턴)
	해수부	수산물해외시장개척사업(청년수출개척단)
	행안부	공공기관빅데이터활용청년인턴운영(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역정착지원형, 민간취업연계형)
사회 서비스형	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노인돌봄종합)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노인돌봄기본) 장애아동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사회봉사 복지형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고용부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재능활동형)
	문체부	전통스토리계승및활용(이야기할머니), 문화관광해설사육성

출처 : 고용노동부(2019). 2019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고용노동부.

다음은 일자리 정책 및 고용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는 주요 정부부처를 중점으로 일자리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고용노동부

우리나라 고용정책의 대표적인 중앙부처는 고용노동부이며, 고용 및 일자리 정책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의 주요정책은, 노동 수요 측면에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도모하고, 노동 공급 측면에서 장애인 역량강화 및 격차 해소를 위해 맞춤형 고용서비스 인트라를 구축하는 내용의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2018~2022)를 수립하였다.

이 기본계획에서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노동자 지원을 통한 격차 해소, 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 체계적인 장애인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3가지 목표를 두었다. 첫째,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대기업 의무고용 이행 강화, 공공부문 의무고용 이행 실효성 확보, 표준사업장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등급제 폐지됨에 따라 직업적 장애기준 마련이다. 둘째, 장애인노동자 지원을 통한 격차 해소를 위해서 장애인노동자 직접 지원, 장애인고용사업장 지원 확대, 셋째,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해, 중증장애인 지원 확대, 여성 · 장년 · 발달 장애인의 취업 지원 확대, 재학 · 청년 장애인의 취업-직업역량 강화, 장애유형별 맞춤 지원 강화, 넷째, 체계적인 장애인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장애인 직업훈련 체계 혁신, 민간취업알선기관 활용 확대, 장애인노동자 지원센터,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현장 안착, 사업주 단체 협력체계 구축, 장애인 고용 행정통계 활용강화이다.

또한 2019년 정책추진 방향을 '노동자존중사회 실현과 차별없는 일터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성별 ·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미래 노동시장에 대비하는 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이라는 5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표 Ⅱ-3〉 고용 및 일자리 관련 국정과제(고용노동부)

전략	과제	세부과제
더불어 잘사는 경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주관)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주관)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주관)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사회적경제 활성화(협조)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협조)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모두가 누리는 복지국가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협조)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협조)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협조)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노동존중 사회 실현(주관)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주관)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휴식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주관)

고용노동부에서는 분야별 정책으로 취업지원, 일자리창출, 고용안전망, 직업능력개발, 근로조건개선, 노동시간단축, 안심일터, 노사관계를 제시하고 있다[6].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정책 중 장애인 고용 및 일자리와 직접 관계가 되는 취업지원, 일자리창출, 직업능력개발에 초점을 두고 정리하였다.

우선 취업지원 정책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을 타이틀로 하여, 고용복지+센터,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계층 취업촉진원,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복지+센터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및 복지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용센터가 이미 있거나 고용센터를 신설하는 기초자치단체를 단위로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과 복지가 결합된 기본형과 문화 등을 아우르는 확장형으로 운영된다.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에는 취업알선서비스, 채용지원서비스, 직업진로지도 서비스 등이 있다. 취업알선 서비스는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각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채용지원서비스는 동행면접, 채용대행,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과 같은 사업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 일반구직자 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직업진로지도 서비스는 구직자, 학생 등이 자신의 희망, 관심, 자격 및 능력을 파악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 훈련, 직업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취약계층취업촉진지원은 노숙인, 건설인력,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및 일반구직자를 대상으로 민간기관을 활용하여 공공·민간 고용서비스 간의 상호 연계 및 보완을 통해 취업알선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취업송공패키지는 참여자 특성진단(프로파일링)을 토대로 최장 1년간 상담, 진단, 경로설정(1단계) - 훈련, 인턴 등 직업능력증진(2단계) - 취업알선(3단계)을 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취업성공패키지 Ⅰ은 기초생활 수급자, 차차상위(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연간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 영세자영업자신설, 기타 특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성공패키지 Ⅱ는 (청년층) 18~34세(소득 무관), (중장년층)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35~69세 가구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두 번째 일자리 창출지원에는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6)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사회적기업, 지역고용 등이 포함된다.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은 개인 대상이 아닌 사업장(주) 대상의 지원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한다. 사회적기업 지원에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인건비(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포함) 및 사업개발비, 경영컨설팅, 모태펀드 등 직·간접적인 인프라 확충 지원을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인증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지방자치단체 및 각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다. 지역고용에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가 있으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고용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를 창출, 일자리 질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일반 지역산업맞춤형 지원사업, 지역혁신프로젝트,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기숙사,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 구조조정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수립하여 공표하게 하는 것으로 공시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 인센티브 제공 및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세 번째 직업능력개발 분야에는 실업자 지원과 재직자 지원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실업자 지원에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등이 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은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실업자, 고3학년에 재학중인 상급학교 비진학자, 대학(전문대포함) 최종학년 재학생 대상으로 대학원 등에 진학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가의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 등의 산업분야에서 부족하거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 양성、공급 및 실업문제 해소하는 지원제도이다.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은 급격한 산업구조 개편 및 신산업분야의 전문 기술인력 수요 증가 등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신기술·고숙련 인력 양성·공급을 위한 융합형 고급훈련 과정이다. 내일배움카드는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실업자에게 취·창업을 위해 직무수행능력 습득이 필요한 실업자 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재)취·창업 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3주 이상의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및 전직실업자에게 장기가 직업

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대부지원을 통해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직자를 위한 서비스는 내일배움카드가 있으며, 이는 실업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의 대상자와 달리, 중소기업 근로자,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이직 예정의 근로자, 무급휴직·휴업자, 45세 이상 대규모기업 근로자, 3년간 사업주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이다.

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일자리 확충 및 지원을 중점을 두고 있다. 2019년도 보건복지부의 업무계획에 의하면 보육 · 돌봄 · 여가 등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고 방문건강관리 등 서비스 확충, 의료 질 · 안전 제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으로 보건의료일자리를 늘리고자 하고 있다. 또한 2019년 4월부터 대구, 경남, 경기, 서울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시범운영하고 일자리 공공성과 질을 확보하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일을 통한 적극적인 자립을 위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기업을 지원, 생업자금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산형성지원(희망 · 내일키움통장)과 자활수익금 인센티브의 활용, 자활프로세스를 개편하여 근로능력 평가를 개선하고 신표준화사업을 발굴하며, 자활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자활인력 역량 강화, 성과평가 시스템 도입, 지역자원 연계 강화,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한다.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원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지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등을 지원하고 있다.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지역별로 상이한 고용 및 취업 여건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세부사업을 직접 설계 · 시행하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며, 행정안전부는 기본적인 사업유형과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청년 실업을 해결하고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써

2018년도에는 1만개를 목표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였고 2021년까지 7만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의 만 39세 이하 청년이 참여가능하다. 2018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굴하여 선정된 세부사업은 372개이며, 3가지 유형(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7])으로 나누어서 만 19세~만39세의 미취업 청년에게 선택권을 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유형별로 1~3년까지 사업장 또는 창업공간에서 근무하고, 급여 및 공간임대료 등의 간접비를 지원한다. 금전적인 지원 외에 직무 및 구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무교육 및 컨설팅 지원, 청년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청년 네트워킹 지원, 사업 중간·상시 운영점검과 청년 참여자 상담 및 고충해결을 위한 전담매니저 지원, 취·창업 활동을 위한 자격증취득 지원 등 청년들이 사업 도중이나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7) 일자리 사업의 3가지 유형은 젊은 일손이 부족한 지역기업에 청년을 매칭하여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1유형(지역정착지원형), 직접 창업을 하거나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지역인재로 성장하는 2유형(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문화, 복지, 안전 등 지역사회서비스 등의 일 경험과 경력 형성으로 향후 민간 취·창업으로 연계하는 3유형(민간취업연계형)으로 구성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과 제도

지방정부의 일자리정책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실효적 지역일자리 창출'과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서 하향식 사업실행 방식이 아닌 현장 중심신의 상향식 소통을 전환하여 지자체의 일자리 정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유형과 기준을 최소한으로 제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황 및 실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사업을 직접 설계·시행하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을 시행하였다. 이는 중앙정부 주도의 일자리사업은 상이한 지역 고용현황 및 여건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발단이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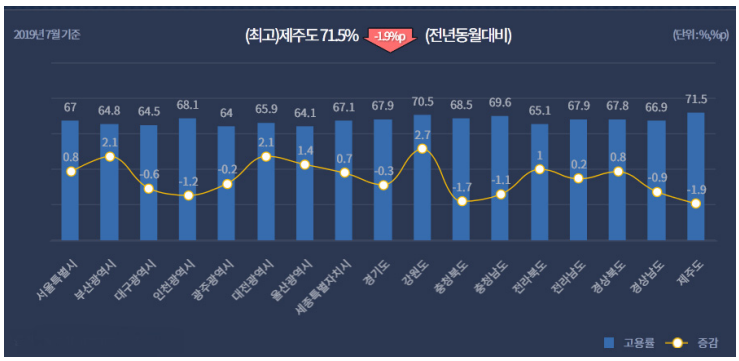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제주도가 71.5%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강원도 70.5%, 충청남도 69.6%, 충청북도 68.9%, 인천광역시 68.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작년 동월 대비 증감이 강원도가 2.7%로 가장 높은 반면, 제주도가 -1.9%로 가장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제주도 8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락하였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9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지역별 인구 특성을 이해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일자리 정책[8]을 어떻게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본 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9]

서울광역시의 일자리 현황은 구조적 특성상 민간분야 일자리의 지속적 창출 한계가 있고, 노인인구 증가, 일자리 미스매치 등으로 실업률 악화, 일자리 창출 기반 시설의 기역간 격차로 지역경제 불균형 심화, 비정규직·여성 등 노동 취약계층 근로조건 불평등과 고용불단 상존한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2016년 이후 인구

8)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일자리 사업 내용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따른 일자리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을 주로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9) 서울광역시(2018.12)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서울특별시 민선8기 일자리 종합계획(2019~2022) 요약 정리



[그림 Ⅱ-1] 지역별 고용률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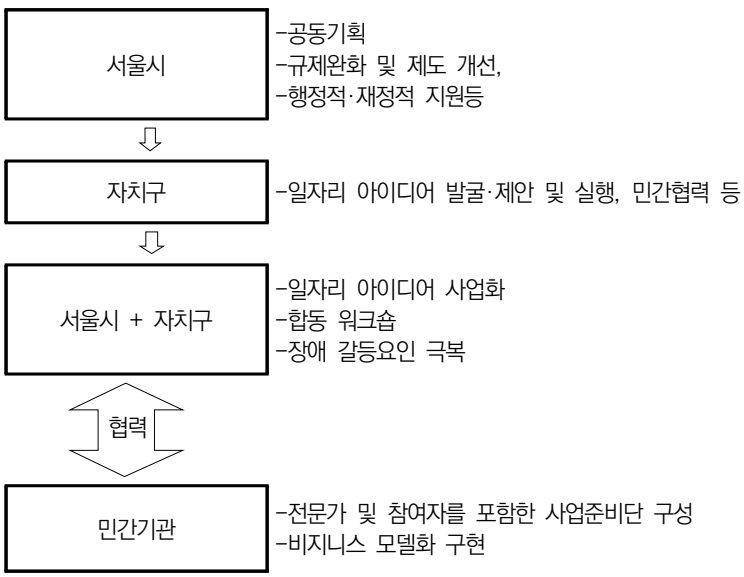
가 감소하고 있고, 2018년 서울이 청년층만 유일하게 전입, 타 연령대는 전출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체가 도소매업 28.1%, 음식숙박업 15.6%, 운수업 11.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2016 통계청 사업체조사).

이러한 서울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4개 전략 14개 추진과제를 수립하였고, 고용 분야별 일자리 목표로써 ① 미래형 스마트산업 육성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 ② 민간 일자리 연계강화를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③ 일자리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공일자리 제공, ④ 지역사회 주도 지역특화형 일자리 생태계 조성 등 4개 분야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표 Ⅱ-4〉 2019년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분야별	중점 추진내용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뉴딜일자리 민간연계 강화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정부협력형 일자리 사업 추진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	-청년-기업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 -여성일자리 창출 및 역량 강화 -복지 수혜 대상자 맞춤형 일자리 제공(어르신, 장애인, 저소득)
미래형 스마트산업 육성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	-혁신성장과 글로벌 창업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도시재생 캠퍼스타운 등 지역거점 기반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인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시정분야별 주요사업 민간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고용기회 확대 -시-구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성과 제고 -청년 취업지원 공간 확충 및 서비스 확대

서울시는 2018년 고용율(59.6%)이 전년도(60.2%) 대비 0.6%p 하락하고 취업자가 72천명 감소하는 등 고용상황이 심각해지고 있고, 자치구 사업이 정부·시로부터 일방적 시달받는 하향식 구조로, 사회복지, 고용서비스에 집중되며, 지역의 특성 및 일자리 수요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2017년도에 서울시장과 25개 구청장 일자리창출 공동선언 합의 및 서명한 이후 일자리 창출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일자리 기획가'를 구성하였고, 일자리사업을 공모하여 실시하였다. 2017년도에는 22개 자치구, 신규 52개 사업 수행되었고, 2018년 23개 자치구, 77개 신규사업 발굴, 2019년 25개 자치구, 34개 신규, 29개 계속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11개 신규사업을 발굴하였다. 그리고 대상별고 청년 810개, 여성 211개, 신중년 698개, 어르신 59개, 장애인 27개, 일반시민 112개, 총 1,908개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보였다.



[그림 Ⅱ-2] 서울시-자치구 추진체계 및 역할

서울특별시의 일자리 서비스는 '청년 일자리', '여성 일자리', '중장년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노숙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그 외 서울시 노동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일자리는 일자리지원사업, 직업재활시설지원, 연령대별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Ⅱ-5〉 서울시 일자리사업 주요내용

주대상	사업명	내용
청년	청년일자리	- 청년 구직정보 제공, - 서울형 강소기업 발굴 및 육성하여 매칭 - 공공서비스확대 및 공무원, 산하기관 인력 선발 확대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산업단지 조성 - 청년아르바이트 보호(청년권리보호센터, 청년 권리지킴이 운영)
	일자리카페	- 개인학습공간 및 스터디룸 제공 - 서울 전역 100개 조성 -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운영
	취업날개서비스	- 대상: 고교졸업예정자~만34세 - 내용: 면접용 정장 무료대여
	뉴딜일자리	- 서울형 뉴딜일자리(경제·문화·복지·환경·교육 등 250개 종류 일자리 5,450명 선발) - 내용: 월 임금 215만원, 시급 10,151원 최대 23개월 일경험 기회제공 풀타임, 파트타임 선택 연간 200시간 취업교육 자격증 응시비용 지원 전문기관을 통한 취업상담 및 지원
	멘토스쿨	- 서울시 찾아가는 희망취업 멘토스쿨 - 대상: 특성화고교 및 대학생 등 취업준비생 내용: 진로설계, 직무설계, 취업역량강화 컨설팅, 희망취업 매칭(취업연결 지원)
여성	청년원더플러스	대상: 취업취약계층(예체능계역 전공자), 특성화고, 대학교 여학생 내용: 경력 관리 교육, 예체능계 교육 매뉴얼 개발 및 시범교육 운영
	오프라인 공예마켓	- 대상: 서울여성공예창업소전 수상자, 공예학과 학생, 공예창업대전 수상자 등 - 내용: 내·외국인에게 여성공예품 홍보 및 교류
	온라인 여성 공예샵	- 대상: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소전 수상자 등 - 내용: 온라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채널 확보 위한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샵 내(seoulshop.kr) 플랫폼 운영, 쇼핑몰 구축 운영을 위한 교육 지원 및 제품사진 촬영 지원등
	맞춤형 성장지원	- 수상한 그녀들의 성장777 프로젝트 운영(공예사업)

주대상	사업명	내용
	직장맘지원센터	- 서울시 거주 또는 서울소재 직장에 재직중인 직장맘 대상, 공인노무사가 종합상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 여성 인턴십 프로그램, 직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일자리부르릉서비스	- 전문직업상담사와 취업설계사가 컨설티(직업적성진단, 직업교육프로그램 안내 및 상담, 취업상담 및 개인별 취업준비 컨설팅)
	여성창업플라자	- 공예·대자인 업종 육성, 멘토링서비스 제공
	여성창업보육센터	- 여성(예비)창업자에게 공간 및 시설, 정보, 교육, 컨설팅 제공등 보육센터 입주를 통해 사업 성장 지원함.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 창업공간 제공 및 창업보육, 마케팅, 판로 등 체계적인 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일가족 양립지원센터	- 인식개선 및 문화조성 캠페인, 기업컨설팅, 연구등
	여성인력개발기관	- 연성인력개발기관 총괄 - 여성발전센터(5개소),여성인력개발센터 (18개소)
중장년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 만 50세~67세 서울시 거주자, 소액의 활동비 지원받고 사회활동(월 57시간 이내) 참여하는 사회공헌형 일자리
어르신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공익활동 수당 지급 - 공동작업 등 사업단 참여시 인건비 일부 지원
	인력파견 및 인건비 지급	- 관리사무, 공공/전문직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기능원, 생산·제조, 단순노무 등 수요처에 인력 파견 -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취업알선상담사업(25개소) - 어르신취업훈련센터(1개소)
노숙인	인력풀구축 맞춤형 일자리 지원 공동작업장 지원	- 인력풀 구축을 통해 대형민간기업 협력관계 확대 - 특별자활사업(장애인, 질환자 등 근로능력미약 노숙인 대상), 보호시설 및 주변 청소등 일자리제공 - 일자리 갖기 사업(근로능력 있는 노숙인대상), 공원청소, 장애인작업장보조, 사무보조 등 민간취업 전 단계의 사업 - 공동작업장 확대(2017년 기준 16개소-전년대비 55명 증가)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직업재활시설 지원	-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보호작업장, - 커리어플러스센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장애학생지원사업(10대) - 사회초년생 발달장애인 인턴십(20대) - 장애인 바리스타 양성과정(20대) - 마트보안요원 양성과정(20~40대) - 기록물 등 관리보조양성과정(20- 40대) - 택시운전기사 양성과정(40~60대)
기타	생활임금제 도입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생활임금(안)을 심의후 고시 - 2017년도 생활임금(시급 8,197원/일급 65,576원/월급 1,713,173원)

주대상	사업명	내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상시, 지속 업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임금체불, 차별대우, 부당해고 등 권익을 침해당한 근로자에게 상담 및 해결해주는 제도
	노동권리보호관 제도	25명의 변호사, 15명의 노무사 등 노동전문가로 구성하여 상담부터 진정, 청구, 행정소송 대행 등 노동권익 침해당한 서울시민 무료 법적 권리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
	서울노동아카데미	노동교육을 희망하는 10인 이상 단체 대상으로 강의 진행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서울형 감정노동보호체계 구축(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설치), 컨설팅 및 문제조사, 개선 권 고 등
	마을노무사제도	공인노무사 25명으로 구성된 마을노무사가 소규모사업장에 방문컨설팅을 실시, 취약노동자의 근로조건 침해 예방

2) 부산광역시 일자리 정책[10)]

부산광역시 일자리 여건은 서비스업 중심(70%이상)으로 산업구조가 취약하고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청년층 순유출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생산기능 인구 감소,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및 근로여건 열악, 경력단절 여성과 신중년 고용률 저조, 부산, 울산, 경남 광역경제권 동반 경기 침체로 고용률 하락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였고, 이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3개 전략 15개의 과제를 수립하였다.

2019년도 부산광역시의 일자리정책은 총 1,199개 사업, 184,991개 일자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중에 일자리 신규 창출 73,629개, 고용 유지 92,275개, 고용지원 19,087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자리 사업은 공공영역에서 직접일자리 사업(559개, 기타(공무원 등) 17개)이 있고, 민간영역에서는 직업훈련(82개), 고용서비스(43개), 고용장려금(5개), 창업지원 (34개), 일자리인프라(106개), 기업유치(9개), 위탁관리용역 등(344개)의 사업을 실시하며, 2019년 일자리 유형별로 직업일자리 559개 사업, 공무원 등 공공기관 일자리채용 17개 사업, 직업훈련, 82개 사업, 고용서비스 43개 사업, 고용장려금 5개 사업, 창업지원 34개 사업, 기타(일자리 인프라) 106개 사업, 기타(기업유치) 9개 사업, 기타(위탁) 344개 사업을 수행한다.

10) 부산광역시(2018.12.)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산광역시 민선7기 일자리로드맵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요약정리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odi.or.kr

〈표 Ⅱ-6〉 부산광역시 일자리 사업유형

구분	분류		사업명	목표 (신규창출)
사업 유형	공공	직접일자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559개	80,245 (11,527)
		기타 (공무원등채용)	부산시, 소방본부, 이전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신규채용 등 17개	1,508 (1,508)
	민간	직업훈련	청장년실업해소 맞춤훈련, 신발산업인력양성사업,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창출 등 82개	22,254 (1,977)
		고용서비스	부산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대학일자리지원센터 지원,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43개	40,352 (40,347)
		고용장려금	부산청춘드림카, 청년행복잡기 희망드림단, 해운항만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 등 5개	319 (82)
		창업지원	창업보육센터 지원, CENTAP 운영, 청년창업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 대학 산학연 연구단지 조성사업 등 34개	1,693 (1,042)
		기타 (일자리인프라)	지역주력산업 육성, 클라우드 산업 육성,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사업 에코델타시티조성,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106개	1,081 (851)
		기타 (기업유치)	국내기업 유치,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유치 등 9개	4,735 (4,470)
		기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청사 위탁관리용역, 공영주차장 관리용역 위탁 등 344개	29,600 (10,817)

부산광역시는 일자리사업을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청년일자리 290개 사업, 여성일자리 53개 사업, 중·장년 일자리 363개, 노인 일자리 23개, 장애인 일자리 11개, 저소득 일자리 11개, 일반시민 일자리 448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 Ⅱ-7〉 2019년 부산광역시 일자리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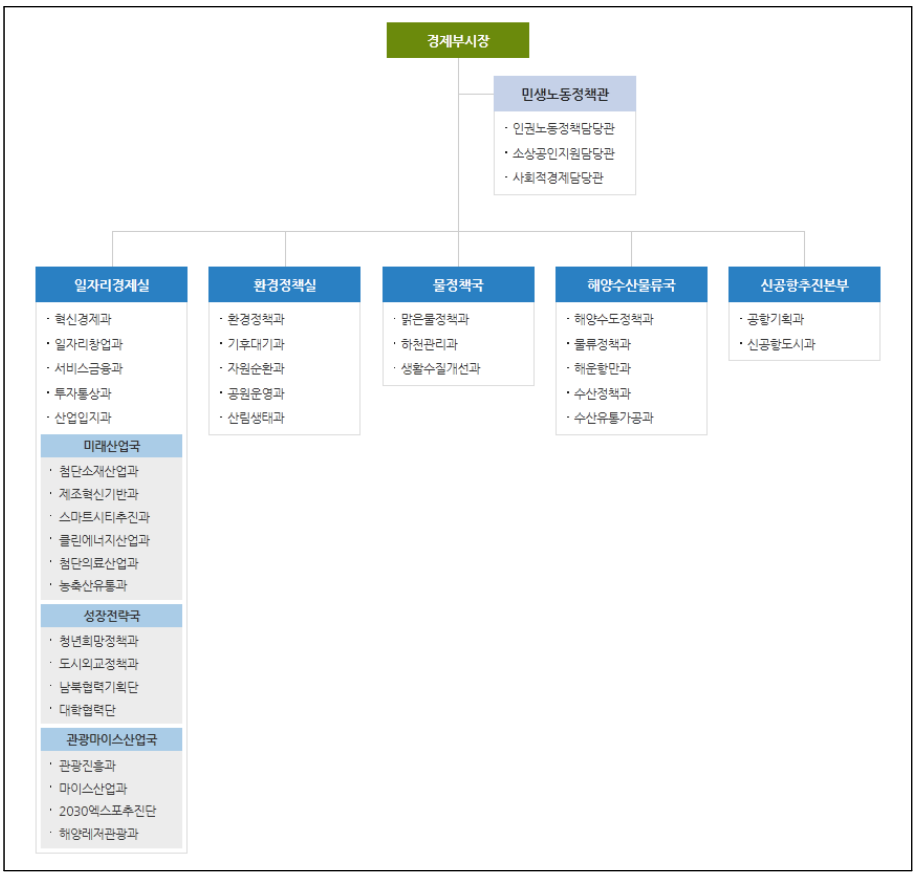
구분	분류	사업명(1,199개 사업)
정책 대상	청 년 일자리사업	청년두드림센터, 부산해외취업 지원사업, 대학일자리지원센터, 부산청춘드림카, 마리나전문인력 양성 등 290개
	여 성 일자리사업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역적합형 여성인력양성사업,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 훈련사업 등 53개
	중·장·년 일자리사업	50플러스 생애재설계 대학운영,, 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 노숙인 희망자활사업단 운영, 부산에너지홈닥터 운영사업 등 363개
	노 인 일자리사업	도시철도보안관 운영, 시립박물관 청소용역, 일손부족농가 어르신 일손지원, 노인일자리사업 등 23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취업지원 민관협력, 장애인 공동작업장 운영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등 11개
	저소득 일자리 사업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저소득자활 근로사업,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등 11개
	일반시민 일자리 사업	도시재생뉴딜 사업,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등 448개

부산광역시의 일자리 정책의 재원은 부산광역시의 자체예산이 42.7%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았고, 국비 37.7%, 기타 19.6% 순이다.

〈표 Ⅱ-8〉 2019년 부산광역시의 일자리 정책 예산

예산 재원(억원)			
계	국비	시비	기타(민자)
22,013 (100.0%)	8,299 (37.7%)	9,399 (42.7%)	4,315 (19.6%)

부산시의 일자리정책을 담당하는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일자리경제실을 중심으로 그 산하 혁신경제과, 일자리 창업과, 서비스금융과, 투자통상과, 산업입지과 등 5개의 과, 미래산업국, 성장전략국, 관광마이스산업국 등 3개의 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Ⅱ-3] 부산광역시 일자리정책 조직도

부산시는 특히 6개 추진전략, 18개의 주요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2019년 장애인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11]'을 발표하였다.

부산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행정안정부의 공모로 추진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청년인턴 및 현장매니저 지원 사업'이 국·시비 매칭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하여, 장애인고용 친화 기업을 발굴하고 직무 개발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발굴하는데 중점을 둔다.

11)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의 부산소식 http://www.busan.go.kr/nbtnews/1360669 2019.9.5. 접속 내용 요약 정리한 것임

또한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3.4%)와 부산시 조례상 의무고용율(5%)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대상으로 '직무분석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장애인 민간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채용박람회,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를 지원한다.

4차산업 분야에서의 새로운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일환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약하여 올해부터 운영되는 '게임물 모니터링단'은 장애인이 50% 이상 채용하기로 하였다. 장애인 one-stop 서비스 제공, 장애인 직업재활과 소득증대 지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네일케어 사업을 비롯하여 장애인 맞춤형 피트니스 전문가 양성사업, 장애인 일자리 창출 포럼 개최 등 장애인 인식개선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시책도 함께 추진한다.

3) 인천광역시 일자리 정책[12)]

인천광역시는 청년 · 중장년 인구 비중이 전국대비(청년 19.5%/전국 18.9%, 60세이상 17.8%/전국 20.6%) 높고 60세 이상은 낮은 구성비를 가지고 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17년부터 인구가 유출되고 있고 노인 인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인천지역에 산업단지가 있어 고용 및 취업, 생산을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산업단지의 수출비중이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한 수준이며, 낮은 R&D 투자가 낮은 생산성 및 산업발전의 저조 실태를 보이고 있다. 해운 및 항만이, 세계 간선 항로상에 위치해 있고 대형선박 입출항에 필요한 수심 확보로 동북아시아 물류거점기지로서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인천공항에 59개국 188개 도시와 연결하는 항공운송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으며, 기후변화대응 국제기구 GCF 유치한 도시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집적화 · 고도화 기반을 조성하는 등의 성과를 가지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일자리 시스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행복한 일자리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4대분야 14개 추진전략, 80개 실천과제를 수립하여 고용률 69.3%, 일자리 수 134,935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12) 인천광역시(2019.3.). 민선7기 일자리정책 로드맵 이행을 위한 2019년 일자리대책 추진계획 요약 정리

〈표 Ⅱ-9〉 2019년 인천광역시 일자리정책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정책분야	추진전략	실천과제	추진부서
일자리 시스템 혁신	일자리 거버넌스 활성화	-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운영, 시군구 상생협력 일자리 사업 추진	일자리경제과
	데이터 기반의 열린 일자리 행정	- 일자리 중심의 시정운영체계 확립, 인천형 일자리 지표 및 통계 구축, 일자리 정보 통합(ON-OFF) 제공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인천형 혁신성장 산업 육성	-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유치 확대, IFEZ서비스산업 허브조성	투자유치과 경제자유구역청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기반센터 구축	신성장산업과 산업진흥과
		- 바이오융합산업기술단지 조성, 로봇분야 창업 및 일자리 지원,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지원, 뷰티산업 육성	신성장산업과
		- 녹색기후산업 생태계 조성	녹색기후과
		- 항만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항만과
	산업을 연계한 인천공항경제권 구축	- 인천 공항경제권 추진위원회 구성, 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 및 운영, 항공정비특화단지 조성, 인천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인천공항 연계 복합단지 조성, 미래형 무인항공기(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 인천형 항공우주연구개발 체계 구축, 인천국제공항 연계 대북교류 공항경제기반 조성	항공과
	문화관광산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마이스산업과
		- 문화콘텐츠산업 집중 육성	문화콘텐츠과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관광진흥과
		-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과 문화재과
		- 남북문화예술교류 기반 조성	문화예술과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 구축	-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	청년정책과
		-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창업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 인천'예비디자이너 창업 랩(LAB)실' 운영	산업진흥과
		- 창업성장자금 조성	청년정책과
		- 글로벌스타트업캠퍼스 운영지원	신성장산업과
		- 스타트업벤처폴리스 조성사업	스마트시티과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지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원 지원, 글로벌 마케팅 및 수출 인프라 확충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산업단지 고도화 추진(남동국가산단재생), 중소기업 지식재산 및 디자인 지원강화	산업진흥과

정책분야	추진전략	실천과제	추진부서
		-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산업진흥과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경쟁력 강화	-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원, 소상공인 자립환경 조성,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정책과
맞춤형일자리 지원	대상별 일자리 지원	- 청년일자리 탐색 지원	청년정책과
		- 맞춤형 여성일자리 지원	여성정책과
		- 지속 가능한 어르신 좋은 일자리 창출	노인정책과
		- 신중년 일자리 사업 강화	일자리경제과 노인정책과
		- 취약계층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 제공	장애인복지과 사회적경제과
		-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해당부서
	원도심균형발전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 강화청춘마을사업 추진	일자리경제과
		- 빈집종합관리체계 구축, 운영	주거재생과
		생활 SOC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해당부서
	산업별 맞춤형 일자리지원	- 산학협력 청년희망이음사업, 뿌리산업 평생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산단커뮤티니 불록톡 사업, 강화일자리 잡다 강화산단론칭프로젝트, 일자리 서비스 지원기반 강화, 현장중심의 일자리 지원강화	일자리경제과
	수요자 맞춤형 인력양성	- 수요조사를 통한 인력 미스매치 해소, 인천만의 특화된 산업별 교육과정 운영, 미래 일자리 찾기 청소년 직업체험	
		- 귀농귀촌대학 교육	농업기술센터
		- 시민사이버교육 자격증 과정 운영	인재개발원
행복한 일자리 만들기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반 조상	-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지원 강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성장기반 구축 지원,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마을기업 창업·육성지원, 다같이 행복한 협동조합 활성화	사회적경제과
	고용안정 및 근로여건 개선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생활임금지원대상 확대, 거점별 종합문화복지센터 확대 설치, 노사민정활성화 사업 추진, 산단별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도입, 청년취업지원 산업단지 무빙콜 사업, 기숙가 임대료 지원사업, 외국인 노동자 정주성 제고 및 사회연계망 강화	일자리경제과
		- 청년고용 우수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청년정책과

정책분야	추진전략	실천과제	추진부서
		-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추진	여성정책과
		- 근로여건 개선 및 안전관리	상수도사업본부

인천광역시의 일자리 정책의 재원은 대부분이 민자로 그 비율은 64.2%로 다른 지역에 비해 민자의 비율이 높으며, 시비 20.9%, 국비 13.4%, 군구비 3.4%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Ⅱ-10〉 2019년 인천광역시의 일자리 정책 예산

예산 재원(백만원)				
계	국비	시비	군구비	민자
2,175,832 (100%)	205,784 (13.4%)	455,558 (20.9%)	73,154 (3.4%)	1,396,337 (64.2%)

인천광역시는 일자리위원회가 시장 직속으로 일자리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담당한다.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소관분과 심의 및 논의, 위원회의 안건을 검토를 한 후 일자리위원회에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일자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림 Ⅱ-4] 인천광역시의 일자리정책 추진체계

4) 대구광역시 일자리 정책[13)]

대구광역시는 2018년 기준으로 인구가 매년 0.3%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청년 및 30~40세도 감소하고 있고 신중년 및 고령자는 증가하는 추세로서 대구지역 노동시장의 핵심인력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 되어가고 있다. 대구지역 산업구성(2017년, GRDP)은 서비스업 비중이 72.7%로 높은 편이며, 제조업(21.5%) 및 건설업(5.45) 등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이후, 제조업(부가가치) 중 섬유산업에서 기계·금속으로 전환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73,877개소로 전체 사업체 수의 83.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전체 고용률은 64.2%(전년대비 -0.8%p), 30 ~ 50대 중심으로 감소하였으나, 청년층은 36.3%로 전년대비 1.1%p 증가하였다. 자동차부품 산업 부진 및 급격한 고용·노동환경 정책변화 등으로 30 ~ 50대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청년 생산가능 인구 중 학생비중이 전국대비 높은 편이며, 취업준비생과 구직유보자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증가하였고, 대학 진학률은 높은 편이나, 대졸자 취업률은 낮은 편이다.

대구광역시는 4개 전략 12개 과제를 수립하였고, 고용률 65.1%, 취업자수 1,143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① 대구형 청년 일자리 창출, ②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③ 일자리 안전망 구축, ④ 일자리 중심 시정운영이다. 첫째 대구형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는 산업혁신분야, 기업혁신 분야, 고용혁신 분야 3개의 분야가 있고, 산업혁신 분야는 38개의 사업, 기업혁신분야 14개의 사업, 고용혁신분야는 3개의 사업이 있다. 두번째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전략을 위한 사업으로는 창업 지원, 인력 양성, 취업지원, 3개의 분야가 있고, 창업지원은 13개의 사업, 인력양성 11개 사업, 취업지원 14개 사업, 고용환경 개선 1개 사업이 있다.

〈표 Ⅱ-11〉 2019년 대구광역시 일자리정책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정책분야		추진전략	실천과제
대구형 청년 일자리 창출	산업혁신	5+1 미래신산업육성 및 투자유치 (38개 사업)	- Test Bed, 행정 One-Stop 지원, 투자유치, 초기 시장 진출, 신성장 거점 확보 - 미래형 전기화물차 양산, 로봇산업 육성,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집중 투자, 물산업육성, 대구국가산단 신재생에너지단지 및 수성알파스마트시티 조성

13) 대구광역시(2019. 3.)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2019년 대구광역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요약 정리

정책분야			추진전략	실천과제
	기업혁신		강소기업 성장사다리 및 가업육성 지원(14개 사업)	- 우수기업 성장동력 지원, 중기업 육성 지원, 경제협력권 사업,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강소기업 성장사다리 지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고용혁신		지역특화 모델 및 지역주도형 일자리 발굴(3개 사업)	- 지역혁신 프로젝트,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 대구형 청년보장제 - 주력산업 활성화, 구직 취약계층 지원, (30억원, 일자리 402명) - 중소기업 고용지원, 창업지원, 청년일자리모델 개발 (21개사업 333억원, 일자리 1,403명) - 사업장-청년잇기예스매칭사업(18억원, 일자리 창출 80명)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창업지원		창업 생태계 완비, 구상에서 성공까지 단계별 창업지원 (13개사업)	- 삼성창조캠퍼스(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활성화, 동대구벤처밸리 기업성장센터 건립,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
	고용서비스		-	-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지원, 중소기업 전문인력채용시 인건비 지원,
		인력 양성	지역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공급(11개사업)	-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 기초예술가 양성, 미래산업 엔지니어 양성, 일학습병행제
		취업 지원	지역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공급(14개사업)	일자리지원센터,대학생인턴,청년내일채움,고용촉진지원금
	고용환경 개선		1개사업	고용 친화 대표기업 선정 및 홍보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산단 통근버스 운영
일자리 안전망 구축	복지 일자리		영역별,계층별 중심 복지안전망 (56개사업)	사회적경제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저소득층 일자리, 보건복지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문화서비스 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장애인·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 등)
	중장년 일자리		중장년 일자리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4개사업)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 전문직 퇴직자 중소기업 지원,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 신중년 Biz 컨설팅 일자리 창출 사업
		어르신 일자리	어르신 지역사회 공헌(2개사업)	노인일자리사업,시니어클럽 특성화 사업
		여성 일자리	차별없는 여성 일자리 지원(1개사업)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사업(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쉽, 사후관리)
	공공기관 등 채용		공공기관 채용 및 공공서비스 채용(13개 사업)	이전공공기관·대구시 등 공공기관 신규 채용 및 공공서비스 일자리

대구광역시의 일자리 정책의 예산은 대구광역시 자체 예산이 32.4%이며, 국고보조 예산이 29.1%, 국가직접 17.7%, 기타 19.1%, 군구비 1.7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Ⅱ-12〉 2019년 대구광역시의 일자리 정책 예산

예산 재원(백만원)					
계	국가직접	국고보조	시비	군구비	기타(민자)
1,501,609 (100%)	265,736 (17.7%)	437,338 (29.1%)	485,984 (32.4%)	25,646 (1.7%)	286,905 (19.1%)

5) 대전광역시 일자리 정책[14)]

대전광역시는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15~64세 인구가 2013년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 비율은 12.7%로 전국(14.8%)보다 낮은 수준이나 증가추세에 있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고용율은 2016년을 기점으로 감소한 반면 실업률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가 44.0%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숙박음식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률의 감소와 실업률의 상승은 늘어난 경제활동인구를 적절하게 노동시장에 배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① 경제성장 기반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②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③ 일자리 질 개선, ④ 일자리 추진 체계 강화라는 4가지 전략과 하위 11개 과제를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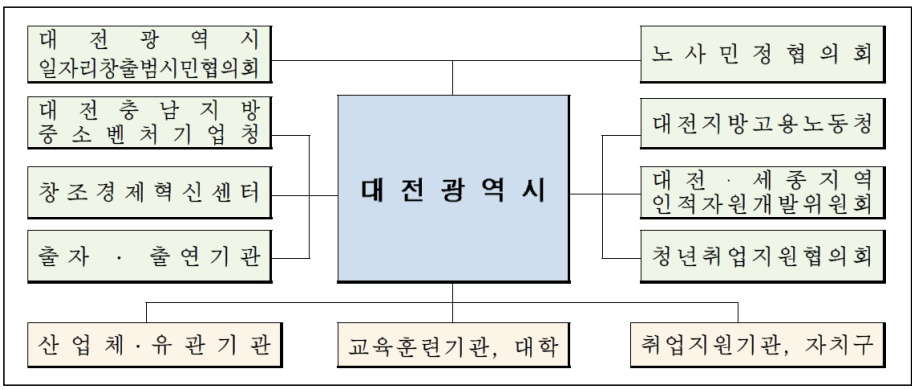
〈표 Ⅱ-13〉 2019년 대전광역시 일자리 정책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정책분야	추진전략	실천과제
지역주도 혁신성장 기반 조성	대덕특구 창조	창업타운 및 창업거리 지원, 기술융복합 플랫폼 구축, 창의혁신공간 조성, 첨단산업단지 조성, 기업가정신 박물관 조성
	나노산업 상용화 촉진	T2B 활용 나노융합 R&BD 촉진사업 지원, 나노종합기술원 선행공정 기술개발 지원,
	대전지역 기반 게임산업 육성	게임콘텐츠 개발 및 시장진출지원, 게임기업 교류 강화

14) 대전광역시(2019.3.)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2019년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요약 정리

정책분야	추진전략	실천과제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	민간 협업 네트워크 확립	창업지원 협의회 운영, 온라인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창업 Meet-up 정례화
	권역별 스타트업 타운 조성	충남대-카이스트 대학혁신창업 스타트업 타운, 구,도청사별관 쇼셜벤처 창업 플랫폼, KT대덕2연구센터 POST-BI 종합지원센터, 중앙로 대전도시공사 사옥 소셜벤처 인큐베이팅센터 운영
	창업기업 성장지원	초기창업투자전용펀드 조성,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개최, 국내외 마케팅 지원
기업성장 지원 일자리 창출	기업성장 지원	연구소기업 성장지원사업 육성, IP 스타기업 육성사업, 생생기업 헤커톤 사업 육성
	기업 투자유치	맞춤형 기업유치단 구성 및 운영
지역정착 청년 일자리 종합지원	대전형 코업(co-up)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	대상생 기업직무체험후 졸업과 동시 취업 연계
	청년 구직활동 지원확대	대전 일자리카페 꿈터 운영, 내손을 잡(Jop)아, 청년취업희망카드,
	안정적 장기근속 지원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통장
	청년인재 맞춤 취업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해외취업지원사업
복지일자리 확충	노인일자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꿈나무 지킴이(초등학교 안전지킴이 활동)
	장애인일자리	장애인복지일자리, 직업재활지원,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여성일자리	노인돌봄서비스, 경로식당 급식도우미,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기타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복지시설 교사(어린이 및 아동 복지시설 대체교사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일자리 확대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사업, 사회공헌활동 지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규 마을기업 발굴 및 기존기업 육성 및 발전 지원
	두드림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등 민간영역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서비스제공
소상공인,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창업성공지원 멘토하우스 운영 및 시설개선자금 지원	
근로환경 조성	대전형 노사상생 모델 '좋은 일터' 조성사업,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취약근로자 복지지원	노란우산공제 정액장려금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	
일자리종합컨설팅	다차원적인 노동시장구조 현장에 대한 전문적 분석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정책 방향 설정 추진	

대전광역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체계는 일자리창출범시민협의회, 노사민정협의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지역고용 및 노동시장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 지역 고용정책, 전략연구를 개발하고 공론화를 수행한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와 출자·출연기관은 일자리시책을 개발하고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며, 대전고용노동청, 대전·충남중소벤처기업청은 대전지역 노동시장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협력 및 지원, 정보를 교류한다. 취업지원기관, 자치구, 청년인력관리센터에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구인구직 알선을 하며 일자리종합박람회 개최를 담당한다. 교육훈련기관 및 대학은 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며 산업체 및 유관기관은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인력을 채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Ⅱ-5] 대전광역시 일자리 정책 추진체계

대전광역시의 일자리 정책의 예산은 대전광역시 자체 예산이 55.7%이며, 국비 34.7%, 기타 9.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Ⅱ-14〉 2019년 대전광역시의 일자리 정책 예산

예산 재원(백만원)			
계	국비	시비	기타
729,667 (100%)	252,938 (34.7%)	406,145 (55.7%)	70,584 (9.6%)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odi.or.kr

6) 울산광역시 일자리 정책[15)]

울산광역시는 2015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유소년 인구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계속 증가해서 인구구성비의 10.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연령은 40.2세로 전국에서 2번째로 젊은 도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은 도매 및 소매업 23.9%로 가장 높고 숙박 및 음식점업 22.1%, 기타 개인서비스업 10.7%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제조업의 비중이 지역내 총생산에서 50%, 건설업이 4% 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률은 59.0%로 전국 60.7%보다 1.7%p 낮은 수준으로 실업률이 4.9%로 전국 3.8%보다 1.1%p 높은 수준이다.

울산광역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① 혁신주도형 일자리사업 육성, ② 일자리 인프라 구축, ③ 대상별 취업 지원, ④ 실 · 퇴직자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 ⑤ 소상공인 지원으로 일자리 유지, ⑥ 문화 · 관광의 서비스 산업화, ⑦ 따뜻한 일자리 사업 추진 등 7개 전략과 19개 과제를 수립하였다.

〈표 Ⅱ-15〉 2019년 울산광역시 일자리 사업 추진과제 및 추진내용

정책분야	추진전략	실천과제
혁신성장 주도형 일자리 창출 (23개사업)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 수소산업 허브도시 구축 - 석유 및 LNG허브 구축
	재조업 혁신 신산업육성	- 3D 프린팅산업 육성 - ICT융합 조선해양 Industry4.OS 사업 추진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 울산 만명 게놈프로젝트 추진 -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헬스산업 R&D 육성
일자리 인프라 구축 (16개사업)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 운영	- 노사대표, 청년, 소상공인 등의 구성(30명) - 지역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활성화, 사회적대화 등
	일자리재단 설립	- '19, 하반기 출범 - 노동·일자리 거버넌스 역할 수행
	창업생태계 조성	- 민간주도 투자기관 유치 및 투자자금 지원펀드 운영 - 창업문화공간 설치
	일자리 창업센터 건립	- 청년 일자리센터 건립 추진 - 창업지원 허브공간 조성
	일자리 지원기관 ·공간 확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운영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확대·운영

15) 울산광역시(2019.3)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2019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 요약 정리

정책분야	추진전략	실천과제
일자리 취약계층 취업지원 (35개사업)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일+행복카드 지원 - 1사 1청년 더 채용하기 릴레이운동 전개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기숙사 임차지원	-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사업추진 -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
	인생 3모작을 위한 중장년 재취업 지원	- 중장년 재취업지원 훈련과정 운영 -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추진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일자리 지원	- 여성새일센터 운영·취업 지원 - 새일 여성 인턴채용 지원사업 추진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지원	-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조선업퇴직자 맞춤형 일자리지원 (5개사업)	조선업 퇴직자 지원	-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 추진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 조선업 실·퇴직자 일자리전환 프로그램 운영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확대 (7개사업)	소상공인 희망프로젝트 확대	-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확대 - 행복드림센터 설치 등 생활밀착형 일자리 확충 - 전통시장 활성화
관광활성화 (27개사업)	문화관광의 서비스산업화 추진	- 울산관광공사 설립 추진 - 크루즈 터미널 및 전용부두 조성 추진 - 태화강 생태관광 활성화
공공근로형 따뜻한 일자리 제공 (30개 사업)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	-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지원 - 노인돌봄사업 추진
	공공근로형 징검다리 일자리사업	- 희망일자리사업 추진 -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울산광역시의 일자리 정책의 예산은 울산광역시 자체 예산이 55.7%이며, 국비 34.7%, 기타 9.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Ⅱ-16〉 2019년 울산광역시의 일자리 정책 예산

예산 재원(백만원)			
계	국비	시비	기타
729,667 (100%)	252,938 (34.7%)	406,145 (55.7%)	70,584 (9.6%)

7)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 정책[16)]

세종특별시는 인구증가율(12.1%)에 비하여, 경제활동인구(16.7%) 및 취업자(17.9%) 증가율이 다소 증가하여 고용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 속도에 따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산업단지 총 14개소가 조성되었으며, 현재 조성중신 산업단지가 4개소가 있고, 조성예정인 산업단지가 1개소가 있다. 이에 청년고용률이 66.2%으로, 청년 실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2.8%p 낮은 수준인 1.9%이다. 평균연령은 36.8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지역으로 청년·중장년의 전입인구가 많은 신개발 지역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숙박 및 음식점업 22.3%, 도·소매업 19.6%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제조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포함), 교육서비스업 순으로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① 시민중심 일자리정책 추진 및 인프라 구축, ② 스마트 산업, 4차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③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확충, ④ 꼭 일하고 싶은 일자리 환경 조성, ⑤ 더불어 잘사는 착한 일자리 구현 등 5개의 전략과 15개의 실천과제를 수립하였다.

〈표 Ⅱ-17〉 2019년 세종특별자치구 일자리 사업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정책분야	추진전략	실천과제
시민중심 일자리정책 추진 및 인프라 구축	시민 중심 일자리위원회 운영	- 일자리위원회 운영
	일구하기 데이 운영 내실화	- 일자리 추진 상황점검(일자리통계 및 고용동향 분석) - 일자리 행사 추진및 일구하기데이(19일) 운영
	세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설립	- 세종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및 소규모 사무국 운영
스마트산업, 4차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추진	- 스마트산업, 주요 유치업종 등 육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지역특화:(주력)첨단수송기기부품, 정밀의료, (연고)머루포도) - 광역협력권:(주관)첨단신소재·부품, (참여)전기·자율차, 바이오헬스
	4차 산업혁명 충청밸리 구축 기반 마련	- 충청권 지자체간 연계를 통해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구축 - IBS(기초과학연구원) 및 대덕특수 출연연과 관내 기업간의 기술이전 시스템 구축 - 3개 기능지구의 SB 플러자를 중심으로 과학벨트 공동자원 활

16) 세종특별자치시(2019.3). 2019년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대책 연찬별 세부계획-2019 시민중권 세종형 일자리 창출계획 요약 정리

정책분야	추진전략	실천과제
		굴 및 추진
수요자맞춤형 일자리확충	창업키움센터로 젊은 일자리 창출	- (사업화지원)입주공간 제공, 시제품 제작, 마케팅, 투자연계 지원 등 - (창업문화 활성화)일반인, 예비창업가 대상 행사·교육 프로그램 진행
	경력단절여성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 SNS활용멀티사무원 과정(20명) - 사회복지행정 실무과정(20명) - 코딩콘텐츠 전문과과정(20명)
	노인일자리 확충 및 사회활동지원	- 48개사업단 운영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정(시니어클럽 등 8개소) 및 사업 발굴
꼭 일하고 싶은 일자리 환경 조성	노사민정 협력으로 일할 맛 나는 일자리 조성	- 노사민정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 지역파트너십 소통강화 - 행복일터 조성사업
	복지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추진	- 단일임금체계 수립, 장기근속휴가제 도입 - 복지포인트 및 특별수당 도입 - 보수교육비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근로자 복지 실현	- 노후 공공건축물철거, 복합개발
더불어 잘사는 착한 일자리 구현	펑사진(청년사회적경제진출) 프로젝트 추진	- 청년근로자 일자리 창출 및 교육 제공 - 관내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제공
	로컬푸드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및 3·4호점 건립 등 인프라 구축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 상품연구시설 구축 - 시민정보공유시설 및 전시·영상 융합서비스 구축

세종특별자치구의 일자리 사업 예산은 시비가 56.3%가 투입이 되고 있었고, 국비 43.6%, 기타 0.1% 순으로, 시비와 국비의 투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Ⅱ-18〉 2019년 세종특별자치구의 일자리 정책 예산

예산 재원(백만원)			
계	국비	시비	기타(민자)
285,007 (100.0%)	124,199 (43.6%)	160,481 (56.3%)	327 (0.1%)

일자리사업은 공공부문에서 200개, 민간부문에서 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

공부문에서는 직업일자리창출이 65개, 직업능력개발훈련 11개, 고용서비스 4개, 고용장려금 6개, 창업지원 8개, 일자리 인프라 구축 14개, 기타 92개 사업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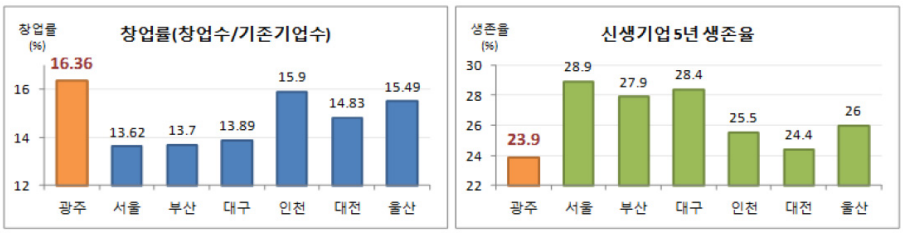
〈표 Ⅱ-19〉 2019년 세종특별자치구의 추진 일자리사업

부 문 (사업수)		사업명
공공 (200개)	직접일자리창출	대학생 행정인턴사업,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사 및 강사 채용,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 장애인 일자리사업(일반형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시간제일자리) 등 65개
	직업능력개발훈련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민간위탁), 농업인 대학 운영지원,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외국인근로자 한글교육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
	고용서비스	새인센터 지정운영, 경력단절여성 취업활성화 지원사업, 권역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국가직접지원) 등 4개 사업
	고용장려금	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지원(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자활근로 장려금, 새일센터 지정운영,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일반, 전문인력), 사회적기업 육성(사회보험료)등 6개사업
	창업지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도농상생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지원사업, 로컬푸드 연계를 통한 도농상생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 육성, 예비마을기업 육성, 세종창업키움센터구축·운영, (창업벤처기업보육공간구축), 창업보육 활성화 지원, 청년창업챌린지랩운영사업(청년창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 등 8개 사업
	일자리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지원센터 유치, 세종형 TP 설립 및 조성, 시니어클럽 운영, 빅데이터 전담부서 신설, 세종형 고용창출우수기업 인증제 운영, 세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설치, 일자리위원회 운영, 일자리 시민 제안, 일자리현장 라운드 테이블 운영 등 14개 사업
	기타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광역협력권산업 육성사업,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기능보강, 조치원읍 제2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연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지방자치회관 건립, 일곱번째 세종축제, 김종서장군 역사테마공원 조성사업,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등 92개 사업
민간 (1개)	기업 등 유치	4차산업 및 첨단산업 중심 우량기업 25개사 유치로 일자리창출 1개

8) 광주광역시 일자리 정책[17)]

광주광역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순 유출 인구수(8,118명) 대비 20대 50.5%, 30대 15.6%, 50대 16.9% 로 경제활동인구의 유출이 많은 편이다.

2018년 기준 광주지역은 고용율이 59.4%이며, 실업율은 5.3%으로, 전국 대비 높은 편에 속한다. 광주지역 산업별 취업자수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8.4% 증가한 반면, 도소매·숙박음식점업 1.7만명 감소하고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0.0% 감소하였다. 광주광역시는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제조업 비중(27%)과 전국 최하위 수준의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8년 1분기 기준으로 제조업 25.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9.2%, 도매 및 소매업 10.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 중에서는 자동차 22.0%, 기계 21.5%, 가전 21.1%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 기업 수는 높으나 5년 생존율이 23.9%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 통계청, 2016 기업생멸행정통계

광주광역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① 인프라 혁신, ② 맞춤형 일자리, ③ 지속가능한 일자리, ④ 일자리 질 개선 등 4개 전략과 10대 과제를 수립하였다.

〈표 Ⅱ-20〉 2019년 광주광역시 일자리 사업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정책분야	추진전략	실천과제
인프라 혁신	시정기획·집행·평가 등 일자리 중심 개편	- 시정 운영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혁신투어' 추진 - 현장중심의 일자리위원회 활성화 추진 - 고용지원 인프라 혁신으로 미스매치 해소

17) 광주광역시 (2019.3.) 2019 일자리 목표 공시제, 광주광역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요약 정리

정책분야	추진전략	실천과제
맞춤형 일자리	청년, 여성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 현주기적 청년일자리 멀티플랜 추진 (청년드림수당 및 청년당당교통카드, 미니취업박람회, 일경험 DREAM, 청년13통장 광주형청년내일채움공재) - 토닥토닥 청년일자리카페 등 청년 미스매치 해소(토닥토닥 카패 운영, 청년나래서비스등 연계, 신광주형내일채움공제) - 빛고을 50+일자리 등 신중년 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 - 찾아가는 '빛고을 소상공인 지킴이' 사업 추진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 노사상생의 광주형일자리 '완성차공장 합작법인'추진 - 공유재산 활용 및 예비창업가 육성을 통한 창년창업 - 1차산업(전남)+4차산업(광주) 연계한 청년 드론방제단 운영 - 첨담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문화콘텐츠 인력양성 - 에어가전 혁신지원센터 구축 등 공기산업 일자리 창출 -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추진 -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마련 - 광주만의 독특한 문화관광콘텐츠 일자리 창출 - 선순환 공동체 기반 사회적경제 일자리 확대 - 사회기반시설 재정투자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일자리 양극화 해소 등 일자리 질 개선	-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 인증 및 지원추진 - 이동근로자 휴식공간인 '달빛쉼터' 확대(2,3,4호점 추가 개설) - 비정규직 남용방지 및 차별없는 일터 조성(노동센터, 비정규직지원센터,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인력확대 운영,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권익실현을 위한 사업 추진)

광주광역시는 시비 예산이 46.6%이며, 국비 38.0%, 기타 13.4% 순으로 나타나 자체 예산의 비중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Ⅱ-21〉 2019년 광주광역시의 일자리 정책 예산

예산 재원(백만원)			
계	국비	시비	기타(직접 지원)
1,039,490 (100.0%)	395,154 (38.0%)	484,763 (46.6%)	159,573 (13.4%)

광주광역시는 2019년 유형별 일자리유형에 따라 직접일자리 70개 사업, 직업훈련 15개 사업, 고용서비스 11개 사업, 고용장려금 6개 사업, 창업·기업지원 80개 사업, 기타 137개 사업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일자리 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분류하였는데, 인프라 혁신 전략 11개 사업, 맞춤형일자리(청년, 여성, 신중년, 노인 등) 102개 사업, 창업지원 13개 사업, 투자유치·기업지원 8개 사업, 미래전략산업 57개 사업, 문화관광콘텐츠 36개 사업, 사회적경제 3개 사업, 사회기반시설 86개 사업, 노사상생 3개 사업 등으로 분류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 Ⅱ-22〉 광주광역시 일자리 사업유형

구분	분류		사업명	목표
사업 유형	공공	직접일자리	70개 사업	24,149
	민간	직업훈련	15개 사업	661
		고용서비스	11개사업	6,877
		고용장려금	6개 사업	9
		창업지원	80개사업	2,277
		기타	137개 사업	3,518

〈표 Ⅱ-23〉 광주광역시 전략과제별 일자리 사업

구분	사업명	목표 (신규창출)
인프라혁신	고용영향평가, 광주일자리종합센터 운영 및 취업 지원, 광주 일자리 박람회 개최,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토닥토닥 청년일자리 카페 운영 등 11개 사업	3,147 (1,887)
맞춤형일자리(청년, 여성, 신중년, 노인 등)	광주청년일경험드림, 청년창업청년취업winwin프로젝트, 공유재산활용사회실험청년창업지원, 산학일체형도제학교지원, 글로벌청년취업(k-move 스쿨)지원 등 102개 사업	44,581 (29,542)
창업지원	빛고을재도전지원, 청년예비창업가발굴육성, 우수창업기업집중지원, 하남산단재생사업, 크라우드펀딩지원, 여성창업지원, 상권활성화 시범지구 지정 등 13개 사업	191 (178)
투자유치·기업지원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강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1,463

구분	사업명	목표 (신규창출)
	성장단계별 육성지원, 하남혁신지원센터 건립, 투자유치보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양성 등 8개 사업	(1,073)
미래전략산업	2019년광주디자인비엔날레추진, 4차산업혁명혁신선도대학 및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 글로벌광융합비즈니스경쟁력강화지원, 평판형광도파로기반산업고도화 지원 등 57개 사업	2,237 (689)
문화관광콘텐츠	북구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내 도서관 건립,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설 구축,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 구축, 학교예술강사 지원, 문화예술강사 지원,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등 36개 사업	2,109 (1,992)
사회적경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 등 3개 사업	838 (322)
사회기반시설	광주C-ITS 실증사업,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표준모델 설치, 사고위험횡단보도LED 조명 설치, 초등학교 교통안전지킴이, 광주송정 KTX역 투자선도지구 조성, 빛고을 주정차 지킴이 운영 등 86개 사업	3,482 (1,753)
노사상생	비정규직 남용방지 및 차별없는 일터 조성, 사각지대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사업 지원, 광주형일자리 기업발굴 및 육성 지원 등 3개 사업	68 (55)

9) 경기도 일자리 정책[18)]

경기도의 경제활동인구는 전국 대비 25.2%로 전국에서 1순위이다.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2018년 한 해 170천명이 순유입하였고, 2017년 대비 54천명 증가하였다. 고용률은 62.0%, 실업률은 3.8%로 각각 2017년보다 0.1%p 하락하였다. 2018년 경기도 취업률은 45.6%로 전년 46.7% 대비 1.1%p 하락하였는데, 산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도·소매업이 23.3%, 숙박·음식업 17.1%, 제조업 14.8%, 운수·창고업 9.8%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취업자의 수는 제조업이 26.3%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 14.2%, 숙박·음식업 9.5%, 보건사회복지 7.7% 순으로 나타났다.

18) 경기도(2019.3.)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2019년 경기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요약 정리

경기도는 직접 창출형 사업과 고용기여형으로 구분하였고, 직접 창출형에서 공공일자리와 공익적 민간일자리로 분류하였다. 직접 창출형 공공일자리는 안전 · 기본질서, 정의 실현을 위한 공공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도, 단속분야 일자리를 창출한다. 직접창출형 공익적 민간일자리는 현 재정이 필요한 민간일자리를 발굴하고, 버스분야 일자리,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사업을 등을 추진한다. 그리고 고용기여형 일자리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규제, 불합리 · 불공정 규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개선해나가며, 구인, 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을 발굴하며, 공공인프라 구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표 Ⅱ-24〉 2019년 경기도 일자리 사업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부문	전략	내용
직접 창출형 (243)	공공일자리 (126)	- 안전·기본질서·정의 실현을 위한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 지도, 단속분야 일자리창출로 공정한 사회 기반 마련
	공익적 민간 일자리 (117)	-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일로 道 재정이 필요한 민간일자리 발굴 확대 - 버스분야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사업 등
고용기여형 일자리 (171)		- 4차 산업혁명 대비 ·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일자리 - 산업규제, 불합리·불공정 규제의 신속한 개선 -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통해 일자리 창출 사업 발굴 - 공공인프라 구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기도의 일자리 정책의 전략과제별로 직접창출형 일자리와 고용기여형 일자리로 구분하고 직접 창출형은 공공일자리와 공익적 민간 일자리로 나뉘어진다.

〈표 Ⅱ-25〉 경기도 전략과제별 일자리 사업

구분		사업명	목표
직접 창출형 (243)	공공일자리 (126)	체납 관리단 운영, 경기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 현장 체험학습 소방안전지도관 동행제, 119 시민수상구조대, 먹거리 안전관리사 '농농케어' 운영, 꿀 소비 확대지원 공공일자리, 항·포구 지킴이, 소상레저 안전감시원 지원, 매입임대주택 취약계층 텃밭공동체 지원, 노인케어 텃밭배달부 운영사업 등 126개 사업	104,413

구분		사업명	목표
	공익적 민간 일자리 (117)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버스 분야 일자리 함께 하기 사업,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공동체 활동 전문가 채용 지원, 지역문화예술플랫폼 육성 사업, 다문화 디지털 콘텐츠 창작 지원, 심폐소생술 등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 117개 사업	14,786
고용기여형 일자리 (171)		뷰티제품 연구개발 지원사업, 시민정원사 운영, 민관협력 클라우드 서비스지원, 화성 국제테카파크 조성사업,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VR.AR 산업 육성,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사업, 통일경제특구 경기도 유치(100만평 조성시), 기업중심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 171개 사업	-

*고용기여형 일자리는 주요사업을 위주로 산정하여 일자리 목표 미제시

경기도의 일자리 정책 예산은 기타 부분이 46.9%이며, 도비 23.2%, 국비 17.5%, 시군비 12.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Ⅱ-26〉 2019년 경기도의 일자리 정책 예산

예산 재원(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3,079,254 (100%)	538,087 (17.5%)	715,677 (23.2%)	381,108 (12.3%)	1,444,382 (46.9%)

10) 강원도 일자리 정책[19)]

강원도는 2016년까지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7년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고, 60대 이상이 27.0%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17.6%, 15~29세 17.3% 순으로 나타나 고령화사회가 되고 있다. 강원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2.5%이며 고용률은 60.7%로 전국과 동일하고 실업률은 2.9%로 전국보다 0.9% 낮게 나타났다. 산업별 취업자 현황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41.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 22.9%, 농림어업 11.0%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기준 강원도의 사업체수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27.2%로 가장 많았고, 도매 및

19) 강원도(2019).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2019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 요약 정리

소매업 23.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9% 순이며, 5인 미만 사업체가 83.7%로 가장 많고 5~9인 사업체 9.4%, 10~49인 5.9%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① 도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안정적 일자리, ②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든든한 일자리, ③ 희망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일자리 등 3대 정책과제와 10대 핵심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 Ⅱ-27〉 2019년 강원도 일자리 사업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정책분야	추진전략	실천과제
안정적 일자리	일자리 플랫폼 구축	- 강원도 일자리재단 설립 - 강원도 일자리센터 확대 설치 및 운영 - 강원도 일자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강원도형 일자리 핵심시책 현장 안착	-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30,000명) -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추진 (6,000명) - 강원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703명)
	대상별·성장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	- 창업보육센터 특화 운영 (200명) - 청년창업 프로젝트 추진(30명) 및 청년창업자 사후관리(35명) - 귀농 창업지원 (63명) - 사회적경제 청년창업 지원 프로젝트 (21명)
	고용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 강원도 일자리대상 추진 -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417명) - 사회적기업 육성 (350명) -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124명)
든든한 일자리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산업 미래일자리 창출	- 이모빌리티(e-mobility) 클러스터 조성 - 액체수소 도시 조성 -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 고용창출력 강화	- 우량·중견기업 도내 유치 (620명) -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400명)
따뜻한 일자리	청년친화형 일자리서비스 확대	- 특성화고 도제교육 운영지원 (100명) - 취준생 청년창업자 주택단지 조성 - 이전공공기관 지역청년채용 확대 -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1,500명)
	일자리수요 계층별 맞춤형 지원 (노인, 여성, 신중년, 장애인)	-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 (3,050명)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41,181명) - 여성새일센터 운영 (4,000명) - 여성결혼이민자 취업교육 (40명) -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채용 지원 (225명) -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50명) -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지원 (241명)

정책분야	추진전략	실천과제
		-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401명)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기회 확대	- 저소득층 자활근로 지원 (2,166명) - 공공근로사업 지원 (1,200명)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 (1,600명)
	남북경협 기반 접경지역 일자리 회복	- 통일전망대 시설개선 및 북한음식점 개설 (12명) -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 (163명) - 평화지역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 (51명) -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 육성 (10명)

강원도 일자리 정책의 예산은 국비 39.9%, 도비 32.9%, 시군비 25,7%, 기타 1.5%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Ⅱ-28〉 2019년 강원도의 일자리정책 예산

예산액(백만원)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611,532 (100%)	244,186 (39.9%)	200,926 (32.9%)	157,029 (25.7%)	9,392 (1.5%)

강원도는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를 제정하여 일자리사업 추진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기존의 '강원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정 및 지원사업'을 '강원도 일자리대상'으로 격상하여 도내 일자리창출과 일자리 질을 개선한 일자리 우수기업에게 '강원도 일자리대상'을 시상하고 이들 기업에게 각종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강원도 일자리정책 수립 및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일자리 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강원도 일자리안심공제사업을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11) 충청북도 일자리 정책[20]

충청북도는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50대의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며 30대가 전국의 평균보다 1.2%p 적은 편이다. 생산가능인구는 2019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인구이동 부분에서 경기도로부터 전입이 2,108명으로 많았고 세종시로의 전출이 3,005명으로 인구이동이 있었다. 특히 청년층(15~29세)의 인구유출과 중·장년층의 인구유입이 발생하고 있다. 충청북도의 고용률은 69.1%로 전국(66.6%)에서 2위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산업별 취업자 현황을 보면 기능인력·서비스 종사자의 증가율이 높고, 광공업의 취업률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2018년도의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판매종사자의 비중이 감소되고 있고,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 종사자도 감소추세에 있다.

충청북도는 경제성장률이 전국에서 높은 성장률('17년 3.43%)을 보이고 있으며, 반도체 등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이 20%를 차지하고 있다. 자본집약적인 산업군이 주도하는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대기업 64.3%, 반도체 42.4% 중심의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특정산업 의존도가 높고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다.

충청북도는 300인 미만의 중소제조업의 인력 부족률이 전국 4번째 수준의 3.1%으로 대기업은 1.2% 부족한 반면, 중소기업은 2.3%로 부족한 상황이다. 전산업 및 제조업의 경우 고졸이하 수준의 초급 기능 인력을 선호하고 있고, 충북지역 특성화고의 취업률은 33.0%로 낮은 수준이다.

충청북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① 내일의 고용환경 변화 대응, ② 내일 맞춤형 일자리 지원, ③ 내일의 좋은 일터만들기 ④ 내일의 일자리 거버넌스 재구조화 등 4대 정책과제와 10대 핵심 전략을 수립하였고, 일자리 창출목표를 103,200명을 목표로 하며 추진하고 있다.

〈표 Ⅱ-29〉 2019년 충청북도 일자리 사업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정책분야	추진전략	실천과제
내일의 고용환경	지역산업 연계 일자리 창출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사업 -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20) 충청북도(2019).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2019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 요약 정리

정책분야	추진전략	실천과제
변화 대응		- ICT 복합 등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지원 - 지역 주력산업 육성 지원 - 에너지분야 신성장산업 기술개발 및 신산업 육성
	산업육성 전략의 TWO-트랙화 혁신성장, 고용창출	- 첨단산업 중심 투자유치 강화 - 수도권·외국기업 전략적 투자유치 및 협약기업 지원 - 지속정상 가능한 미래형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 - 충북형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글로벌 기업 육성 - 미래 경제성장동력, 서비스산업 육성 - 블록에칭산업 지역거점 기반 구축 -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자립지원을 통한 고용창출 - 문화예술·체육 지원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 - 보건·보육서비스 분야 종사자 역량강화 및 인력 확충
내일 맞춤형 일자리 지원	청년 일자리 인프라 견실화 및 역량 강화	- 지역특성 반영 및 안정적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 청년창업 활성화 및 기반조성 - 청년자립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강화 - 특성화고 우수기능인력과 중소기업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여성 경력개발·유지 친화적 환경 조성	- 여성 취업서비스 지원 및 고용유지 강화 - 충북여성 일자리 다변화 및 역량강화 - 여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중장년 지속가능한 일자리 역량 확보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 공유경제 실현을 위한 생산적 일손봉사 확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도우미 운영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창의적 일자리 창출	- 시니어 주도형 공공일자리 지원 확대 -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 시니어 지원형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의 확장과 따뜻한 일자리 만들기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 - 장애인 일·생활 One- stop 지원 생태계 구축
내일의 좋은 일터 만들기	고용안전망 구축 및 원하는 일자리 창출 지원	-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확대 -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 확대 지원 -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행복기업 프로젝트 -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정책분야	추진전략	실천과제
		-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 기업 정주여건 개선 추진
	현장밀착형 일자리 지원 서비스 제공	- 일자리 잡브릿지 센터 구축 및 운영 - 도민체감 일자리정책 전달체계 강화 - 취업박람회 및 채용설명회 개최
내일의 일자리 거버넌스 재구조화	참여-합의-시행·평가의 선순환 체계 구축	- 거버넌스를 활용한 현장 실천 한계 극복 -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 도입 "충북형일자리" 발굴

충청북도 일자리 정책 예산은 국비 54.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시군비 26.9%, 도비 16.9%, 기타 1.3%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Ⅱ-30〉 2019년 충청북도의 일자리 정책 예산

예산액(백만원)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445,097 (100%)	244,548 (54.9%)	75,059 (16.9%)	119,582 (26.9%)	5,908 (1.3%)

충청북도는 2018년도에 일자리 공시제에서 전국에서 우수한 일자리 정량 성과를 달성하였는데, 고용률(15~64세) 69.1%(광역시·도 2위), 청년고용률 45.5%(광역시·도 2위), 그리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전년대비 4.0% 증가, 2018년 투자 유치 8조 5,973억 원을 달성(ㅅ사 엠(M)15라인(고용유발효과 21만 8천명), ㅊ사(2019년 400명 고용)) 하였다.

충청북도의 일자리정책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주요 전략을 지역노동시장 문제를 진단하고 최적의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여 민간 일자리 창출 능력 제고하고, 지역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력 저하, 인구 고령화 및 청년인구 유출, 노동시장 부조화(미스매치)와 장시간 근로 만연 등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였다. 이에 대해서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투자 유치하여 미래형 일자리 창출하고자 하였는데, 특히 충북도-기초시·군-경제단체 등과 투자유치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업애로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odi.or.kr

지원팀 신설로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소방복합치유센터, ㅎ사 수소차엔진공장, ㅅ사 엠(M)15공장 준공, 교통방송국 유치 등 성과를 달성하였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충청북도는 태양광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산업 특구 지정을 통한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내수기업의 수출을 유도하는 전략을 통해서 지역 일자리를 확대하는 노력을 하였는데, 2017년 수출액 200억 원이 2018년 수출액 2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 상승한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청년·노인·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평생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청년을 대상으로는 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과 연계한 채용 지원 사업을 하면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정책(충북 행복 결혼 공제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중장년을 대상으로는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과 인력 부조화(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 실시하였고, 2018년도에 기능 인력 234명 취업, 3년 평균 취업률 75.4% 달성하였다.

복지 지향형으로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일하고 싶은 기업문화를 조성 및 근로자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근무환경 개선 지원한다.

12) 충청남도 일자리 정책[21]

충청남도는 2018년도 경제규모 GRDP가 전국의 3위, 경제성장률이 5위(3.3%) 등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다. 수출규모가 전국 1위로 수출액 940억불, 무역수지가 572억불이다. 전체 산업중 제조업 비중이 50.4%, 제조업 중 대기업의 비중이 68.5%이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서산 동희오토 등 완성차 공장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북부권지역(천안, 아산, 서산, 당지) 위주로 자동차부품사업체가 위치하고 있다.

또한 고용현황은 2018년도 고용률이 63.5%로 2017년도 대비 1.2%p가 상승하고, 여성 고용률이 2.3%p 상승하였고, 20대 후반의 청년층의 인구증가에 따라 취업자 비율로 15.6%로 대폭 증가하였다. 전국적 제조업의 경기둔화에 따른 취업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는 취업자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경제 및 고용현황들이 지표상으로 양호하나, 2018년 GM 대우 군산공장 패쇄,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등 자동차부품산업 등 충남의 중점사업인 제조업의 위

21) 충청남도(2019.3.)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2019년 충청남도 일자리 대책 시행계획 요약 정리

기 징조가 보이고 있다. 또한 원하청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국에서 2위이며, 부상 및 요양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충청남도 지역의 대학교의 80.7%가 타지역에서 유입된 학생들로 졸업 이후 원 거주지로 돌아가 지속적인 대졸자의 외부 유출이 크며 충청남도에 취업한 충남소재대학 졸업자는 16.7%, 충남 외 지역 취업 졸업자는 83.3%로 지역 내 숙련인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고령화 인구수의 증가 문제, 여성 청년층의 비경제인구 진입 증가, 사회적 경제의 고도화, 지역간 불균형 및 낮은 일자리의 질등의 노동현안 등의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고자, 충청남도는 ① 취업애로계층의 일자리 창출, ② 풍요로운 삶의 일자리 창출, ③ 경제성장 주도 일자리 창출 ④ 고르게 창출되는 일자리, ⑤ 도민 중심 고용서비스 등 5대 정책과제와 10대 핵심 전략을 수립하였다.

〈표 Ⅱ-31〉 2019년 충청남도 일자리 사업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정책분야	추진전략	실천과제
취업애로계층의 일자리창출	청년이 정착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	- 청년창업지원, 청년 창업사관학교 운영, 충남형 청년 창업가 발굴 육성, 작은 브랜드 100개 찾기, 청년창업공간조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10개 사업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 기반 일자리 창출	- 노일 일자리 지원, 북한 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취업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시각장애인 골볼팀 창단, 자활근로사업, 가정폭력 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 6개 사업
풍요로운 삶의 일자리 창출	노동자를 위한 행복하고 안전한 일자리 만들기	-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 대책 추진, 노동권익센터 운영, 외국인 근로자 지원, 감정노동자 가이드라인 마련,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 등 6개 사업
	도민 밀착형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창출(12개)	-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등 12개 사업
	살기 좋은 충남 만들기, 공익 일자리 창출	- 소액체납자 실태파악을 위한 체납징수단 운영,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 야생동물 보호사업 지원, 해양환경미화원 운영, 산업재해예방사업, 산림조성, 농촌인력 및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 등 8개 사업
경제성장 주도	주력산업 위기	- 충남자동차부품 산업 산업 위기 대응 및 자동차 융

정책분야	추진전략	실천과제
일자리 창출	대응을 통한 고용안정 도모	합부품 세계화 지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방 투자 촉진, 충남 지역산업 기술인력 양성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등 5개 사업
	미래 산업성장 선도 일자리 창출(6개)	- 충남 창조경제 혁신센터 운영 지원, 충남형 스마트 공장 구축, 충남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 수소연료전지차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지원 등 6개 사업
고르게 창출되는 일자리	시군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 주민발안형 일자리 사업, 문화관광해설사 욱성, 문화재 돌봄사업, 수산식품 수출유망기업 지원, 농식품기업 창업육성, 마른김 가공시설 지원, 도시재생사업 등 7개 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 일자리 창출	- 마을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 청년활동가 육성, 사회적기업 청년 도제교육 등 4개 사업
도민 중심 고용서비스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지역고용서비스 선진화(6개)	- 일자리진흥원 설립 추진, 온오프라인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일자리 박람회 운영, 광역 새일센터 설치, 노인 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6개 사업

충청남도의 예산은 70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며 734,321,백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일자리 사업 대상별 수단에서 기업유치를 포함하는 '기업 경영지원'사업에서 96,470백만원으로 가장 많이 투입하며, '중증년(노인포함) 일자리 창출' 사업73,899백만원,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 55,378백만원을 투입한다.

일자리사업 대상에 따라 공통부분을 제외하고 중장년 74,497백만원, 여성 58,394백만원, 청년 69,019백만원 순으로 투입이 된다.

〈표 Ⅱ-32〉 일자리 대상별 재원

수단 / 대상	일자리 창출	일자리질 개선	직업능력 개발	고용 서비스	고용 장려금	창업지원	기술 및 경영지원	계
공통	354,216	·	880	790	·	1,800	·	357,686
청년	·	·	18,651	37,312	·	13,056	·	69,019
여성	55,378	·	15	3,001	·	·	·	58,394
중장년	73,899	·	186	36	376	·	·	74,497
취약계층	36,547	614	·	·	·	·	·	37.161
재직 근로자	·	32,516	·	·	·	·	·	32,516
기업	·	·	·	·	·	·	96,470	96,470
사회적 기업	·	·	1,488	·	5,896	574	620	8,578
합계	520,404	33,130	21,220	41,139	6,272	15,430	97,090	734,321

13) 경상북도 일자리 정책[22)]

경상북도는 인구가 2014년도에 비해 0.9% 감소하였고, 15세이상 인구와 경제활동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경제활동참가율이 64.2%으로 고용률은 61.6%, 실업률은 4.1%이다. 300인 미만 사업체수가 225,906개소로 300인 이상 사업체 수는 173개의 업체가 있다. 산업별로 사업체가 도매 및 소매업이 가장 많고 숙박 및 음식점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건설업 등으로 사업체 수의 비중이 전국 타 시·도보다 높다. 종사자수도 제조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종사자수의 비중이 전국에서 높다.

경상북도는 ① 도민만족 좋은 일자리, ② 경북형 일자리 투자 및 확산, ③ 청년희망 뉴딜 10 프로제트 확산 등 3대 정책과제와 6대 핵심 전략을 수립하였다.

22) 경상북도(2019).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2019 경상북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요약 정리

〈표 Ⅱ-33〉 2019년 경상북도 일자리 사업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정책분야	추진전략	실천과제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창출	재정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 신성장 미래산업, 취약계층, 문화광광, 농어촌, 공익 일자리 등 지역의 특성과 사회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 여성의 일·가정 양립 및 다문화 가족 맞춤 지원, 신성장 기반 미래산업 일자리 발굴, 기업 맞춤형 청년일자리 지원, 문화예술·관광활성화 전문일자리 등 97개 사업, 61,372개 일자리창출
구직자 취업지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일자리 한마당, 경북일자리종합센터 등 정보·임금 웰-매치(Well-Match) 집중을 통한 사업 * 취업지원기관 상시 운영 * 경북형 산·학·관 일자리 한마당 운영, 청년일자리 붐 조성 및 인식개선, 기업 및 지역 맞춤형 청년인재 취업, 지역대학과 연계한 일자리창출 지원 등 20개 사업, 23,804개 일자리창출
맞춤형 직업훈련	고용시장에 맞는 맞춤형 인력양성	* 여성직업능력개발, 산학협력 기술인력양성, 실업자 직업훈련 등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 실시 등 8개 사업, 365개 일자리창출
창업지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청년커플 창업, 청년CEO육성, 사회적 기업 육성 등 18개 사업, 2,380개 일자리창출
공공행정 지원	행정지원 일자리창출	* 신규공무원 채용, 공공기관 인력확대, 공공행정서비스, 복지지원 등 21개사업, 4,612개 일자리창출
투자유치	민간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	* 미래 유망산업분야,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통한 9,300개 일자리창출

경상북도 일자리 정책 예산은 국비 46.3%로 가장 많으며, 시군비 27.1%, 도비 21.2%, 기타 5.4%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Ⅱ-34〉 2019년 경상북도의 일자리 정책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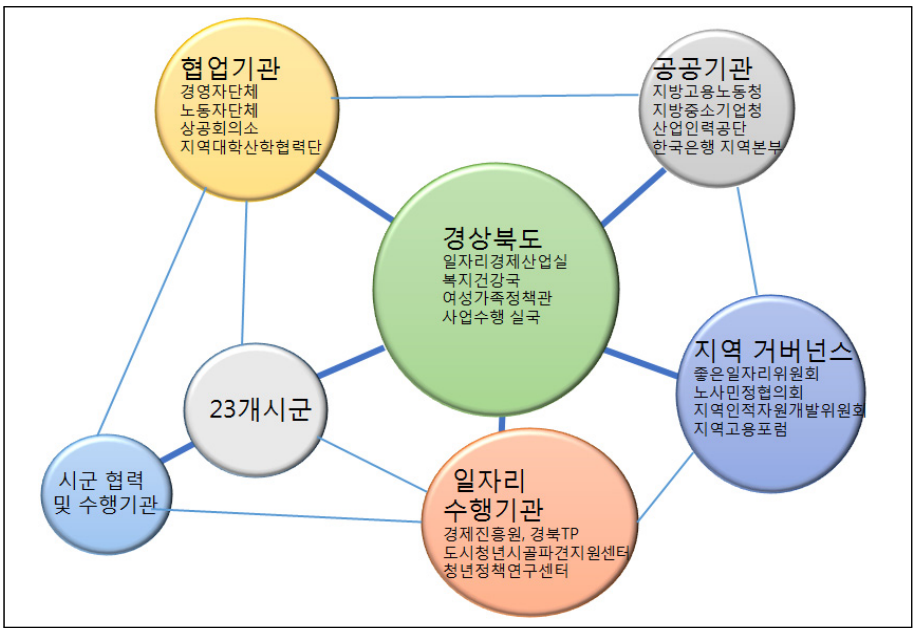
예산액(백만원)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667,340 (100%)	308,659 (46.3%)	141,643 (21.2%)	181,005 (27.1%)	36,055 (5.4%)

경상북도의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사업은 200개로 직접일자리 창출 97개, 직업능력개발훈련 8개 사업, 고용서비스 19개 사업, 고용장려금 1개 사업, 창업지원 18개 사업, 일자리 인프라 구축 4개 사업, 기타 21개 사업을 수행하며, 민간 부문에서 1개 사업을 수행한다.

〈표 Ⅱ-35〉 2019년 경상북도의 추진 일자리사업

부 문 (사업수)		사업명
공공 (200개)	직접일자리창출	-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행복씨앗인성교육프로젝트,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아이행복도우미, 아이돌봄지원사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지원, 청년연구 인력 등 97개
	직업능력개발훈련	-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운영, 지역실업자직업훈련, 특성화고 나노융합 기술인력양성, 대구경북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지원, 인공지능거점센터 운영사업, 원전현장인력양성원 운영 지원, 원자력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대학(원자력) 전문인력양성지원 등 8개 사업
	고용서비스	- 경력단절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역혁신일자리지원 프로젝트, 경북청년근로자 행복카드지원, 청년기업맞춤형인력매칭사업,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경북일자리종합센터지원, 취업지원센터, 경북형산학과일자리한마당 등 19개 사업
	고용장려금	-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1개 사업
	창업지원	- 도시청년시골파견제사업, 청년커플창업지원사업, 경북청년DEO 심화육성지원사업, 시군청년예비창업지원, 북부권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청년기업일자리 및 창업기업일자리 지원, 청년마을 일자리뉴딜사업, 청년시범마을자리 등 18개 사업
	일자리 인프라 구축	-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위원회 운영, 경상북도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경북 일자리 청년포럼단 운영, 청년 CEO 협회 운영 4개 사업
	기타	- 신규공무원 채용, 신규소방공무원 채용, 지방공공기관 인력확대, 김천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확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광역자활센터 운영,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사회복지관 사례관리사 운영 등 21개 사업
민간 (1개)	기업 등 유치	- 4차산업 및 첨단산업 중심 우량기업 유치로 일자리창출 1개

경상북도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북도청을 중심으로 공공기관(대구지방고용노동청, 지방중소기업청, 산업인력공단, 한국은행 지역본부), 좋은 일자리 위원회, 도시청년 시골파견지원센터, 경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청년정책연구센터, 시민단체, 민간부문(경상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 경상북도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경북본부 등)이 협력하고 추진한다.



[그림 Ⅱ-6] 경상북도 일자리정책 추진체계

14) 경상남도 일자리 정책[23)]

경상남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15~29세)의 인구수 유출이 가장 높고,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2017년 14.9%에서 2018년 15.5%로 증가하여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2018년 고용률은 66.9%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나, 청년 취업자가 감소하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어 청년 고용여건이 저조한 반면, 50~60대 퇴직자 수의 증가로 재취업이 활발한 편이다. 경상남도의

23) 경상남도(2019). 2019년 경상남도 일자리대책 시행계획-민선7기 일자리종합대책 연차별 세부계획 요약 정리

GRDP(지역내총생산)는 전국 4위 규모로, 성장률은 2013년도 이후 감소세였으나 2017년도에 1.5%로 반등했고, 2019년 2.0%로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구성하고 있으며, 경상남도의 동부지역이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90%이상 차지하고 있다. 2019 상반기 주요업종 일자리 전망(한국고용정보원, 10.1.31)에 의하면 자동차, 원전, 기계 산업 등의 제조업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라 개인 공공서비스업의 고용시장이 확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상남도는 SWOT 분석에 따라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 및 위협 요소를 분석하여 5개의 전략, 20개의 중점 추진과제, 69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였다.

〈표 Ⅱ-36〉 2019년 경상남도의 추진 일자리사업

정책분야	추진전략	실천과제
스마트 일자리 확산	스마트 일자리 모델 구축	- 스마트 일자리 모델 구축
	스마트산업 육성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 스마트 산단 조성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 스카트 팜 확대 보급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 농어촌 창업·정주 여건 조성
	지능형 기계산업 지원 강화(2개)	- 지능형 기계산업 고도화 지원 - 경남 로봇산업 부가가치 증대
맞춤형 일자리 강화	청년 취·창업 기반 강화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확대 - 트랙사업 활성화 - 청년 취·창업 교육훈련 및 장려금 확대 - 고용·산업위기지역 청년 취·창업 지원 강화 -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도 활성화 -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신중년 일자리 확충	-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 신중년 재취업 및 창업 지원 강화 - 고용 ·산업위기지역 신중년 재취업 지원 확대
	노인 일자리 확대	- 노인 고용복지체계 운영 강화 -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확대
	여성 Job- Life 개선	-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서비스 강화 - 양성평등 및 워라벨 문화 확산 - 좋은 여성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확대	-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및 자활 역량 제고

정책분야	추진전략	실천과제
		- 취약계층 자립기반 확충
사회적 일자리 확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 육아·보육서비스 지원 강화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노인 돌봄서비스 확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확대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강화
	사회적 경제 일자리 지원 강화	- 사회적경제 혁신 타운 설립·운영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확대 - 사회적·마을 기업 육성
	공유경제 활성화	- 공유경제 모델 발굴·확산 - 연구개발장비 공동플랫폼 활성화
	고용 안전망 강화	- 고용안전망 지원조직 설치·운영 강화 - 희망근로 지원 사업 추진 - 실직자 재취업 지원 사업 강화 - 이동·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권익향상 - 공공부문 생활임금 도입 운영 - 돌봄노동자 상담 및 건강센터 설치·운영 - 경남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강화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및 조선인력 매칭 강화
SOC 일자리 확충	지역 중신 SOC 투자 강화	- 어촌뉴딜 300사업 - 도시재생 뉴딜사업 -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기업활동 지원 SOC 확충	- 산업단지 재생사업 가속화 -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일자리 확대 - 양산도시철도 건설 -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
	물류산업 전진 기지 구축	- 물류산업 전진 기지 구축 -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조성
일자리 상태계 조성	일자리 추진체계 정립	-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운영 -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일자리대책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일자리 플랫폼 구축	- 경남경제진흥원 설립·운영 - 청년일자리 플랫폼 운영 강화 -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내실화 - 일자리종합센터 활성화 - 고용·복지 원스톱 전달체계 구축

정책분야	추진전략	실천과제
	지역정책금융 지원 확대	- 중소기업 투자 및 경영안정 자금 확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 비용부담 완화
	규제자유특구 조성	- 창원 수소특화단지 조성 - 양선·김해의 생명 허브 조성 -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조성

경상남도 일자리 정책 예산은 국비 45.2%로 가장 많으며, 도비 22.9%, 기타 17.5%, 시군비 14.3%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Ⅱ-37〉 2019년 경상남도의 일자리 정책 예산

예산액(백만원)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2,133,324 (100%)	967,850 (45.2%)	488,200 (22.9%)	304,274 (14.3%)	373,000 (17.5%)

〈표 Ⅱ-38〉 경상남도 일자리 사업유형

분류		사업명	목표
공공	직접일자리	-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인턴사원 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사업,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사업,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 채용 등 92개 사업	73,480
민간	직업훈련	- 구직희망고령자 취업교육비 지원, 지능형로봇 인력양성센터 운영, 전문직종 해외취업 지원, 고졸예정자 취업특화과정, 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등 13개 사업	1,154
	고용서비스	-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 경남형시니어인턴십 사업,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운영, 권역별 채용박람회,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청년 해외인턴 사업 등 14개 사업	20,506
	고용장려금	-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경남형 기업트랙, 경남형 하이트랙,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 사업, 경남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개선사업, 신중년 경력	3,322

분류		사업명	목표
		형 일자리 사업 등 13개 사업	
	창업지원	- 창원산단 청년기술창업 특성화 사업, 경남 스타트업 아이디어 고도화 지원사업, 경남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 청년창업 아카데미 운영사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 18개 사업	2,754
	투자유치 및 인프라 구축 등	-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 항공정비(MRO) 사업 지원,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 지역주력산업의 세라믹 융복합 첨단화 사업 등 29개 사업	10,442

15) 전라북도 일자리 정책[24)]

전라북도는 2018년도 인구수가 2017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고, 경제활동인구수도 감소하고 있고 50대 이상의 연령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현황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을 할 때,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전북의 미래혁신을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청년이 머물고 일하고 싶은 일자리 창출에 주요 중점을 두고 있다.

전라북도의 고용률은 58.3% 으로 전국평균 60.7%에 미달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2.7%로 전국평균 3.8%보다 양호하다. 전라북도는 대체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영세하며, 농업, 어업 중심의 1차 산업에 기반하고 있고 산업별 사업체는 도매 및 소매업이 26.9%, 숙박 및 음식점업이 18.2%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전라북도는 5개의 전략과 15개의 핵심과제, 그리고 77개의 실행과제를 수립하였고, 183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일자리 정책 예산은 국비 49,5%, 시도비 21.1%, 기타 10.3%, 시군비 2.4% 순으로 나타났다.

24) 전라북도(2019).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2019년 전라북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요약 정리

〈표 Ⅱ-39〉 2019년 전라북도의 일자리 정책 예산

예 산 액(백만원)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비	기타
719,347 (100%)	356,344 (49.5%)	151,708 (21.1%)	137,046 (2.4%)	74,248 (10.3%)

〈표 Ⅱ-40〉 2019년 전라북도의 일자리 사업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정책분야	추진전략	실천과제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특화 일자리	삼락농정 일자리 강화	- 청년농업인 육성 - 도시청년 농촌 스타트업 육성(신규) - 식품 및 농자재, 곤충산업 등 유망산업 육성 - 새만금 농업특화단지 조성 - 내수면양식 청년 창업 붐업 조성(신규) - 도시민 어촌유지 지원(신규) - 농산업 6차산업화 융복합 일자리 창출(신규) - 농어업·농어촌 일자리플러스 센터 운영(신규)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신규) - 농업분야 공공일자리 창출
	신재생에너지 및 바이오산업 육성	-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신규) - 바이오 융·복합 창조산업 기반 확충(신규)
	지능형 농산업·기계 부품산업 육성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신규) -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구축 운영(신규) - 중소형선박 기자재 산업 생태계 구축(신규) -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신규)
미래 혁신을 주도하는 성장 일자리	주력산업 고도화	- 탄소소재 상용화 촉진 - 탄소 및 나노방사선기업 유치 -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 탄소산업 연계3D 프린팅 산업 육성(신규) - 상용차산업 혁신 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신규)
	미래 신산업 육성	-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신규) - 전북연구개발특구 혁신성장 생태계구축(신규) -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 육성(신규) - 전북금융타운 본격 조성
	창의인재 발굴 육성	- 4차 산업혁명 핵신기술 인력양성 공급 - 미래 맞춤형 인재육성 및 취업연계 연구개발 지원(신규) - 숟주기 창업 지원 - 전북형 벤처창업허브 구축

정책분야	추진전략	실천과제
삶의 품격을 높이는 활력 일자리	지역문화산업 강화	- 자립가능한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 지역기반형 콘텐츠 산업 육성 -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 설립(신규) - 전북학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신규) - 전라유학진흥원 설립(신규) - 새만금 박물관 건립(신규) -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신규) - 문화재 안전관리를 통한 일자리 창출(신규)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신규)
삶의 품격을 높이는 활력 일자리	역동적인 체험·관광확대	-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준비(신규) -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한 연관 일자리 창출(신규) - 전라북도 관광벤처 육성(신규) - 스포츠참여 활성화를 통한 체육일자리 창출 - 생태관광지 에코매니저 양성을 통한 일자리창출(신규) - 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신규) - 산림문화, 체험서비스를 통한 일자리창출(신규)
	일과 삶의 조화	- 어린이집 보조·대체 교사 확충 - 일가정 양림, 워라벨 문화확산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신규) -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신규)
더불어 잘 사는 포용 일자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성장 견인 -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 성장동력산업 중심 핵심기업 유치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자영업자 창업성공률 제고 지원 - 최저임금 충격완화 및 영세 사업주 지원
	사회적경제 4.0 주도	-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일자리 창출(신규) - 마을기업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신규) - 사회적 가치활동 청년 자립 및 지역정착 지원(신규)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확대 지원	- 신중년 일자리 창출 지원 -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확대 - 경력연계형 노인일자리 창출 - 장애인 공공일자리 창출(신규) - 저소득층 공공일자리 창출(신규) -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신규) - 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신규)
한 발 더 다가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취업연계 플랫폼 기능 강화(신규) - 정부정책 연계 취업지원 사업 확대

정책분야	추진전략	실천과제
공공 일자리		- 공무원 신규 채용 - 도시재생 뉴딜정책 사업대상지 확대 - 업사이클 순환센터 설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산림재해 예방 일자리 창출(신규) -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신규) -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신규)
	사회환경변화 신속 대응	- 전북형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산업 육성 전략에 따른 신산업 발굴 사업화 - 새만금건설사업 지역업체 참여 확대

16) 전라남도 일자리 정책[25)]

전라남도의 인구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21.9%으로 전국평균 14.8% 대비 7.1%p가 낮은 수치로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 편이며, 생산가능 인구의 15~64세 인구의 비율은 66.1%로 전국 평균 72.4%보다 낮은 편이다. 동보다 농어촌 지역인 읍면이 많은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립공원과 섬 · 갯벌 · 해안선 등이 가장 많은 육지면적을 차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라남도의 취업자의 비율에 있어서 1차 산업(농림어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2 · 3차 산업(광 · 제조업, 서비스업 등)이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전라북도에서는 ① 미래형 일자리 창출, ② 누리는 일자리 창출, ③ 창의 융합인재 육성, ④ 공동체 경제 활성화, ⑤ 일자리 플랫폼 구축 등 5개 전략과 10개의 핵심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 Ⅱ-41〉 2019년 전라남도의 일자리 사업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정책분야	추진전략	실천과제
미래형 일자리 창출	미래형 고부가가치 전남형 일자리 창출	- 지역특화형 융복합 일자리 창출 - 차세대 신성장 산업 집중 육성 - 혁신 창업·창직 생태계 조성
누리는 일자리 창출	청년 등 모두가 누리는 좋은 일자리 창출	- 청년과 동행하는 전남형 일자리 창출 - 생애주기별 일자리 생태계 구축

25) 전라남도(2019).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2019년도 전라남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요약 정리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odi.or.kr

정책분야	추진전략	실천과제
창의융합인재 육성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	- 4차산업혁명시대 혁신인재 양성 - 신 귀농·귀어세대 정착
공동체 경제 활성화	공동체 기반 선순환 지역문화 조성	- 지속 가능한 사회적일자리 확대 - 일·생활 균형(워라밸) 문화 확산
일자리 플랫폼 구축	협력과 연대를 통한 고용거버넌스 구축	- 전남형 일자리 플랫폼 설치·운영

전라남도의 일자리 정책 예산은 국비 49.3%, 시군비 26.8%, 도비 18.4%, 기타 5.5%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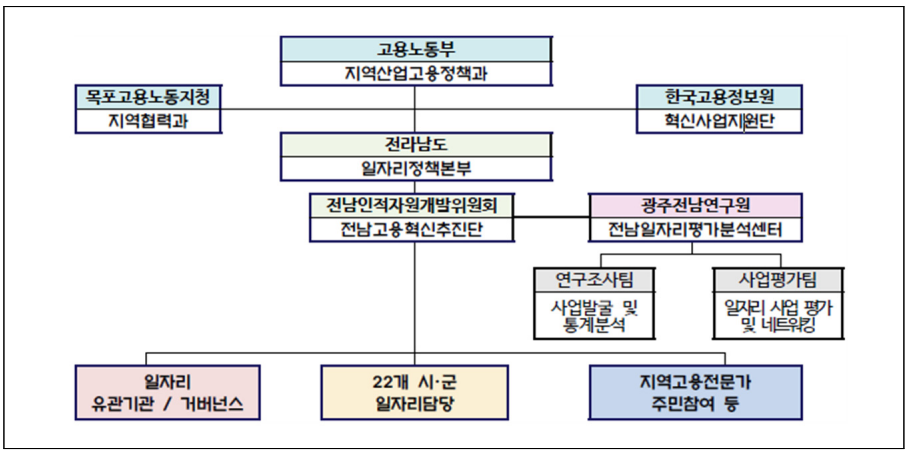
〈표 Ⅱ-42〉 2019년 전라남도의 일자리 정책 예산

예 산 액(백만원)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2,871,676 (100%)	1,414,603 (49.3%)	529,574 (18.4%)	770,139 (26.8%)	157,360 (5.5%)

전라남도는 총 273개의 일자리 관련 사업을 수행하며, 이와 관련해서 18개 실국에서 241개의 사업, 출자출연기관 13개 기관에서 32개의 사업을 수행한다.

〈표 Ⅱ-43〉 전라남도의 일자리 사업수행 기관

전략	과제
실국 (18개 실국, 241개 사업)	여성가족정책관(11), 보건복지국(29), 일자리 정책본부(16), 기업도시담당관실(5), 경제에너지국(20), 인구청년정책관(1), 기획조정실(2), 농축산식품국(15), 관광문화체육국(19), 해양수산국(44), 자치행정국(4), 건설교통국(14), 도로관리사업소(14), 도민안전실(12), 도민행복소통실(1), 동부지역본부(29), 농업기술원(2), 해양수산기술원(3)
출자출연기관(13 개 기관, 32개 사업)	전남여성가족재단(3), 전남복지재단, 강진·순천의료원(3), 생물산업진흥원(1), 전남테크노파크(1), 중소기업지원센터(1), 녹색에너지연구원(9), 신용보증재단(1), 전남개발공사(5), 광주전남연구원(1), 문화관광재단(4),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2), 전남청소년미래재단(1)



[그림 Ⅱ-7] 전라남도의 일자리정책 추진체계

전라남도의 일자리평가·분석센터는 전라남도의 일자리정책을 평가하고 분석하여 예측을 통한 전남 일자리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며, 22개의 시군과 중앙정부와의 협업으로 일자리사업를 수행하고 기업체, 대학, 폴리텍 등 인력양성기관 등의 인력공급기관, 고용센터, 산업인력공단 등 고용 정책기관 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고용에 대해서 전남고용혁신추진단 과 지역고용전문가 등을 통해서 지역 고용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를 발굴 및 운영한다.

전라남도는 2018년도에 일자리 공시제에서 전국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하였다. 전라북도의 일자리정책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첫번째로, 지역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신속한 일자리 문제 대응하고자 전략적으로 추진하여왔다. 전라남도 인구 감소 및 청년인구의 유출 등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을 일자리와 연계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청년마을로', '청년내일로' 등 청년일자리 시책을 발굴하였고, 29개 사업, 청년 1,237명, 예산 285억 원을 전라남도 자체 사업으로 기획하고 추진한 것으로, 이는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전국일자리 표준모델사업 선정되었다. 또한 '전남 청년 희망버스'를 운영해 중소기업의 인력 부조화(미스매치)를 해소함과 동시에 청년의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통한 취업지원 실시하였고 이는 36개 기업, 112명 현장에서 채용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조선업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영암·목포지역의 불황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등 지원책을 활용하여 지원을 하였고, 중

앙 지원책 외에 전라남도의 자체 사업으로 지역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지원, 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지원 등 실시하였다.

두번 째로 전라남도형 일자리 기반(플랫폼) 구축하여 차별화된 일자리 시책을 추진하였는데, 전라남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시·군 연계 협력 일자리 사업 모델을 46개 사업, 120억 원 규모로 발굴하였고, '일자리 평가 분석센터' 신설로 지역 일자리 및 고용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였다.

세번 째로, 차별개선, 노동권익 강화 등을 통한 일자리 질 개선 노력하였는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비정규직 433명 중 250명을 정규직 전환(전환률 81%)하였고, 전라남도 비정규직 노동센터 및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을 통해서 산업단지를 연계하여 찾아가는 순회상담, 노동인권 찾기 학교 운영, 청소년 고용사업장 점검 등 운영하였다.

네번 째로 주력산업(조선업 등)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량 지표 개선하여, 2018년 고용률(15~64세) 전년대비 0.8%p 상승(67.6%), 실업률 0.4%p 감소하였고, 취업자 수(4천 명↑) 및 상용근로자 수(12천 명↑) 각각 2017년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17)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정책[26)]

2차 산업(건설 및 제조업 등)의 비중이 낮고 3차 산업(서비스업)의 비중이 69.6%으로 전국 59.1% 수준에 비해 높다. 1인당 임금이 월2,767천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하위권(15위)로 38.9%를 차지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체 사업체 60,063개중 5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기업이 81.9%(49,200개)를 차지하며, 대부분 관광·서비스업 중심의 영세업체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한계가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4% 수준으로 전국 2.7% 수준에 비해 높으며,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고용률이 68.4%로 전국 1위이다.

낮아진 고용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에 집중하며 일자리 질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주 일자리 혁신위원회를 2019년 4월에 출범하여 일자리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있다.

---

26) 제주특별자치도(2019).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2019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 요약 정리

제주특별자치도는 ① 일자리 인프라 구축, ② 공공일자리 창출, ③ 민간일자리 창출, ④ 일자리 질 개선, ⑤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5개의 전략과 7개의 중점과제를 수립하고 60개의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표 Ⅱ-44〉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일자리 사업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전략	과제	실행과제
일자리인프라 구축	- 일자리 중심 도정 운영 시스템 구축 - 고용서비스 및 인적자원 공급시스템 혁신	9개 6개
공공일자리 창출	- 공공일자리 확대	2개
민간일자리 창출	- 창업생태계 구축과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 산업경쟁력제고와 일자리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18개 11개
일자리 질 개선	- 근로여건 개선과 노동 존중사회 조성	3게
맞춤형 일자리지원	-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11개

제주특별자치도의 일자리 정책 예산은 도비 49.2%로 총 일자리정책의 절반의 예산을 도가 투입하고 있으며, 국비 31.1%, 기타 19.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Ⅱ-45〉 2019년 제주도 일자리 정책 예산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기타
6,063 (100%)	1,884 (31.1%)	2,980 (49.2%)	1,199 (19.8%)

〈표 Ⅱ-46〉 제주도 일자리 사업 실천과제 및 주요내용

중점과제	세부실천과제	주요내용
1.일자리 중심 도정 운영 시스	1. 일자리위원회 기능강화	○ 일자리 정책의 기본계획수립, 제주형 일자리 정책의 발굴 및 주요 정책 심의·조정 및 평가 등 일자리 혁신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일자리 혁신 워킹그룹('18.下) → 조례 제·개정('19. 3월) → (가칭)일자리 혁신위원회 출범('19. 4월)
	2. 일자리 중심의	○ 일자리 목표 공시제 시범 확대 - ('18.) 도지사 → ('19.) 행정시장, 공기업·출자출연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odi.or.kr

중점과제	세부실천과제	주요내용
템 구축	도정시스템 구축	○ 실국별 민선7기 일자리 목표 설정 및 점검 : 분기1회 ○ 일자리 창출 실적평가제(BSC 가점) 도입 : 4월
	3. 민간·공공일자리 네트워크 강화	○ 취업정보제공·알선, 박람회 개최 등을 활성화하고, 민간·공공일자리 네트워크 강화 → 도민의 일자리 정책 만족도 향상 ○ 혼디내일센터팀 설치운영('18. 8월) → 인력 보강 등 확대운영 ('19. 1월)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	○ 제주형 일자리 시범사업 등을 통한 직접 일자리 사업 통합브랜드화 : 2019년 시범실시 후 확대 ○ 실질적인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재정지원일자리 모델 개발
	5. 예산편성시 일자리 예산 확대	○ 예산편성기준에 일자리 사업예산을 우선 집중편성 반영 ○ 예산편성시(선정·평가)시 일자리 비중 확대
	6. 고용 친화적 지방세정 운영	○ 좋은 일자리, 투자환경 조성 등 고용 친화적 세정운영 ○ 일자리 창출 등 도민 고용 연계 지방세 감면 세제지원 다각적 홍보
	7. 일자리 규제 혁신	○ 일자리 관련 자치법규의 신속한 입안을 위해 사전법제심사, 입법예고기간 단축 등 적극 지원 ○ 규제개혁 과제 발굴 공모 확대 및 산업현장 방문 - 매월 산업현장 애로 해소 전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8. 좋은 일자리 인증기업 선정 지원 확대	○ 좋은 일자리 인증기업, 근로여건 개선 우수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선정, 근로환경개선비 등 지원 확대 ○ 일자리 유공자(도민·기업인·공무원 등) 시상 추진
	9. 제주형 일자리 통계 개발	○ 일자리정책 수립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 확보를 위한 통계 개발 : 자체 통계 개발('18. 下) → 운용('19. 上) - 사회조사, 사업체조사 등의 조사통계와 공공기관의 행정자료를 결합하여 세분화된 일자리 통계 작성 추진 * 통계청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지표 구축
2.고용서비스 및 인적자원 공급시스템 혁신	1.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 실업급여 지급에서 구직자 취업지원 중심으로 고용센터의 업무기능 개편 ○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을 확대하여 대학생 및 지역청년들이 취·창업 지원 및 원스톱 고용서비스 기능향상
	2.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립 운영	○ 기업과 연계, 고용 보장이 전제되는 현장·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적이고 기업가적인 청년 취창업 인력 양성 ○ 설립준비('19. 上) → 출범 및 운영('19. 下)
	3. 제주지역 환경에 맞는 인력양성 체계의 구축	○ 기업수요와 일자리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인적자원 공급체계 구축 ○ 도내 고용훈련 및 인력양성 과정 일제조사 계획 수립 추진: '19. 3월 ○ 타시도 인력양성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추진: 연중
	4. 제주미래 성장산업 선도 인력양성 인프라 확충	○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리모델링 → ICT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 ('19.上 리모델링 완료 예정)

중점과제	세부실천과제	주요내용
	5. 글로벌 청년인재 양성 지원 확대	○ 특성화고 및 대학생들에게 국제적 마인드와 경쟁력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 지원 ○ 글로벌 역량 함양 및 외국어 실력향상으로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지원 확대
	6. 취업연계 대학재정지원 시스템으로 개편	○ 취업률 향상과 연계한 대학의 취업·창업 연계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시스템 구축 (4개대학)
3.공공일자리 확대	1.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 일자리 1만명 창출	○ 대기업이 없는 제주의 현실에서 공공부문 선도하고 민간부문 고용창출 마중물 역할 수행 ○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1만명
	2. 재정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대중교통 확충, 민간위탁 등 공공·민간서비스 및 인프라 확대와 취업 취약계층, 청장년 실업자 등의 고용안정을 위해 직접지원 일자리사업 확대
4.창업생태계 구축과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1. 지역혁신 창업클러스터 조성	○ 제주시 원도심 지역 (옛) 중앙병원 매입, 창업지원 시설 및 주거공간 등 복합기능의 창업 클러스터 조성 청장년층 유입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벤처·창업기업 지원 강화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 유망 벤처기업 집중지원 일자리 창출 기여
	3. 카본프리 아일랜드 실현	○ 전기차 자율주행 시범도시 조성 : 테스트 베드, 체험존 설치 등 ○ 자동차 연관산업 확대 :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구축(5,244백만원) 및 운영 ○ KAIST 친환경자동차연구센터와 특화협력사업 공동 추진(16개사업)
	4. 제주 新 성장 산업 육성	〈주력산업〉 ○ 융·복합 기술 기반의 제주형 대표 스타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경제협력권산업〉 ○ 경제협력권산업 융합·연계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5. 바이오(BT) 산업의 세계화	○ 화장품산업과 향기산업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사슬모델 구축 ○ 제주형 해양본초자원 사업 추진
	6.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성장동력 육성	○ 4차 산업혁명 테스트베드(사업실증지역, 규제샌드박스 존, 제2첨단과기단지 등) 구축 및 기업 유치 ○ 4차 산업혁명 펀드 조성,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제주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7. ICT 제조산업 경쟁력 강화	○ 제주국가혁신 클러스터 구축 : 지구 지정, 앵커기업 유치, 관련기업 육성 ○ 제주특화 ICT 제조산업 등 생태계 조성 :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구축(19년 응모예정), 전문인력 양성, 혁신제품 창출, 아이디어밴크 운영 등

중점과제	세부실천과제	주요내용
	8.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으로 그린 일자리 창출	○ 제주국립공원 확대 관리 운영과 연계한 각종 직업형 해설사 인력 창출(2022년까지 150명) ○ 산림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숲길체험 지도사 등) 채용(20명) : '19년
	9. 농·어업 융복합 산업 활성화	○ 6차산업 육성을 통한 농촌 활력화 ○ 제주 향토음식 육성 ○ 농산물 가공산업 기반 구축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어촌과 수산시장을 연계한 거점 수산 융복합 시설 등을 조성하여 복지어촌 기반과 일자리 창출
	10. 감귤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유통혁신	○ 실수요자 중심의 감귤정책 : 연중출하체계, 기후변화대응. 통합마케팅 등
	11. 영농인력 지원 및 청년 농업인 육성	○ 농업인력지원센터 이용 영농인력 확대 : 25천명(연차별 확대) ○ 청년농업인 및 후계농 선발·육성: 100명
	12.제주형스마트 팜·몰 구축	○ 스마트팜 실증(시범) 사업 ○ 스마트 몰 조성 ○ 체험관광형 6차산업화 스마트팜 구축
	13. 제주광어 명품 브랜드화 및 양식산업 지원확대	○ 제주광어 명품브랜드화를 위한 광어특구지정 : '19. 下 ○ 제주광어 가공·유통센터 건립('18 ~'19.), 수산물 수출물 수출물류센터 건립(건축허가 협의 중) ○ 양식어류 백신공급 확대, 고부가가치 양식품종 개발보급 등
	14. 제주해양경제 도시 조성	○ 동북아 중심거점 마리나 항만 개발(화순), 해중관광 생태공원 조성(우도), 해양레저 관광산업 활성화, 용암해수 산업화기반조성 ○ 해양생태계 복원과 지속가능한 이용 ○ 제주 해양경관 활용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15. 승마클러스터 육성	○ 승용마 시범 생산목장 지원(3~4개소) : 267백만원 ○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70두) : 조련센터 1개소 → 2개소 확대 운영 ○ 학생승마체험 지원 확대(1,500명/년), 정규 승마체육 도입 시범학교(3개소) ○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2개소) : 농어촌형 승마시설 대상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2개소)
	16. 제주관광 질적 성장 추진	○ 제주형 글로벌 생태관광 허브조성 : 에코촌 조성, 생태관광지원센터 건립, 콘텐츠 발굴 등 ○ 제주형 웰니스관광 상품 개발 지원 및 육성, 홍보마케팅 ○ 야간관광 활성화 : 문화공연, 시티투어버스 운행, 야간관광명소 육성, 버스킹 공연 등
	17. 제주관광산업 경쟁력강화	○ 스마트교육관광 콘텐츠 개발 등 스마트 관광인프라 고도화, 관광지 지속성장가능 프로그램 지원 ○ 새로운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관광산업 육성 ○ 영세관광사업체 지원 확대 : 컨설팅 지원, 관광진흥기금 지원기준 개선,

중점과제	세부실천과제	주요내용
		우수관광사업체 지원확대, 융복합 상품 개발 등 ○ 제주관광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및 소수언어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18.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으로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구축 및 체계적인 산업화 전략 마련 ○ 제주 영상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3개분야4,438백만원(국비 1,000), 16명 ○ 제주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 4개분야926백만원15명 ○ 지역기업 디지털콘텐츠 제작 지원: 4개분야1,400백만원(국비 600)127명
5.산업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1. 중견기업(중소기업) 혁신성장과 경쟁력 강화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1,875백만원(국비 100, 도비 1,775) ○ 산학연협력 공동기술 기술개발 사업 추진 : 2개사업, 1,784백만원(국 892, 도 446, 기업 446) ○ 중소기업 R&D과제 상시발굴 및 생산기술 실용화 지원 : 72건, 637백만원(도337, 기타 300)
	2. 중소·중견기업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 지원	○ 수출기업 근무자 대상 직무 교육프로그램 운영 : ‘19. 상반기 중 ○ 수출기업 인력뱅크 참여기업에 대한 기업 컨설팅 실시 : 상반기 ○ 인력뱅크 지원기업에 대한 근무상황 등 현장점검 : 상시 ○ 제주기업 성공사례 창출을 위한 제주스타상품 발굴, 집중 홍보 ○ 해외 진성바이어 중심 해외박람회, 수출상담회 지원 추진 ○ 통상업무 운영 효율화를 통한 제주 수출기업 지원 강화 ○ 수출 초보기업에 대해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실시 ○ 수출성장 견인을 위한 맞춤형 수출지원 시스템 구축 ○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활성화(상해, 동경)
	3.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안정 지원	○ 대출협약금리 동결(보증 3.8%), 우대지원 대상 확대(9→10분야) : ‘19.1월 ○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기업 특별보증 확대(150→225억원) : ‘19.1월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도 단계별 개선 추진
	4. 서귀포혁신도시 지역성장 거점 육성	○ 혁신도시 혁신역량 강화,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동력 확충 ○ 이전공공기관 지역 인재채용 확대
	5. 일자리 친화형 산업단지구축	○ (제주산학융합지구조성) 산학협력 공동 교육체제 구축으로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 및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산업단지 캠퍼스관 및 기업연구관 조성 ○ (농공단지 확장) 1차산업 생산물을 이용한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더불어 6차산업 활성화 및 미래 일자리 창출 도모
	6. 성장유망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 성장유망 산업(IT, BT 등) 기업유치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중심의 지방투자촉진제도 운영을 통한 일자리 지원
	7.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 빈집, 빈점포를 활용한 공유공간 조성으로 창업 등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중점과제	세부실천과제	주요내용
	8. 대규모 투자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프로젝트 ECO, 이호유원지, 송악산유원지 등 62개 사업장 일자리창출 ○ 관광개발사업 승인시 도민고용 80% 명시를 통한 일자리창출 ○ 투자진흥지구 및 관광개발 사업장 관리시스템 고도화
	9. 권역별 균형발전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사업, 제주문화중계소 운영,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10. 소상공인 지원확대 및 골목상권 육성	○ 소상공인 지원전담부서 신설('18.下),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19년 하반기) ○ 골목상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영안정화 지원 ○ 제주사랑 상품권 편리성 제고와 유통범위 확대 ○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생활안정을 위한 노란 우산 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 골목상권 우대 제주 通(통)카드 포인트 적립지원
	11.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육성	○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공동체 일자리 창출(3,000개)
6.근로여건개선과 노동존중 사회 조성	1. 생활임금 단계적 확대	○ 제주형 생활임금제 단계적 확대시행
	2.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보호 지원강화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추진 ○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 강화 ○ 제주특성에 맞는 비정규직 문제해결 전략수립 추진 ○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 (on-off line) 설치 운영 : '18년 ~ ○ 비정규직근로자 네트워크 구축사업 ○ 이동노동자 쉼터 시범운영 : 1개소('19년)
	3. 사회적 대화 활성화	○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기능 강화
7.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1. 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 '19년 추진목표 : 3,000백만원 지원 ○ 고용창출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주 지원(확대)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연간 720만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등 ○ 고용유지지원금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단의 2/3지원, 1일 한도 6.6만원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근로시간 및 보육현원에 따라 차등지원
	2. 청년수당(구직활동비) 지급	○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자기개발비 지원
	3. 일하는 청년 주거지원	○ 우수 청년인재(34세 이하) 제주 유치 등 일하는 청년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임차료 지원 : 2018년 ~

중점과제	세부실천과제	주요내용
	4. 일하는 청년 정규직 취업지원 확대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정부와 지역의 상생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전국 최고의 비정규직 비율, 낮은 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39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장려금 지원 ○ (청년 일 성장 프로그램) 청년들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6개월 간 직무체험활동을 통해 향후 진로선택 및 직무역량 강화 도모
	5. 5배속 청년통장(제주형 재형저축) 확대	○ 장기근속과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제주형 재형저축제도 신설 : 2018년~ ○ 정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18.6월시행) 연계지원 : '18.下
	6. 경력단절여성 등 재취업지원	○ 경력단절여성 특화 상담, 직업·창업훈련, 알선 등 종합서비스 제공,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설계 및 상담, 직업훈련, 취업연계 및 사후 관리 등 지원 (3개소)
	7. 일가정 양립을 통한 여성일자리 지원 강화	○ 수눌음 육아나눔터 조성 및 수눌음돌봄동체 발굴· 육성
	8. 신중년 근로자 장기근속 및 전직 지원	○ 중장년 구직자들의 중소기업에 정규직 취업 지원으로 중장년 고용활성화 : 1년간, 월40만원 100명 지원 ○ 제주형 중소기업 재직자 재형저축 운영 : 2019년 ~ ○ 고령자 인재은행 운영(2개소)
	9. 장애인 고용 확대	○ 장애인 훈련인프라 강화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10.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안정 지원 확대	○ 노인, 장애인 등을 고용하는 기업체에 장려금 지원 확대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안정도모
	11. 귀농어·귀촌 지원	○ 현장실습 위주의 귀농어·귀촌 교육과 귀농어업 창업 자금 지원 등 농업 및 6차 산업 창업 도모 ○ 지역 일자리정보와 귀농어·귀촌인 일자리 DB 연계한 일자리 창출 ○ 도시민 유치지원 : 2019년~

3 대상자별 고용 및 일자리 정책

정부의 고용 및 일자리 정책을 대상자별로 구분하면 청년, 여성, 중장년, 장애인, 외국인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노인, 여성, 청년 대상의 고용 및 일자리 정책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장애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정책은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서비스로,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고용관리비용 지원, 장애인근로지원인제도, 장애인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지원,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등이 있다. 지원사업들 중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주)에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서비스로,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장애인근로지원인제도는 취업한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부수적 업무(서류낭독, 물품이동 등)를 지원하는 보조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은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직장적응을 위한 현장체험을 통해 구직장애인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지원은 직업능력개발원, 맞춤훈련센터, 공공훈련기관(폴리텍), 민간훈련기관에서 훈련받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중증장애인 인턴제는 취업이 더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인턴 근무기회를 제공하고 직장 적응 및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이상~69세 이하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심층상담 및 훈련, 취업알선 등의 단계별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업과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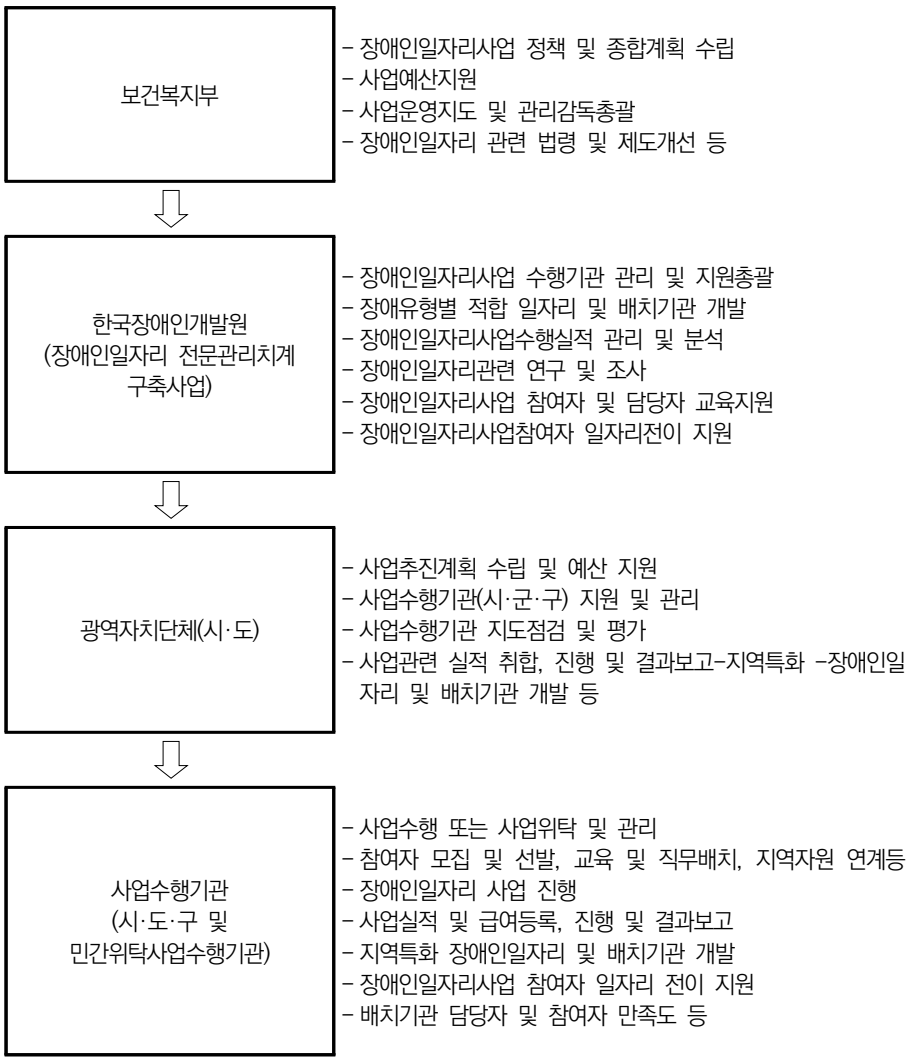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장애인일자리 사업이며,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있다.

(1) 장애인일자리 사업[27]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은「장애인복지법」제21조(직업),「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에 근거하여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확대,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일반형 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 3가지로 구분되며, 일반형 일자리는 전일제와 시간제가 있고, 복지일자리는 참여형과 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 일자리는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가 있다. 이 사업 수행기관은 시·도 또는 시·군·구청이 직업 수행하거나 또는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에서 수행을 하며, 그 중에 일반형 일자리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서 직업 수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7) 한국장애인중증장애인직업재활통합관리시스템(http://kr.koddi.or.kr)에 안내되어있는 사업소개내용을 중점으로 요약 정리



[그림 Ⅱ-8]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표 Ⅱ-47〉 장애인일자리사업 내용

구분		사업기간	근로시간	국고보조율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12개월	주 5일 (주37.5~40시간)	서울 30% 지방 50%
	시간제		주19~20시간	
복지 일자리	참여형		주14시간 이내 월56시간	서울 30% 지방 50%
	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주5일 (23.5~25시간)	전체 80%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주5일 (23.5~25시간)	서울 30% 지방 50%

* 자료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홈페이지(http://vr.koddi.or.kr/)

(2)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28)]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은「장애인복지법」제21조(직업)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이 직업재활을 통해서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참여 증진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별로 적절하게 직업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이 고용노동부 기금사업에서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업으로 업무이관(2017. 3)되면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총괄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다.

지원사업은 일반사업수행기관 지원과 특화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구분된다. 지역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의 일반사업수행기관(총 161개소)을 통해서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 및 적응지원 등 사업비와 인건비, 훈련수당 등의 예산을 지원한다. 그리고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사업 지원, 수행기관 전문인력 교육, 직업재활조사연구사업, 수행기관 평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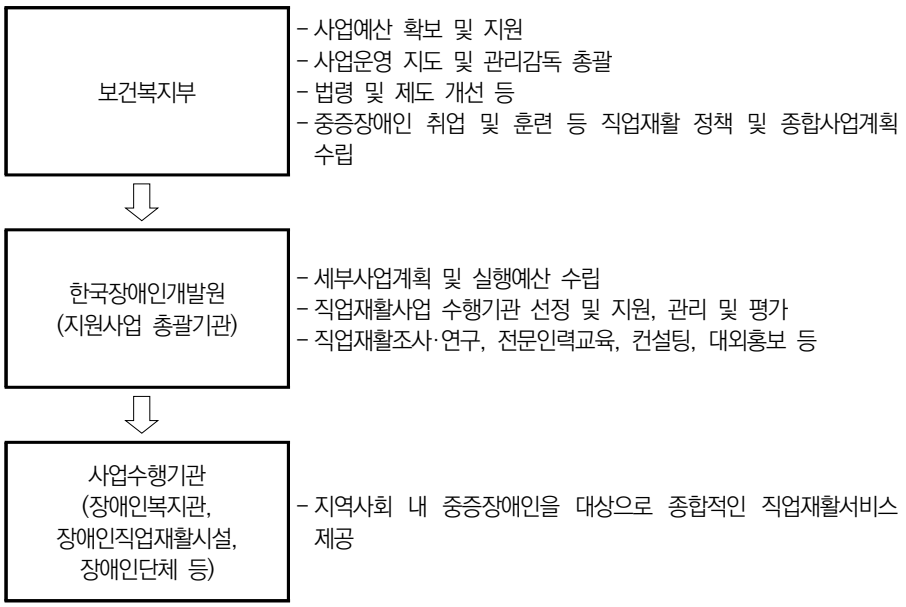
특화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은 공공·민간기관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카페 I got everything이 있고, 직업재활 컨설팅 지원사업, 지역사회 직업

28) 한국장애인중증장애인직업재활통합관리시스템(http://kr.koddi.or.kr)에 안내되어있는 사업소개내용을 중점으로 요약 정리

재활 네트워크지원사업이 있다.

〈표 Ⅱ-48〉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내용

구분	주요사업	내용
일반사업 수행기관 지원	수행기관 지원	- '19년 총 161개소 - 제공서비스 : 직업재활,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현장중심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후 적응지원 - 사업비, 인건비, 훈련수당, 취업장려금, 홍보비 등 지원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 실제근무하는 사업체 현장에서 전환기 장애청소년 및 미취업성인을 대상으로 직무훈련 실시 - 직무지원인 인건비, 운영비, 훈련수당 등 지원 - 유형 : (가) 유형 현장중심직업훈련 (나) 시범사업 유형
	전문인력 교육	지원사업 수행하는 전문인력 대상으로 신규교육, 보수교육, 직업능력평가 도구교육, 업무관리시스템 교육, 특화직종 전문가교육 등 실시
	직업재활 조사·연구	직업재활분야에서의 연구를 통해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 및 서비스 개선방안 도출
	수행기관 사업평가	지원사업 수행기관 대상으로 정기평가, 재평가, 성과평가 실시
	직업재활사업 홍보	방송·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대중에게 지원사업 인지도 제고 및 이미지 개선 도모 홍보가이드 및 서비스 브로슈어 제작·배포
	고객만족도 조사	지원사업 이용 대상자의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특화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중증장애인공공·민간 연계 일자리 창출	- 'I got everything' 카페 운영 - 카페 설치비, 장비구입비 등 지원
	직업재활컨설팅 지원사업	- 수행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수행이 필요한 조직역량강화 및 직업재활서비스 품질개선 목표로 컨설팅 지원
	직업재활네트워크 지원사업	- 지역사회 중심의 사업 수행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그림 Ⅱ-9]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그 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등이 있다.

2) 노인

노인 또는 중장년 대상의 고용노동부 정책은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이외 장년근로자 시간단축지원금,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 인재은행 등이 있다. 장년근로자 시간단축지원금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이 감소된 50세 이상의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는 만40세 이상의 중장년층에게 생애설계, 재취업 및 창업, 사회참여 기회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장년층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생애경력설계서비스는 만40세 이상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미래를 위한 경력관리, 능력개발 등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이다. 고령자인재은행은 만50세 이상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민간 무료직업소개소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를 고령

자 인재은행으로 지정하여 고령자 고용안정 및 인력수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이다.

노인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대표 정책으로 꼽을 수 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복지법 제23조~24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다.

3) 여성

여성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정책은 사업주를 위한 지원을 제외하고 여성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인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여성고용환경개선 융자사업, 경력단절여성 고용관련 세제 혜택이 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제도는 혼인·임신·출산,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되었거나 경력을 가진 적이 없는 여성 구직자를 대상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직업상담, 직업훈련, 인턴연계, 취업알선 및 취업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력단절여성 고용 관련 세제혜택은 기업 및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기업과 당사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4) 청년

청년 대상의 고용노동부 지원제도는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지원, 진로탐색, 직무능력 키우기, 일경험 기회, 해외취업 등이 있다.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지원 정책에는 청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기업에게 지원하는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외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이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만15세 이상 34세 이항의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 자산형성 방식의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청년활동지원금은 만18세~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진로탐색 제도에는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사업이 있으며, 직무능력 키우기 제도에는 청년취업아카데미, 일학습 병행제,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의 사업이 있다. 청년

취업아카데미는 전공 및 전공수준의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대학생졸업(예정)자에게 제공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진입 등 청년고용을 창출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일학습병행제는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의 의지가 있는 기업대상 지원제도 이며,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은 만15세~34세 미취업 청년 및 유·무료직업소개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세계 및 산업현장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중소·강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노동시장으로의 조기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일경험기회 제도에는 재학생 직무체험 사업이 있으며, 인문·사회·예체능계열 대학 2~3학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일경험 기회가 부족하고 취업률도 낮은 인문·사회·예체능계역 대학재학생들의 산업현장 체험기회 제공을 통한 입직기간 단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4 소결

국정과제와 우리 정부의 고용 및 일자리 정책 방향을 분석한 결과, 좋은 일자리,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안전한 일터, 차별없는 좋은 일터와 같은 용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고용 및 일자리 지원 정책은 사업별, 대상자별로 매우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고용 및 일자리 정책은 장애인 고용을 하는 사업주를 위한 정책이 더 많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일자리창출, 고용안전망, 직업능력개발 정책에 다소 아쉬운 점은 이러한 정책들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이지만, 장애인 역시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장애인 대상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장애인 고용 및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지원 정책 외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에서도 장애인이 정책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중 자신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업알선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고용 및 취업알선을 확대하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정책에서 지역의 장애인을 고용하여 우수사례를 확산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 각 지역마다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특성별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하고 있었으며, 지역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과정을 평가하는 추진체계를 갖추는 지자체도 있었다.

또한 대상자별 고용 및 일자리 정책은 장애인, 노인, 여성, 청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여성이나 청년의 경우에는 고용 및 일자리 정책이 다양하지 못하고 제한적이며, 취업준비단계나 실업자를 위한 한시적이고 일시적 지원 정책에 머물러 있어 다소 제한점으로 보여진다.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Ⅲ. 해외 장애인 고용 및 일자리 정책 현황

1 일본

1) 장애인 일자리 정책과 제도

일본의 장애인과 관련된 고용정책은 크게 일반고용과 보호고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고용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기초해 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자신감을 갖고 자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반 사업장에 대해 고용된 노동자의 2.0%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금(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또,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는 '조정금(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고 있다. 이렇게 납부금을 토대로 각종 기금을 조성,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지원인 등이 필요한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표 Ⅲ-1〉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른 사업주 지원 조치 내용

사업주에 대한 조치		
고용의무제도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고용률에 상당하는 신체장애, 지적장애의 고용 의무화 명기 민간기업 ---------- 2.0% 국,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 ---------- 2.3% 시·도 등의 교육위원회 ---------- 2.2% ※ 대기업 등에 있어서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회사(특례자회사)를 설립한 경우 등, 고용률 산정 특례도 인정 ※ 정신장애(복지카드소유자)는 고용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각 기업의 고용률에 산정하는 것은 가능
납부금 제도	납부금, 조정금	장애인 고용에 따른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 조정을 도모 ○ 장애인고용납부금(고용율 미달성 사업주) 부족 1인당 월 5만엔 징수(적용대상: 상시노동자 10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한 조치		
		○ 장애인고용조정금(고용률 달성 사업주) 초과 1인당 월 2만7천엔 지급 (적용대상 : 상시노동자 100인 초과) ※상시노동자 100인 이하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포상금제도 존재 ※장애인을 4% 또는 6인 중 많은 수를 초과해 고용한 경우 초과 1인당 월 2만1천엔 지급 ※이외에도 재택취업장애인에 일을 발주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특례조정금 특례 포상금제도가 존재
	각종 조성금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시설 설치, 근로지원인 배치 등에 조성금을 지급 장애인 작업시설 설치 등 조성금 장애인 활동보조 등 조성금 등

출처 : 厚生労働省(2013) 障害者雇用促進法の概要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장애인에게도 〈표 Ⅱ-4-2〉와 같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들이 일반 사업장에 고용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이나 직업소개, 직장적응원조자 등의 직업재활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주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할러워크에서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구인 개척을 실시,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장애인직업센터에서는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직업평가, 준비훈련, 잡코치 파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취업 된 장애인의 생활적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취로·생활지원센터를 설치, 각종 상담과 생활상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있다.

〈표 Ⅲ-2〉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른 장애인 당사자지원 조치 내용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조치	
직업재활 실시 등에 대한 조사	지역취로지원관계기관에서 장애인 직업생활에 있어서의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시책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며 추진 ○ 할로워크(전국 544개소) 장애인의 상태에 따라 직업소개, 직업지도, 구인개척 등 ○ 지역 장애인 직업센터 (전국 47개소) 전문적인 직업재활서비스 실시(직업평가, 준비훈련, 잡코치 등) ○ 장애인 취로·생활지원센터(전국 324개소) 취업과 생활 양면에 걸친 상담지원 등

출처 : 厚生労働省(2013) 障害者雇用促進法の概要

한편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호고용제도는 '장애인종합지원법'에 기초해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사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곤란한 장애인에게 생산활동이나 기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에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호고용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보호고용제도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정부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호고용을 위해 일본은 3가지 유형의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의 직업능력과 직업에 대한 욕구 등을 토대로 〈표 Ⅱ-4-3〉에서와 같이 취로이행지원, 취로계속지원 A형, 취로계속지원 B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Ⅲ-3〉 일본의 보호고용 유형

구분	주요 기능
취로이행 지원시설	- 취로를 희망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으로 일반 사업장에 고용되는 것이 가능한 장애인에게 생산활동, 직장체험은 물론 기타 활동의 기회를 제공 - 취로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 구직활동 지원, 기타 적성에 맞는 직장개척, 취업 후 직장정착에 필요한 상담 제공 등
취로계속 지원 A형	- 일반사업장에 고용되는 것이 곤란한 장애인으로 고용계약을 기초로 계속적으로 취로활동이 가능한 65세 미만의 장애인에게 생산 활동 및 기타 활동의 기회를 제공 - 취로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과 기타 지원 등을 실시
취로계속 지원 B형	- 일반사업장에 고용되는 것이 어려운 장애인과 일반사업장에 고용되었던 장애인 중 연령, 장애상태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해 일반사업장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 그리고 취업이행지원을 통해서도 일반사업장 고용이 안되는 장애인 대상 - 기타 일반사업장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생산활동 및 기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로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과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2) 서비스 전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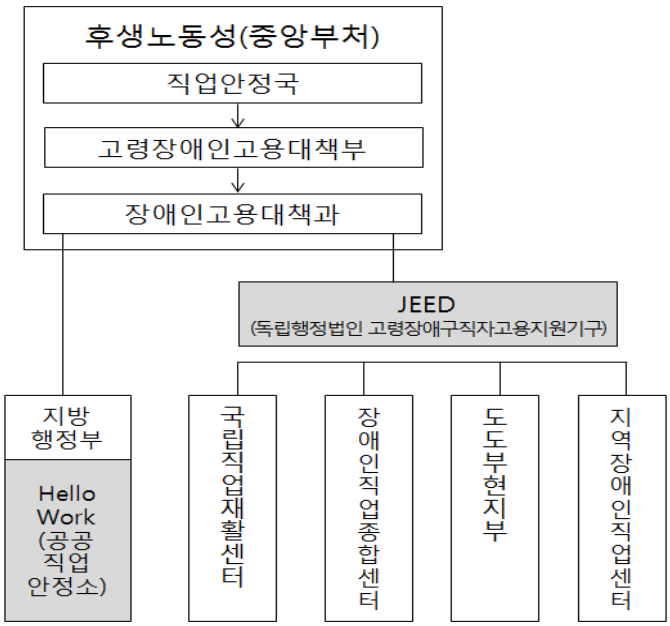
(1) 장애인고용 정책 입안과 관련한 주요 정부 부처

일본의 고용·노동과 관련한 정책 담당 행정부처는 후생노동성(厚生勞働省)이다. 2001년 1월 후생성과 노동성의 두 중앙부서를 통합하여 발족하였다. 후생노동성에서 장애인고용과 정책 집행은 '직업안정국'이 관할하며 산하에 '장애인고용대책과'가 있다. 장애인고용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후생노동성 설치법 제9조에 따른 '노동정책심의회(장애인고용분과회)'가 있으며, 장애인 고용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각종 연구회가 있다. '노동정책심의회(장애인고용분과회)'는 관련 전문가, 노동자 측 대표, 사용자 측 대표, 장애인 측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안정국' 산하에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인 공공직업안정소(Hello Work)가 설치되어 있다.

후생노동성 산하의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시설 등 기관'에는 국립장애인재활센터가 있으며, 후생노동성이 소관하는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독립행정법인으로 고령·장애·구직자고용지원기구(JEED)가 있다. 이와 같은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서비스 전달체계는 큰 변화 없이 초기부터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Ⅲ-1] 일본 후생노동성의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조직도

(2) 장애인 고용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

장애인 고용을 추진하는 행정기관은 여러 관계 기관의 유기적인 상호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공공직업안정소(Hello Work), 독립행정법인 고령·장애·구직자고용지원기구(JEED), 장애인취업·생활지원센터 등이 있다.

- 공공직업안정소(Hello Work)

실제 장애인 고용을 추진하는 행정기관은 후생노동성의 산하 기관으로 전국 도도부현마다 1개소의 노동국이 설치되어 있으며, 직업안정부 직업대책과가 장애인 고용을 담당한다. 관할지역을 분담하는 창구로서 공공직업안정소(Hello Work)가 출장소를 포함하여 전국에 544개소 설치되어 있다. 후생노동성의 지시를 받아 도도부현 노동국의 창구 기능을 수행하며, 고용 보험, 직업상담 소개, 장애인 구인확보, 고용률 달성지도 등을 주로 담당한다.

공공직업안정소(Hello Work) 창구는 「직업소개부분」, 「고용대책부문」, 「고용보험 등」으로 나뉜다. 기업의 장애인고용추진은 고용대책 부분의 '고용지도관'이 담당한다. 고용률 달성을 행정지도하는 동시에 기업의 달성 노력을 지원한다(一般社団法人障害者雇用企業支援協会, 2014). 공공직업안정소(Hello Work)는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한 장애인고용 촉진과 관련한 조성금의 창구 기능을 담당한다. 직업상담 소개와 관련해서는 전문 직원·상담원이 취직을 희망하는 장애인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상세한 직업상담을 하며 취직한 뒤에는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안착지도도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나 고용하려 하는 사업주에게 고용관리 상의 배려 등에 대한 조언이나 필요에 따라 지역장애인직업센터 등의 전문기관에 대해 소개 한다.

- 독립행정법인 고령·장애·구직자고용지원기구(JEED)

독립행정법인 고령・장애・구직자고용지원기구(Japan Organization for Employment of the Elderly,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Job Seekers, JEED)는 고령자 고용의 확보, 장애인의 직업적 자립 추진, 구직자 그 외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해 고령자, 장애인, 구직자, 사업주 등에 대해 종합적 지원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전신은 1971년 발족한 장애인고용촉진협회(사단법인 장애인고용촉진협회)이다. 1988년 일본장애인고용촉진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03년 독립행정법인으로 바뀌었다.

- 장애인취업·생활지원센터 등

장애인취업・생활지원센터는 민간기관으로 한국의 직업재활수행기관과 유사하

다. 장애인의 생활상담과 직업생활을 포함한 취업알선 사업을 하고 있다(남용현, 2011). 장애인취업·생활지원센터는 취업 및 취업에 수반되는 일상생활상의 지원을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목적으로 센터 창구 상담 및 직장·가정방문을 한다. 2002년 사업개시 21개소였던 센터가 2015년 8월 현재 327센터로 확대되었다.[29] 이외 내각부에서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용 취업 분야의 단독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정리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3) 지역고용정책과 산업정책·복지정책의 연계

일본에서 지역고용정책이 본격화한 것은 2000년 전후부터이다. 이전에는 중앙정부가 고용에 책임을 진다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 스탠스였다. 그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책임을 나누어지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고용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그에 상응하는 재량을 갖게 되지만, 정책 입안에서 실행 및 감독까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고용정책에 관한 한 전통적으로 "작은정부"를 표방해 왔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용관련 기능은 말할 것도 없고,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고용관련 기능 자체도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이를 상쇄하면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고용창출과 노동력의 산업간/지역간 배치를 이끌었던 것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산업정책이었다. 신산업의 창출 및 산업의 적정 배치를 통한 고용문제의 해결, 이것이 일본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스탠스였던 것이다. 하지만 1980년대까지 원활하게 기능하던 것처럼 보였던 이런 메커니즘이 버블의 붕괴를 거쳐 1990년대 이후 기능 부전에 빠지고 말았다. 이것이 지역고용정책을 본격화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니즈에 적합한 산업과 고용을 창출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지역의 자원과 지역의 니즈는 지역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지역경제권과 관계된 광역자치단체의 정책기능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광역자치단체 스스로 산업정책과 연계해 고용정책을 입안, 실시할 것이 요구된 것이다.

한편 고용은 복지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종래 일본은 사회보험에

29) 厚生労働省「障害者就業・生活支援センター」
http://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600000-Shokugyouanteikyoku/0000126376.pdf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odi.or.kr

의거해 질병(“건강보험” 및“국민건강보험”)과 “고령후생연금” 및 “국민연금” 리스크에 대응하는 한편 으로 공적부조는 억제하는 정책을 채택해 왔다. 고용을 통한 소득 확보 자체가 공적부조를 예방하는 것이라는 정책 스탠스를 취해 온 것이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고용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으면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동시에 비정규고용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공적부조 수급자도 증대되었다. 따라서 공적부조 수급자나 그 대상자로 될 가능성이 높은 층 중에서 가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찾아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들은 일반 구직자와는 달리 장애와 같은 쉽게 취직하지 못하는 요인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다 세심한 매칭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 세심한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는 무엇보다도 기초자치단체가 갖고 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 스스로가 복지와 연계해 세심하고 다양한 매칭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요구되었다. 광역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광역 차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① 오사카 지역사례를 통해본 지역 독자적 고용정책 전달체계

일본은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고용정책에 의거하면서도 지역은 나름대로 독자적인 고용정책을 모색하고 실행해 왔다. 이 중 선구적인 사례인 오사카 지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고용정책은 크게 보아 두 가지 흐름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지역에서 고용기회를 창출해 이를 지역 구직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고용의 “창출”, 즉 노동시장의 외연의 확대에 중점을 두는 정책이다. 또 하나는 복지 수급자를 개인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그들을 고용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부가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의 제공 즉 노동시장 밖에 있는 사람들을 노동시장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중점을 두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면 통상적인 노동시장 안에서 구직과 구인을 연결하는 매칭 사업 자체는 기본적으로 공공직업안정소로서의 헬로워크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통상적인 직업안정사업만으로는 장애인과 같이 쉽게 취직하지 못하는 층이 발생해 그 수가 늘어난 점에 있다. 장애인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밖에도 흔히 ‘프리타’로 불리는 젊은층이나, 재취직이 쉽지 않은 중년/고연령층, 그리고 모자가정의 모친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다수가 취직할 의사는 갖고 있으나 구인 측의 요구와 일치하지 않는 점 등 때문에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 기존의 헬로워

크를 통한 취직경로로는 매칭이 용이하지 않은 이들 “취업곤란자”를 정책타깃으로 삼은 점에 오사카 지역의 독자성이 있다. 취업 곤란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실시함으로써 지역의 고용수준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이 정책의 의도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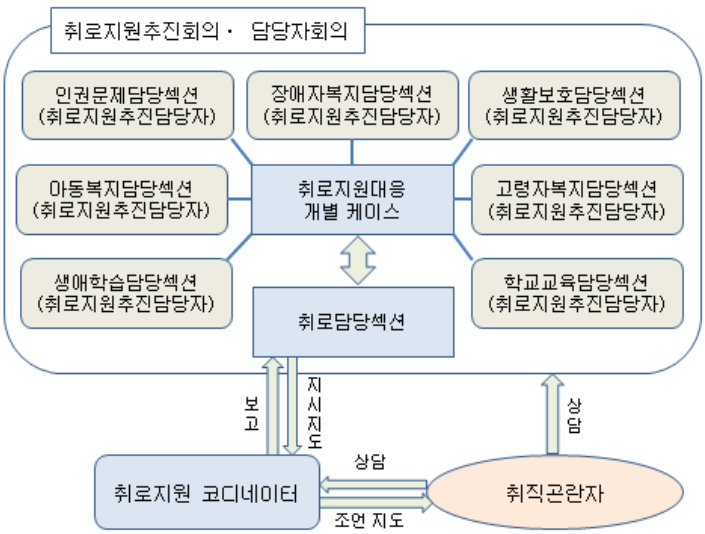
역사적으로 오사카 지역은 피차별 부락민인 “도와(同和)” 문제가 심각한 지역의 하나였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통상적인 매칭 이외의 부가적인 지원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수행하는 경험과 능력을 일정하게 갖추어 왔다. 그런 와중에 2000년 4월 지방분권추진일괄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의해 직업안정행정은 광역자치단체의 손을 떠나 중앙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업무로 전환되었다. 반면 개정된 고용대책법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고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를 명기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독자적인 고용정책을 책정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마침 같은 시기에 “사회적 원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의 존재방식에 관한 검토위원회 보고서가 공표 되었다 이보고서는 사회적 통합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사카 지역의 취업곤란자에 대한 취로지원이 구체화된 것이다. 2000년 3월 “자립 및 취로지원 방책 검토 위원회”의 정책제언이 이루어졌다. 이에 의거해 2000년과 2001년에 걸쳐 부(府)내의 이바라기시(茨木市)와 이즈미시和泉市)에서 “지역취로지원사업”의 모델사업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2002년도부터 오사카부(府) 전역에 걸쳐 지역취로지원사업이 개시되었다.

이 사업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일할 의사가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취로 저해요인 때문에 취로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정촌이 고용 및 복지 정책 등을 통해 종합적인 힘을 발휘함과 동시에 헬로워크를 비롯한 관계기관 등과 협력, 연계함으로써 지원대상자의 자립과 취로를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사업주체는 시정촌이 된다. 다만 시정촌 자신의 관계 부서 간은 물론이고 부(府)의 기관이나 중앙정부의 기관 및 민간부문과도 연계해 종합적이고 횡단적인 대응을 할 것이 강하게 요구된다. 이 사업에서 ‘지원기관’으로 설정되어있는 부府)와 실시기관으로 설정되어 있는 시정촌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부(府)는필요 경비의 2분의 1을 보조금으로 각 시정촌에 지급한다. 당연히 남은 2분의 1은 시정촌이 독자적으로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으로 부(府)는 시정촌에 대해 관련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후술하는 “취로지원 코디네이터”의 육성이다. 이 사업

에서는 실제로 대상자에게 개별적인 지원을 할 코디네이터의 육성, 배치가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들을 "코디네이터 양성강좌"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육성할 임무가 부(府)에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전제로 지역취로지원사업의 실시 스킴을 취로지원추진회의·담당자회의 및 취로지원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나타내면 [그림]과 같다.



자료: 田端博那(2006).

그림에서 보듯 시정촌은 이 사업을 위해 각각의 지역 내에 지역취로 지원을 위한 기구(대표적으로는 '지역취로지원센터')를 설치해야한다. 지역취로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취로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을 위해 시정촌에 따라서는 시정촌 자신의 관련 부서 간에 혹은 헬로워크 등 관련기관/단체와 함께 "지역취로지원추진회의"와 같은 조직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즈미시의 경우는 장애인·아동·고령자 등의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와 취로를 담당하는 부서 외에 생활보호 담당 부서, 인권 담당 부서, 학교교육 담당 부서, 생애학습 담당 부서 등 관련 부서 전체가 모여 지역 취로지원 추진회의를 열고 지원대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으로 "취로지원 대응개별 케이스검토"를 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서 개개인의 속성과 니즈에 맞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검토 결과, 시정촌의 범위를 넘어선 광역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는 오사카부(府)가 관장하는 '케이스연락협의회'에 통보해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지역취로지원센터에는 취로지원 코디네이터가 배치되어 취직곤란자의 구직 및 고용에 관한 상담에 응하게 된다. 동시에 취로지원 코디네이터는 헬로워크 등 유관기관과의 조정 결과나 '개별케이스검토'의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 개개인의 사정을 감안한 "취로 서포트 플랜"을 작성하게 된다. 플랜 작성에 있어서는 관계기관 외에도 각종의 지원단체, 지역기업, NPO, '워크즈컬렉티브' 노동자 협동조합 등을 포함해 지역내 사회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 요구된다. 취로 서포트플랜이 작성되면 이것이 실현되도록 코디네이터는 적절한 지원을 수행한다. 필요한 기능습득 등을 도와주는 외에, 관계 방면에 연락해 취업체험 기회를 마련하거나, 헬로워크 및 사업소와 접촉을 갖고 적당한 취로의 장을 확보하는것 등이다. 플랜의 실시가 끝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대상자를 사후지원 하는 것 역시 코디네이터의 주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다.

그 실적을 살펴보면, 2002년도에 18개 시정촌에서 출발한 당해사업은 2004년도에 부(府)내44개 전시정촌에 확대된이래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10년도의 경우, 지역취로지원센터의 설치는 43개 시정촌 59개소, 코디네이터의 배치는 115명이다. 센터의 이용 수는 신규상담건수가 5,319건, 재(再)상담건수가14,543건이다. 그밖에 컴퓨터를 통한 구인검색 등의 서비스 이용도 다수에 이른다. 이용자 수는 6,487명, 그중 중고연령층이 3,865명, 젊은층이 1,101명, 모자가정의 모친이 496명, 장애인이 592명, 기타가 524명이다. 이 들 중 취로가 실현된 사람 수는 1,419명이다.

2. 부(府)와 시정촌 각각의 독자적인 대응

지역취로지원사업 외에도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오사카부와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시정촌은 각각 일상적인 지역고용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오사카부의 시책부터 살펴보자. 부(府) 자신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직접실시 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정책의 타깃은 취업 곤란자에 설정되어 있다. 다만 지역취로지원사업과 달리 스케일 메리트를 활용해 취업 곤란자를 대상별로 세분하고 각각의 속성 및 니즈에 기반한 보다 세심한 지원메뉴를 제공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부(府)가 실시하는 취직곤란자 지원의 거점시설은 'OSAKA 시고토관(館)'이다. 스케일 메리트를 최대화하는 한편으로 '원스톱'의 이점을 꾀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한곳에 모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설은 '게이트'에 해당하는 '종합창구'와 세분

화된 대상자별 지원 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종합창구는 직접 혹은 전화로 상담을 해 온 지원대상자에게 각각의 속성 및 니즈에 따라 적절한 지원시설로 유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상자별 개별 지원시설로는 '젊은층 취로자립지원센터 니트 서포트클럽)', 'JOB카페 OSAKA', '고령자직업상담플라자', 'JOB플라자 OSAKA'등이 있다.

이 중 젊은층 취로자립 지원센터(니트 서포트 클럽)는 니트(NEET)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취로에 관한 상담 및 카운셀링을 실시한다. 취로에 관한 의욕을 북돋우고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이 두어진다. 한편 JOB카페OSAKA는 34세까지의 젊은층을 대상으로 취직에 도움이 되는 강좌나 세미나를 개설하고 각종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바로 옆에 헬로워크의 일종인 '헬로워크 JOB카페'가 병설되어있어 취직의사가 있는 젊은층은 곧바로 구인정보를 제공받고 직업상담 및 직업소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반면 고령자 직업상담 플라자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구인정보 제공 및 직업상담, 직업알선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대해 JOB플라자 OSAKA는 장애인, 모자가정의 모친, 홈리스 등을 대상으로 상담과 카운셀링 및 각종 세미나 개설에서부터 구인개척 및 무료직업소개에 이르기까지 취직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JOB플라자OSAKA는 이와 동시에 시정촌이 각각 수행하는 '지역취로지원사업'을 지원하는 역할도 맡는다. 지역취로지원사업 외에 시정촌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고용관련 시책으로는 무료직업소개시설의 설치 운영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즈미시(和泉市)의 경우 시정촌으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료직업소개를 시작했다. 시청 내에 '이즈미시 무료직업소개센터'를 개설해 직업상담 및 직업알선 업무를 개시한 것이다. 시청 내에 배치된 취로지원 코디네이터와 연계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원스톱' 고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태세를 갖추었다 하겠다. 다만 무료직업소개 서비스를 실시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시정촌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현재로서는 실시 시정촌의 수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2 독일

1) 장애인 일자리 정책과 제도

독일의 장애인고용정책의 주요대상은 중증장애인이지만 사회법전(Sozialgesetzbuch : SGB)은 준중증장애인인도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인정은 의학적 관점에서 장애정도(GdB)를 평가하여 장애 종류와 원인에 상관없이 장애 정도가 50% 이상일 경우이다. 그리고 장애정도가 30% 이상~50%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장애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 노동사무소, 통합사무소, 재활전문가, 중증장애인대표 등의 협의를 통해 중증장애인에 준하는 준중증장애인으로 인정한다(유완식 외, 2012).

독일은 1884년 산재보험법에서 '연금에 앞서 재활'(Rehabilitation vor Rente)이라는 기본 원칙 하에 고용주의 재해보상책임을 규정하고 재활에 초점을 맞춘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장애 관련 법령은 1919년 제정된 '중증장애인 고용에 관한 법령(Verordnung über die Beschäftigung Schwerbeschädigter)'으로 근로자의 1%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의무고용제도[30]이다. 이 법은 1924년까지 재정을 통해 발전하였고, 2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2%의 중증장애인 고용 불이행 시 고용의무부담금(Ausgleichsausgabe)을 강제하고 중증장애인 해고 보호를 골자로 하는 '중증장애인 고용에 관한 법'이 1953년 제정되었다(나운환 외, 2013).

이후 1980년대에는 '80년대의 재활'이라는 기본이념 아래 연방정부 차원에서 중증장애인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과 보호작업장 설치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의 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2000년 10월 1일 '중증장애인 실업퇴치를 위한 법'이 제정되고, 2002년 10월까지 중증장애인 실업자 수를 5만 명 이상 줄이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설정한다(최종철, 2004). 2001년 7월 1일에 모든 사회보장과 복지 관련법이 사회법전(Sozialgesetzbuch : SGB, 1권~12권)으로 통합되었다. 장애인직업재활 관련 주요 법은 사회법전 3권(고용촉진)과 9권(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참여)에 집중되어 있다.

중증장애인의 직업훈련과 고용은 대부분 일반 사업체나 노동시장이 아닌 보호된

30) 현재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공공 및 민간부문 사업자에 대하여 의무고용률 5%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odi.or.kr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보호된 직업훈련기관은 청소년 직업훈련원(BBW), 직업촉진훈련원(BFW), 장애인작업장(WfbM)이다. 청소년직업훈련원은 독일에 약 52개 설치·운영되고 있다. 선천적 또는 후천적 장애로 인해 특수학교나 정규학교 졸업 후 정규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원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매년 약 5,000명의 청소년이 청소년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을 시작하며 대부분 학습장애인(한국의 지적장애인 3급 정도)과 정신장애인에게 직업탐색 및 실습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직업훈련원은 기관 내부에 이론을 배울 수 있는 직업학교와 동시에 실제를 배울 수 있는 직업현장 영역을 갖추고 있으며 훈련 기간은 2~3년, 훈련 기간 동안 100유로의 훈련수당이 지급된다. 직업훈련 기간 동안 장애인 훈련생에게 기숙사나 공동생활가정, 독립주택 지원하여 일상생활 처리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적·심리적·사회적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여 총체적인 직업재활이 이루어지게 한다. 직업훈련법 제25조(§25 Berufsbildungsgesetz : BBiG)를 근거로 직업훈련 영역과 작업기능이 미흡한 장애인을 위해 직업훈련법 제48조(§48 Berufsbildungsgesetz:BBiG)와 기능훈련법 제42b조(§42b Handwerksordnung: HwO)에 따른 보조원직업훈련을 편성하고 훈련 직종 노인요양보호사, 건축설계, 사무 및 사무부조, 여성양재, 전기, 자동차의자 설치사 등 매우 다양하다. 청소년 직업훈련원을 거쳐 일반 노동시장에 고용되는 비율은 75% 이상으로 많은 편이다(Lienemann, 2012).

직업촉진훈련원(Berufsfoerderungswerk : BFW)은 일반적으로 훈련대상자는 직업병이나 사고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여 더이상 기존의 직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자로 사전 직업 경험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전 독일에 31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이론과 실제를 직업촉진훈련원에서 제공하고 일반 사업체 실습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의료적, 사회교육적, 의료적 전문서비스 제공은 청소년 직업훈련원(BBW)과 동일하며 사전 직업경험으로 훈련 기간은 2년으로 직업탐색 및 실습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관련 재활수행기관은 국민연금, 직업공조회, 노동청, 공적 의료보험이며 직업훈련비용 부담하고 있고 훈련직종은 25개 이상 상공연합회 자격시험 관련 직종으로 편성되며 그 외 자격증이 부여되는 직무역량 교육을 제공한다(Lienemann, 2012).

장애인작업장(Werkstatt fuer behinderte Menschen : WfbM)은 일반노동시장에 고용기회를 얻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적·치료적·사회적·심리적 재활서비스를 비롯하여 직업훈련과 일자리 제공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작업장 운영규정

(WVO §7)에 따르면 최소 120명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작업장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 작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은 준근로자의 위상을 가지고 독일 정년퇴직 연령까지 일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장애인이 원한다면 정년퇴직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다. 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는 동안 개인 능력에 따라 임금을 받고 정년퇴직 이후엔 국민연금이나 기초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다(김진우 외, 2016).

2) 서비스 전달체계

독일의 장애인 고용 관련 주무부처는 연방노동사회부(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 BMAS)이며, 산하기관으로 노동행정 및 고용보험의 담당기관인 연방노동청(Bundesagentur für Arbeit : BA)이 있다. 연방노동청은 본부, 지방노동청 10개, 지방노동사무소 156개, 출장소 303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업무는 고용사무소(Arbeitsamt)와 통합사무소(Integrationsamt)가 전담하고 있다. 고용사무소(Arbeitsamt)는 우리나라의 고용안정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직업상담, 직업알선, 직업훈련 촉진, 고용창출 조치, 실업수당 및 실업 부조 등 고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고용의무제도 감독, 취업알선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남용현 외, 2010).

통합사무소(Integrationsamt)는 사회법전 제9권에 근거한 기관으로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업무만을 전담하는 곳이다. 부담금 징수 배분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해고보호 업무를 담당하며 고용주와 장애인에 대한 각종 고용서비스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취업알선 등 직접서비스는 수행하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 24개의 통합사무소와 16개의 지역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각 주(州)에 설치된 통합사무소는 독립행정의 원칙에 의거 독립·자율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각 주(州)의 통합사무소는 동일한 조직체계를 갖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부담금 징수 배분, 고용주 및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 법률자문, 상담 및 평가, 해고 보호, 보조기기 관련 기술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남용현 외, 2010).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을 위한 재원의 출처는 연방노동청 예산과 사회보험, 장애인의무고용 조정금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은 조정금이다. 독일은 중증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고용주들이 납부하는 조정금 일부로 조성된 조정금 기금(Ausgleichsfonds)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조정금 기금은 연방노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odi.or.kr

동사회부(Bundesministeriums für Arbeit und Soziales : BMAS) 산하에 설치되어 있어 기금에 관한 관리 감독 업무는 연방노동사회부가 수행하고 있으나, 조정금의 징수 분배업무는 통합사무소가 수행하고 있다. 조정금기금은 주로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촉진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남용현 외, 2010). 2015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해 지출된 조정금은 약 520억 유로(한화 약 52조 원)이다.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위한 사업체 지원이 200억 유로 정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통합프로젝트(15.1%)와 통합전문가 지원서비스(14.8%) 순이다(BIH, 2016).

3) 고용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 경제의 역할

주정부(Land)와 시(kreisfreie Stadt)、군(Landkreis) 등 지방자치단체(Kommune)는 장기실업이나 취업 무경험 등으로 취업능력이 실업급여Ⅰ수급자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실업급여Ⅱ 수급자 대상 고용센터(Jobcenter)를 운영한다. 지자체는 고용센터를 통한 고용지원서비스 외에도 구직자 대상 돌봄 및 교육비 지원과 주거보장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또한, 사회적 경제는 독일 상황에서 민간 비영리 복지기관의 서비스 제공 영역을 의미한다. 민간 비영리 복지기관은 실업급여Ⅱ 수급자보다도 취업능력이 떨어지는 집단(장애인, 약물 및 알콜 중독 집단 등) 대상 취업교육과 훈련, 그리고 일상생활 조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취업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연결해주는 취업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집단은 사회적 경제 부문에서 제공하는 취업교육、훈련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때 소요 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지자체 비용 부담의 한 사례로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 Westphalen) 주가 조직、운영하는베스트팔렌-립페지역협회(Landschaftsverband Westfalen-Lippe)를 들 수 있다. 동 협회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내 베스트팔렌-립페 지역의 지방자치 연합(Kommunalverband)이며, 현재 독일 내 신체、정신장애인과 약물 및 알콜중독 집단 대상 공공부조 전달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 영역은 장애인의 주거와 취업에 도움을 주는 장애인부조 (Die LWL-Behindertenhilfe Westfalen), 중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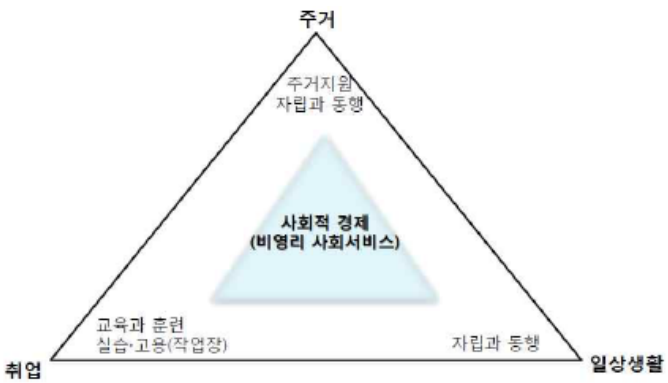
장애인을 노동자로서 지원하는 통합청(Das LWL-Integrationsamt Wesfalen), 전쟁으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센터(Die LWL-Hauptfursorgestelle Westfalen), 전쟁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손해보상권리를 찾도록 돕는 원호청(Das LWL-Versorgungsamt Westfalen)이 있다. 재정은 지역협회에 속한 9개의 자치시(kreisfreie Stadt)와 18개의 군(Kreis)의 기여금으로 구성된다. 2013년 지역협회 예산은 28억 1천만 유로(약 4조 75억 원)이다. 이 예산의 일부는 주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예산의 80% 이상은 장애인 취업과 사회통합을 위해 사용한다.

해당 시·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한 곳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지역협회의 운영 방식은 규모의 경제 효과와 함께 같은 장애가 있다면 어느 지역에 살든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추구한다. 즉, 모인 자원을 한 곳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재정이 좋은 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 간의 서비스 질의 격차가 없다.

나.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는 본래 "협동조합, 관련 기업,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등이 수행하는 경제적 활동을 포괄한다. 사회적 경제는 이윤 추구보다 회원과 공동체 대상 봉사, 독립 경영,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 수입 배분에서 자본보다 인간과 노동을 우선시한다(김영철, 2011)." 그러나 독일에서 취약계층 대상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는 조합 등이 아니라 카리타스나 디아코니 등 민간 비영리복지단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민간 비영리 복지단체가 제공하는 고용복지서비스는 소득보장 전략과 더불어 독일 사회보장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민간비영리 복지단체 제공 고용복지서비스는 보충성 원칙에 따라 국가 제공 고용복지서비스보다 앞서 제공된다. 따라서 고용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민간비영리 복지단체는 국가의 파트너로서 독자적인 노선을 걷는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주체로서 독일 카리타스연합회(Deutscher Caritasverband), 기독교봉사회(Diakonisches Werk), 노동자복지회(Arbeiterwohlfahrt), 독일 복지단체연합회(Deutscher Paritatischer Wohlfahrtsverband), 독일 적십자사(Deutsches Rotes Kreuz), 유대인 중앙복지회(Zentrale Wohlfahrtsstelle der Juden) 등 6개 단체이다(정재훈, 2007). 지자체 혹은 지역협회 등 재정지원을 받아 사회적 경제로서 민간 비영리 복지단체는 주거와 일상생활 조직, 그리고 취업 등 일종의 삼각형 서비스를 제

공한다. 첫째, 단독 혹은 그룹홈 형태의 주거를 지자체와 지역협회에서 제공하면 주거 자체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른바 자립 지원과 동행서비스다. 둘째, 대인관계 형성과 유지, 장보기, 직장 출퇴근하기 등 일상생활 조직 서비스를 제공한다. 역시 자립과 동행서비스 개념이다. 셋째, 장애인 작업장 등을 토대로 취업 교육과 훈련, 실습과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Ⅲ-2] 취업취약 집단 대상 고용복지서비스 체계

3 미국

1) 장애인 일자리 정책과 제도

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ADA)」은 장애 정의의 수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ADA)개정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mendments act, ADAAA)」에 의해 2008년 개정되었다. 이 개정법은 2009년 1월부터 유효하게 되었으며 '장애(disability)'를 정의하는데 있어 '중요한 생활활동(major life activities)' 및 '실질적인 제한(substantially limits)'을 새로이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개정법(ADA-AA)」이 장애의 정의와 관련되어 이러한 중요한 용어를 새로이 해석함으로써, 미국 대법원이 장애를 좁은 의미로 해석하여 장애인이 서비스 제공을 거절 받았던 것을 기각하고, 국회가 의도하는 대로 법이 보호해줄 수 있도록 장애인당사자, 고용주, 변호사, 판사에게 결정적인 지침을 주게 되었다(Disability Rights California, 2015).

(1) 고용정책 대상

① 직업재활서비스(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인력혁신 및 기회법(WIOA)」에 의해 개정된 「재활법(RA)」에 따르면, 직업재활서비스 수급 자격(eligibility)은 고용에 중대한 장애물이 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가지고 있으며, 고용을 준비하고, 보장·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그리고 다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직업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이다.[31] 직업재활기관은 적격한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통해 고용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하며, SSI 또는 SSDI 수급자는 절차 없이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된다.

② 고용복지연계 대상

미국의 장애판정은 의학적 평가와 잔존기능능력(Residual Functional Capacity)의

31) 미국 교육부(DOE) 사이트(www2.ed.gov/programs/rsabvrs/rsa-911-faq.html)

www.koo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근로능력평가를 함께 실시한다. RFC는 미국 사회보장청(SSA)에서 장애연금 수급자격을 심사할 때 사용하며, 수급대상자의 장애 이후 잔존기능능력평가에도 활용하고 있다(유완식 외, 2012). RFC를 이용해 잔존기능능력을 평가하여 사회보장청(SSA)에서 규정하는 장애판정리스트 해당 여부를 심사해 장애상태가 리스트에 해당되고 소득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면 보충적 소득보장(SSI)이나 장애연금(SSDI) 대상자로 선정된다. 장애가 없다고 평가되면 곧바로 직업재활서비스로 연계된다.

(2) 연방정부

①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장애인 고용서비스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정부 부처는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DOL)이며, 고용에 관한 업무는 대표적으로 고용훈련국(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ETA)에서 관장한다. 노동부의 장애인고용정책국(Office of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ODEP)은 장애인의 직업적 성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모든 정부기관 및 사업주와 협력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정책국(ODEP)은 2001년 만들어졌으며, 장애인 고용의 기회와 그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각종 실천을 개발하는데 주력한다.

②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및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장애인의 특수교육과 직업재활을 관할하는 교육부 산하 특수교육 및 재활서비스국(Office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ervices, OSERS)은 특수교육프로그램국(Office of Special Education Programs, OSEP)을 비롯해 재활서비스청(Rehabilitation Services Administration, RSA)이 소속되어 있다. 재활서비스청(RSA)은 주정부의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을 총괄하며 예산을 지원한다.[32] 「인력혁신 및 기회법(WIOA)」은 교육부 산하의 조직과 일부 프로그램을 보건사회복지부(HHS)로 이관시킴으로써 조직체계의 변화를 가져왔다. 교육부의 장애자립생활재활연구소(National

32) 「노동혁신 및 기회법안(WIOA)」의 개정에 따른 재활법 제1편(Title Ⅰof Rehabilitation Act)에 근거하며 주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직업재활프로그램(VR program)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배정받는다. 직업재활프로그램은 전국단위의 장애인 인력개발 시스템의 매우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다.

Institute on Disability, Independent Living, and Rehabilitation Research, NIDILRR)와 자립생활 및 보조공학프로그램(Independent Living and the Assistive Technology program) 업무를 보건사회복지부(HHS)의 지역생활정책실(Admi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 ACL)로 2015년에 이관하였다.

지역생활정책실(ACL) 2012년에 신규로 만들어진 부서로 기존의 노인복지실(Administration on Aging, AOA)과 발달장애복지국(Administration of Development Disabilities, ADD)을 통합하였다.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은 공통적인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노인복지실과 장애인복지정책 담당 부서들의 중복적인 업무를 없애고 부서 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따라 통합이 이루어졌다. 지역생활정책실(ACL)은 단일 조직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통합적 정책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노인과 장애인의 재가 및 지역사회 기반을 둔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제고하고자 하였다(정홍원, 심창학, 한은희, 황규성, 류진아, 2014).

(3) 주정부

미국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직업센터(American Job Center, AJC)는 우리나라 고용센터와 유사하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한국노동연구원, 2015). 직업센터(AJC)는 이전 원스톱커리어센터(One-stop Career Center)로 명명되던 기관으로 1998년 「인력투자법(WIA)」에 의해 설립되었다. 지방정부 소속 인력투자위원회(Workforce Investment Board)는 해당 지역의 고용정책을 담당하며 직업센터(AJC)의 재정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운영 및 집행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직업센터(AJC)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민간 등의 구분 없이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운영된다는 것이다. 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교육기관, 사회복지단체, NGO, 기업 등 지역 내 여러 기관이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33] 직업센터(AJC)는 구직자를 위한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경력상담, 직업탐색, 각종 검사 및 진단, 노동시장정보 및 기타 관련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인력혁신 및 기회법(WIOA)」, 「인력투자법(WIA)」 Section 188 , 「재활법(RA)」

33) 한국노동연구원(2015)에 따르면, AJC는 규모 및 업무범위에 따라 크게 종합 AJC와 계열 AJC로 구분된다. 종합 AJC(Comprehensive AJC) 근로자, 청년, 사업주에게 전반적인 고용 및 훈련서비스를 제공하며 2015년 2월 현재 미 전역에 총 1,952개가 설치되어 있다. 계열 AJC(Affiliate AJC)는 근로자, 청년, 사업주에게 고용 및 훈련서비스 제한적 제공하며, 2015년 2월 미전역에 총 823개가 설치되어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odi.or.kr

Section 504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ADA)」Title Ⅱ과 Title Ⅲ는 직업센터(AJC)의 고용서비스와 훈련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과 프로그램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인력투자법(WIA)」 Section 188은 장애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데 직업센터(AJC)가 장애인을 위해 충족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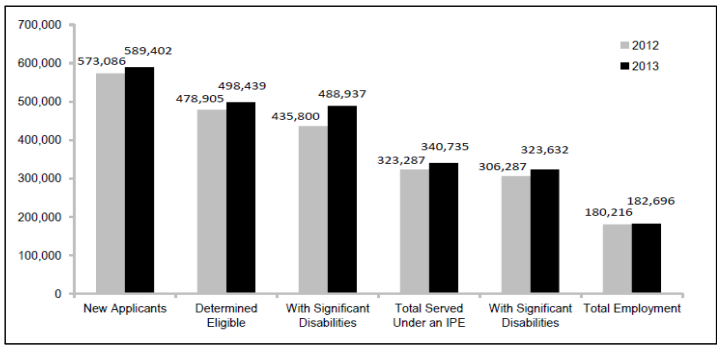
2) 장애인 일자리 유사사례

미국에서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서비스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정부 차원에서는 직업재활국(Department of Vocational and Rehabilitation Services, DVR)이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직업재활국(DVR) 산하에는 직업재활사무소(State Vocational Rehabilitation Agency, SVRA)가 있으며 명칭은 주에 따라 다르나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1차적으로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핵심기능을 담당하고 있다[34]. 직업재활서비스[35]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주정부에 소속된 직업재활사무소(SVRA)에 신청해야 한다. 미국에서 직업재활서비스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적격성(service eligibility) 단계를 거쳐야 한다. 직업재활사무소(SVRA)에 근무하는 직업재활사는 필요한 경우 직업적 능력 등 고용관련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근거하여'개별고용계획(IPE)'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 연계하여 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6년 미국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약 1.37백만명이 공식적으로 VR process에 유입되었으며 2013년 IPE를 통해 서비스를 받은 전체 인원의 약 94%가 중증장애(significant disabilities)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그림은 VR 프로그램의 주요한 지표에 대해 2012년과 2013년을 비교한 통계이다. 2013년 589,402명의 장애인이 직업재활프로그램 서비스를 신청했으며, 이 중 498,439명(84.6%)이 VR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적격자로 판정되었다. 이 중 488,937명은 중증장애인이다. IPE를 통해 서비스를 받은 340,735명 중 182,696명이 고용성과를 거두었다.

34) DVR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변경희 외(2016)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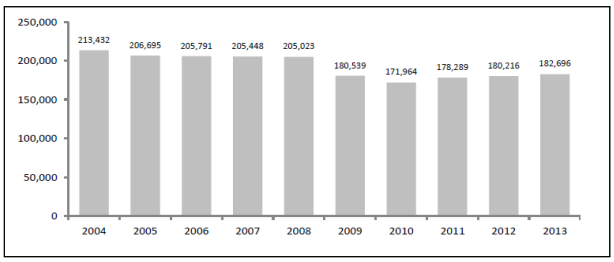
35) 직업재활서비스는 직업상담, 직업훈련, 신체적·정신적 회복서비스, 통역서비스, 교통지원, 재활공학서비스, 전환서비스, 개인지원서비스, 원격통신서비스, 지원고용 등 고용성과 측면에서 장애인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를 말한다(Section 6 of Rehabilitation Act).



[그림 Ⅲ-3] 미국 직업재활프로그램 주요 지표(2012년과 2013년)

자료: U.S. Department of Education, OSERS, RSA(2016)

아래 그림은 2004년부터 고용성과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요인에 따른 것이다. 먼저 RSA 정책은 직업재활기관이 중증장애인 특히, 최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이 질 좋은 고용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독려하고 있으며, 직업재활을 위한 연방 기금의 주정부 매칭펀드(matching fund) 및 장애인의 고용성과와 결부된 자원 활용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되고 있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6)



[그림 Ⅲ-4] 미국 직업재활프로그램 참여자의 고용 현황(2004-2013)

자료: U.S. Department of Education, OSERS, RSA(2016)

「인력혁신 및 기회법(WIOA)」의 제정에 따른 재활법 개정으로 인해 주정부의 직업재활서비스 사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청년장애인(Youth with Disabilities)에 대한 서비스 확대이다. 「인력혁신 및 기회법(WIOA)」에 따라 향후 주

정부 직업재활기관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고용 전 전이 서비스(pre-employment transition services)'를 제공해야한다. 그리고 주정부는 연방직업재활프로그램기금(Federal VR program fund)의 최소 15%를 이러한 고용 전 전이 서비스에 사용해야 하며 이 서비스를 통해 장애학생이 중등과정에서 이후 교육프로그램으로 전이 및 '경쟁력 있는 통합고용(competitive integrated employment)'을 지원해야한다. 또한 주정부 직업재활기관은 지원고용 프로그램을 위한 연방 기금 중 절반을 24세 이하 최중증장애 청년장애인(the most significant disabilities)을 위해 지원해야하며 이를 통해 이들이 경쟁력 있는 통합고용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은 최대 4년까지 서비스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둘째,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에 고용주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력혁신 및 기회법(WIOA)」는 모든 프로그램에 사업주 개입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직업재활기관은 직업재활프로그램(VR program)을 통해서 사업주가 장애인을 위한 근로 기반 학습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직업재활기관은 계획수립 시 장애인에게 경쟁력 있는 통합 고용을 위해 사업주와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경쟁력 있는 통합고용(competitive integrated employment)'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인력혁신 및 기회법(WIOA)」는 '경쟁력 있는 통합고용'이란 신규 용어를 개념화하고 있는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장애인과 유사한 임금과 급여 수준을 가지며, 비장애인 동료와 완전히 통합되는 상태에서 근무하며 동시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전일제 또는 시간제 근무를 의미한다. 「인력혁신 및 기회법(WIOA)」는 '경쟁력 있는 통합고용'을 모든 프로그램에서 촉진시키고 있으며, 직업재활법상 직업재활서비스(VR)와 지원고용프로그램(Supported Employment program)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통합고용증진위원회(Advisory Committe on Increasing Competitive Integrated Employment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는 특히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직업재활기관의 책무성의 강화이다. 「인력혁신 및 기회법(WIOA)」은 직업재활프로그램을 비롯해 법상 프로그램에 대해 공통된 고용성과 측정방식을 수립하였으며 사업성과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방인력프로그램 성과를 잘 측정하기 위해 「인력혁신 및 기회법(WIOA)」는 「재활법(RA)」 상의 성인프로그램과 청소년(youth)에 대한 각각 여섯 개의 주요한 성과 지표(primary indicators of

performane)를 개발하였다. 다섯째, 협력과 효율성의 촉진이다. 「인력혁신 및 기회법(WIOA)」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위한 다양한 요건을 만들었는데 「인력혁신 및 기회법(WIOA)」은 고용서비스, 인력개발, 성인교육을 지원하는 주된 연방프로그램과 직업재활서비스기관(VR agency)간의 협력을 개선시키고자 한다. 「인력혁신 및 기회법(WIOA)」는 네 가지 핵심 프로그램(Core program) 간의 조화를 촉진시키고 있는데 ①노동부(DOL)가 주관하는 성인실직자, 청년 대상의 일반프로그램, ②교육부(DE)가 주관하는 성인교육 및 문해(literacy) 프로그램, ③노동부(DOL)가 주관하는 와그너-페이저(Wagner-Peyser) 고용서비스프로그램, ④교육부(DE)가 주관하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이다. 인력혁신시스템의 핵심프로그램(Core program)은 필수적으로 통합계획서(Unified State Plan)를 제출해야하며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목표와 연방차원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전략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영국

1) 장애인 일자리 정책과 제도

영국은 1944년 법을 제정하고 등록장애인 제도를 운용하여 초기에는 등록된 장애인만 의무고용의 대상으로 인정하였다. 이후 「장애인차별금지법(DDA)」이 제정되고 이러한 등록장애인 제도는 운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같이 등록장애인이라는 장애인 고용정책의 1차적 대상이 가시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영국의 장애인고용정책은 그 대상에 있어서도 복지급여시스템에 조응하게끔 변동되어왔으며 사회보장과 고용·재활서비스의 연계성이 구축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정책 대상도 장애나 질병으로 작업장에서 이탈하는 근로자, 실업상태로 장애급여 시스템에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자, 장애 및 질병급여로 진입하려는 자들이 복지개혁 정책의 대상이자 고용정책의 대상자로 표적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장애기준이나 대상자로서의 특성은 복지급여별 수급요건이나 근로능력 측정기준을 통해 정의될 수 있다.

영국은 2008년부터 장애인 소득보장은 모두 고용지원수당(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ESA) 급여로 단일화되었는데 고용지원수당(ESA)은 질병에 기반을 둔 소득보조금(Income Support)과 장애급여(Incapacity Benefit/ Severe Disablement Allowance)를 대체하게 되었다[36]. 고용지원수당(ESA)은 명시적인 장애의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수급요건(eligibility)에서 지급 대상을 질병이나 장애가 근로능력(ability to work)에 영향을 미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장애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상태 즉 심각한 수준의 근로능력 손실을 장애로 정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용지원수당(ESA)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능력에 대한 의학적 사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능력평가(Work Capability Assessment, WCA)를 받아야 한다. 근로능력평가(WCA)는 급여 신청 이후 13주 이내에 시행되며 개인의 의학적 상태 또는 장애

36) 2008년 장애연금개혁 이전까지 영국의 장애인소득보장제도는 1차 사회안전망인 국민보호보험이 제공하는 정액의 장애연금(Incapacity benefit, IB)과 최후의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income support, IS)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국민보험의 장애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하던 무기여 복지연금인 중증장애인연금제도(severe disablement allowance, SDA)가 있었으나 2001년에 폐지되어 이전에 수급권을 획득한 경우만 계속 지급되고 있음(이용하, 김원섭, 신경혜, 2010).

가 개인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근로능력평가(WCA)는 전혀 새로운 것이기 보다, 과거 근로능력상실급여(IB) 하에서의 장애평가 방식이었던 개인능력평가(Physical Capability Assessment, 이하 PCA)에 근로능력 요소를 강화한 사정이라고 할 수 있다(나영희, 윤상용, 강동욱, 이진숙, 고아라, 2015). 근로능력평가(WCA)는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Limited capability for work 로서 여기에서는 급여 신청자의 고용지원수당(ESA)의 수급 여부를 결정하며, 두 번째 단계는 Limited capability for work-related activity로서 이 단계에서는 근로관련 활동 요소(Work-related activity component)와 지원 요소(Support component)로 구분하여 급여수준을 결정한다. 마지막 단계는 Work-focused health-related assessment로서 이 단계에서는 근로관련 활동 요소로 구분된 수급자 즉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취업하는데 필요한 개입의 종류 등을 결정한다.[37]

근로능력평가(WCA)를 통해 신규 급여신청자를 근로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관련 활동 요소(Work-related activity component)와 지원요소(Support component)로 구분하여,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최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과거의 근로능력상실급여(IB)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고, 근로능력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프로그램에 참여를 의무화하였다.

근로능력평가(WCA)는 노동연금부의 일선 전달체계인 잡센터플러스와 계약을 맺은 민간기관의 보건의료 전문가(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에 의해서 실시되는데 이들은 신청자가 작성한 근로능력에 관한 자기기입 평가서와 주치의가 제출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토대로 평가를 실시한다. 이들 보건의료전문가들은 노동연금부의 승인을 받은 의료자문위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잡센터플러스의 급여결정자가 신청자에 대한 고용지원수당(ESA)의 지급 여부 및 지급 수준 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의학적 측면에서의 증거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근로능력평가(WCA)는 서면평가로 수행되며, 필요한 경우 대면 평가를 실시하기도 한다.

2) 서비스 전달체계

(1)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영국은 OECD국가 중에서도 정부구조가 가장 중앙집권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노

37)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나영희·윤상용·강동욱·이진숙·고아라(2015:86) 참조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odi.or.kr

대명 외 2014). 영국에서 노동시장정책의 책무와 고용복지 연계정책을 담당하는 중앙기관은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WP)이다. 현재 영국의 고용서비스 정책은 고용연금부(DWP)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용, 연금, 장애인,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 영국 정부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크다.[38]

(2) 잡센터플러스(Jobcentre Plus)

영국은 2001년 고용연금부를 설립하고 잡센터(Jobcentre)를 고용서비스 기능에 더하여 사회보장급여와 근로연계 복지프로그램의 집행업무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기능을 개편, 명칭을 잡센터플러스(Jobcentre plus)로 변경하였다[39]. 잡센터플러스의 2002년부터 시작된 조직개편은 2008년에 완료되었으며, 종전 1,500개 사무소와 90,000여명의 인력은 800개의 통합사무소와 69,000명의 인력으로 조정되었다.[40]

잡센터플러스는 장애인고용서비스(Disability Employment Services, DES)를 통해 일반적인 고용지원을 통해 충족되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부가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소득대체급여를 청구하는 장애인에만 엄격히 제공되지는 않으며 「2010 평등법(EqA2010)」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애인에게도 제공된다. 장애인 구직자를 담당하는 전문가는 장애인고용어드바이저(Disability Employment Advisers, DEA)이며, 장애인이 일자리 정보와 워크초이스(Work Choice), 엑세스투워크(Access to Work)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지역고용정책

영국의 지역고용정책의 기본 문제의식은 지역 실정에 맞는 고용정책의 실시에 있다. 노동시장의 특성이 지역마다 서로 다른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고용정책은 효과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이고, 나아가 지역 고용문제와 그 해법에 관해서는 결국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용기관들이 가장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지식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38) 2001년 당시 교육고용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의 고용정책 부서와 사회보장부(Department of Social Security)가 통합되면서 고용연금부(DWP)가 만들어짐
39) 급여관리청(Benefit Services Agency)과 고용서비스청(Employment Service Agency)을 통합하여 설립됨
40) www.oecd.mofa.go.kr'선진국의 수요자 중심 고용-복지 연계정책 및 성공사례'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지역고용정책의 확대를 주장하는 또 다른 문제의식은 지역 고용기관들 사이의 협력적 관계의 증진, 또는 지역 파트너십의 구축에 있다. 그것은 중앙집권적인 고용정책 아래에서 중앙정부의 지방사무소들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충분한 수준의 재량권이나 자치권을 부여 받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으면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그만큼 지역 내에서 고용정책 관련 기관들 사이의 파트너십 구축이 매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지역고용정책이 가져다주는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지역고용정책의 확대를 경계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논거들로는 지역고용정책이 지역 간 불공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과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고용정책역량의 취약성 등이다. 어쨌든 이 주장들은 영국의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고용정책의 논리적 근거가 되어 왔다.

영국도 2000 년대에 들어서서 지역고용정책의 확대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고용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주도 아래 지역고용정책을 확대하는 신중한 접근법들을 취해왔다. 지역고용정책의 기금 마련을 위한 예산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수중에 있었고, 지역고용정책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 등의 성과주의적 통제권도 중앙정부의 수중에 남아 있었다. 이처럼 영국의 지역고용정책은 지역의 고용정책 전달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그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고용정책을 전달하되, 중앙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계약제를 통해서 지역의 고용정책 전달기관들을 통제하고 있었는데, 영국의 이러한 지역고용정책은 중앙집권화된 지역주의(centralized localism)라 불리고 있다(Lindsay et al., 2008; Green & Orton, 2012). 영국의 지역고용정책은 그나마 2000년대 이후에 주로 도입되었고, 그 이전에는 중앙정부가 고용정책을 입안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지침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의 지방사무소인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을 통해서 전달하는 전형적인 중앙집권적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영국의 고용정책을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는 활성화 전략(activation)이다. 활성화 전략을 투박하게 표현하면, 장기실업자와 복지수급자들을 구직수당이나 복지급여 수급을 지렛대로 이용하여 고용프로그램 참여와 적극적인 구직활동 등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노동시장으로 밀어넣는 정책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이것은 고용정책의 일부이자 복지정책의 일부, 즉 근로연계복지(welfare to work)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odi.or.kr

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고용연금부에 따르면 근로연계복지가 영국에서 활성화전략 형태를 취하게 된 주된 배경은 영국의 복지체계가 느슨하게 관리되면서 복지수급자와 장기실업자의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어서 영국정부가 복지예산을 감당하기 힘든 상태까지 악화된 점에 있다. 활성화전략은 1980년대 대처 정부 시절부터 당시 미국에서 시행되기 시작했던 근로우선(work first) 정책을 뒤따라서 실업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작되었는데, 1990년대 말 노동당 정부에 의해서 편부모, 장애인, 고령층, 청년층 등 복지수급자까지 전면적으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영국의 고용정책은 복지정책이 낳은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해서 복지정책과 긴밀한 공조 속에서 전달되었다. 활성화전략은 노동공급 측면의 관리에 초점을 맞춘 접근법이다. 노동공급 측면의 관리는 장기실업자나 복지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취업의지나 취업역량을 제고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방식인데, 영국에서는 통상적으로는 취업 역량보다 취업 의지에 더 높은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그 배경에는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해야 하는 시급성도 있었지만, 동시에 영국의 일자리들이 주로 서비스산업에 치우쳐 있다 보니 특별한 숙련 개발 없이도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쨌든 영국의 고용정책이 노동공급 관리에 치우치게 되면서 노동수요를 담당하는 경제 주체들과의 연계성보다는 노동공급자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고용전달기관들과의 공동노력이 더 많이 요청되고 있었다. 특히 고용 활성화의 지렛대로 사용될 수 있었던 복지의 전달기관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유용했기 때문에 영국의 고용정책은 복지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높은 우선권을 두었던 것이다.

복지정책과 고용정책을 통합적으로 시행할 필요성 때문에 2001년에 먼저 중앙정부의 부처체계를 개편하였는데, 고용 기능과 복지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용연금부의 설치가 그것이다. 영국의 경우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한 특성 때문에 고용과 복지의 기능적 통합도 중앙부처에서부터 먼저 이루고 있다. 그런 다음 2002년부터는 그 산하에 서비스기관(Employment Service)과 급여기관(Benefits Agency)을 통합적으로 확대 발전시켜서 잡센터 플러스를 설립해서 고용-복지정책의 통합적 전달체계로 삼았다. 결국 영국의 지역고용정책을 전달하는 핵심적인 역할은 앞서 언급된 잡센터 플러스에 부여되었는데, 잡센터 플러스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한 부처인 고용연금부의 산하기관으로서 중앙정부의 통

제를 받는 기관이다. 따라서 잡센터 플러스의 활동 무대가 지역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중앙정부의 지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정책을 개발하기보다는 전국적인 고용정책을 실행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고, 그만큼 그것은 중앙집권적 지역고용정책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잡센터 플러스의 설계 시 그것이 중앙집권적 지역고용정책 대 분권적 고용정책으로 대비되는 문제의식은 약하고,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의 통합적 운영이라는 문제의식만이 전면에 드러나고 있었다.

노동당 정부의 초기 활성화정책을 대표하는 프로그램들은 뉴딜과 고용지구(Employment Zone), '근로로 가는 경로 (Pathways to Work)' 등이다. 신노동당 정부는 보수당 정부가 도입했던 구직수당제도의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당선 이후 그 공약을 철회하고 구직수당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면서 1998년에 노동당 정부의 대표적인 활성화 프로그램인 뉴딜을 도입하였는데, 그것은 장애인, 청년실업자, 25세이상의 장기실업자, 50세 이상의 고령자, 편부모, 실업자의 배우자 등 취약계층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각 집단에 대해서 집중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반면에 고용지구는 공간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나 실업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고용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마지막으로 '근로로 가는경로'는 2003년 도입된 프로그램으로서 근로불능 복지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별화된 고용서비스의 제공과 그들의 취업활동 의무를 강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종전의 근로불능급여를 대체하여 고용지원수당(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을 도입하였는데, 고용지원수당은 근로능력평가를 통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 구직수당 수급자로 편입하고, '근로로 가는 경로' 프로그램 참여를 고용지원수당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보수당 정부와 노동당 정부의 연이은 활성화정책은 영국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해서 2005년에 이미 목표로 설정했던 고용률 75%를 달성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05년에 노동당 정부는 고용률 80%라는 새로운 도전적 과제를 내걸고 활성화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게 되었다. 활성화정책은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취업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지만, 그 취업이 단기간으로 끝나게 되어서 일자리 지속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결국 취약계층을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odi.or.kr

복지급여를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취업에 이르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안정적인 고용으로 안착시키는 데 실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들을 시도하였다. 결국 문제는 취약계층의 취업 장애요인이 복합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고용-복지체계에 대한 잡센터 플러스의 통합적 관리만으로는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것을 계기로 영국의 고용정책에서 '근로우선'에서 숙련개발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취약계층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복합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고용 정책 전달기관들의 상호 협력이 요청되고 있었다. 그런데 지역 차원의 고용정책 전달기관들은 각자 자신의 권한과 목표, 성과지표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사이의 공조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이 중앙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야 하므로 지역고용정책 전달기관들 사이의 협력을 위해서는 지역고용정책의 분권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처럼 영국에서 고용정책의 지역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잡센터 플러스의 표준적인 활성화 접근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었던 취약계 층의 고용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맥락 속에 있었다. 영국에서 취약계층의 고질적인 고용문제의 해결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의 정책 노선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고용정책의 지방분권화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위탁이다. 민간위탁이 지역고용정책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영국에서 민간위탁이 지역고용정책의 일부로 논의될 수 있는 배경은 영국에서 지역고용정책이 취약계층의 고용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었고 동시에 중앙정부가 자신의 통제 아래 고용정책의 지역화를 추진하면서 민간위탁을 통해서도 분권화된 지역고용정책과 유사한 정책적 효과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했었기 때문이다.

영국의 중앙정부가 민간위탁과 분권화된 지역고용정책을 서로 대안적인 방안으로 보고 있다는 근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의 시행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Lindsay & McQuaid(2008)에 따르면, 뉴딜과 유연 뉴딜, 고용지구, '근로로 가는경로' 등의 프로그램들이 모두 원래는 지역 기관들의 파트너십을 통해 전달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본 후 민간위탁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뉴딜 및 유연 뉴딜의 경우 당시의 고용서비스기관 주도 아래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민간기관 등을 포괄하는 지역파트너십 기반의 지배구조와 기금 사용의 재량권 확대를

통해 지역고용정책 실험을 해본 후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계약주의에 입각한 민간위탁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고용지구도 해당 지역의 전달기관들이 상호협의 아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사용의 유연성을 주는 지역화 방식의 시범 실시를 한 후 주계약자에게 표준화된 위탁계약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로 가는경로' 프로그램은 고용서비스기관과 보건의료 전달기관의 지역 파트너십에 의해 전달할 수 있도록 기금 사용의 재량권을 높여주었지만, 그 프로그램도 결국 민간기관과 비영리기관에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처럼 영국정부는 고용정책의 지역화와 민간위탁 사이를 저울질하면서 두 가지 실험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5 호주

1) 장애인 일자리 정책과 제도

(1) 장애인차별금지법

호주의 장애인의 법적 개념은「장애인차별금지법(DDA)」상에서 정의되고 있으며, 실제 고용서비스를 수급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각 판정 시스템상에서 별도로 정의되고 있다.「장애인차별금지법(DDA)」에서 장애는 개인의 신체적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부분적 또는 완전 상실, 신체 부분이 완전 또는 일부 상실, 현재 생체기능에 질병이 있는 상태, 현재 생체기능에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 개인의 신체 일부가 기능부전 또는 기형, 질병 또는 기능부전의 결과가 비장애인에게 장애로 인지되는 경우, 질병이 개인의 사고, 현상인지, 정서 및 판단에 행위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장애가 현재 존재하거나 예전에는 존재하였는데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개인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로 정의된다.

(2) 고용서비스 및 장애급여 판정

2010년 호주 정부는 장애인이 직업을 찾고 유지하는데 좀 더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지역 및 민간단체의 국가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새롭고 증진된 장애 고용서비스를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JSCI(Job Seeker Classification Instrument)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ESATs(Employment Services Assessment) 혹은 직업능력평가(Job Capacity Assessment, JCA)[41]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42] 장애인이 평가를 통해 장애인고용서비스가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센터링크(Centrelink)는 장애인에게 맞는 직업재활서비스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해 주게 된다.

41) 2006년 이전에는 장애인이 직업재활서비스 혹은 장애연금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능력테이블(Work ability Tables, WATs)를 통해 적격성 여부를 판정 받았다. 2006년 7월 이후부터는 사회보장 급여의 적격성 판정 및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등은 모두 직업능력평가(Job Capacity Assessment, JCA)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42) JSCI를 실시한 결과 근로에 상당한 장애를 갖고 있는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ESA혹은 JCA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두 가지 평가는 모두 JSA나 DES로부터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선별하는데 활용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완식 외(2012:88) 참조

2) 서비스 전달체계

(1) 주요 정부 부처 및 행정기관

호주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 맺은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공동협정(CSTDA)에 따라 고용서비스에 대한 주된 책임은 연방정부에게 있다. 연방정부의 소관 부서와 그 명칭은 여러 차례 바뀌었다. 2017년 현재 호주 연방정부의 장애인 고용 직접 관련된 부서는 고용부(Department of Employment, DOE), 사회서비스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DSS), 인적서비스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 DHS)가 있다. 그 밖에 고용에서의 차별금지를 감독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기여하는 정부 기구로 호주인권위원회(The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가 있다. 장애인고용 행정 및 서비스와 관련성이 높은 인적서비스부(DHS)와 사회서비스부(DSS)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인적서비스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 DHS)

2004년에 설립된 인적서비스부(DHS)는 보건과 복지 행정을 담당한다. 의료(Medicare), 사회보장(Centrelink program), 아동보호(Child Support program)및 재활(Civilian Rehabilitation Scheme)에 관련된 업무들을 통합 관리한다. 장애인 및 공공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의 첫 관문인 원스톱서비스(on-stop service)를 제공하는 센터링크(Centrelink)도 이 부서의 담당이다.

(3) 사회서비스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DSS)

2013년 이전의 '가족 주거 지역사회 원주민부(Department of Families,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 FaHCSIA)'에서 개칭되었다. 장애인고용서비스(Disability Employment Services, DES)를 2013년부터 담당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서비스(DES)는 2010년 3월 1일부터 호주의 장애인고용서비스의 주요한 체계인 장애인고용네트워크(Disability Employment Network, DEN)와 직업재활서비스(Vocational Rehabilatation Services, VRS)를 통합한 것으로 장애인, 가족, 보호자 및 고용주의 욕구에 부합되는 개별화되고, 유연하며,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윤보라, 2011).

또한 근로환경 개조 및 고용을 위한 수화통역(Workplace Modification Scheme and the Auslan for Employment)이 개편됨과 동시에 업무가 2013년 9월 고용부(department of Employment)에서 사회서비스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로 고용지원기금(EAF)이 이관되었다.

(4)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 센터링크(Centrelink)

센터링크(Centrelink)는 공적지원의 사회서비스를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첫 접촉점이자 관문으로 호주 사회서비스전달체계의 허브 역할을 담당한다(김성희 외, 2012).[43] 구직자의 경우 센터링크에 등록하고 일자리를 얻기에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를 받게 되며, 이 평가를 기초로 하여 적합한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직업알선업체로 연결된다. 2011년 7월 센터링크는 인적서비스부(DHS)에 통합되었으며, 인적서비스부(DHS)는 직접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은 하지 않고 구직자 분류지표와 고용서비스 평가를 통해 구직자를 등록, 분류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며, 등록 분류된 구직자는 고용부(DOE)가 관리하는 취업서비스 네트워크인 잡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JSA)에 속하는 민간기관에 의해 고용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어 있다.

구직을 원하는 장애인은 센터링크 소속의 직원을 만나 어떤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평가받는다. 그 평가는 크게 구직자 분류 지표(Job seeker Classification Instrument), 직무능력평가(Job Capacityt Assessment), 고용서비스 평가(Employment Service Assessment)로 나뉜다. 예를 들어 장애인지원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을 수급하고자 할 경우 적격성 판단을 위한 평가가 실시되고, 평가결과 장애로 인해 15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주일에 15~29시간 근무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금 대신 근로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자신의 욕구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다. 즉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에 손상이 크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비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고용서비스(DES)

43) 센터링크(Centrelink)를 중심으로 연방정부 10개 부처를 포함해서 25개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약 140가지의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전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모든 복지서비스를 연결시켜 한 지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로 의뢰되어 자신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직업재활서비스나 장애고용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 장애인고용서비스(DES)

장애인고용서비스(DES)는 2010년 3월 장애인고용네트워크(Disability Employment network, DEN)와 직업재활서비스(Vocational Rehabilatation Services, VRS)를 통합해 개편한 것으로 개편의 목적은 장애인고용서비스를 간소화시키고 불필요한 요식행위를 줄이며 구직자에게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은 고용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센터링크를 활용해 구직능력 정도에 따라 구직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잡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JSA) 또는 장애담당부서로 연계될지를 결정한다. 장애인은 센터링크를 통해서 장애인고용서비스(DES)로 연계될 수 있는데 장애인고용서비스(DES)는 구직준비, 직무훈련, 이력서 작성, 구직인터뷰, 구직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직자를 위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비스 종류는 두 가지인데 장애관리서비스(Disability Management Service)와 고용지원서비스(Employment Support Service)이다. 장애관리서비스는 장애나 질병 혹은 상해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구직을 위한 단기적 지원을 제공한다. 고용지원서비스는 영구적 장애 혹은 질병이나 상해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직을 위한 장기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고용서비스평가(Employment Service Assessment)를 통해 근로능력을 평가받고 적합서비스를 판정받아야 한다.[44] 다양한 규모의 영리·비영리 조직이 장애인고용서비스(DES) 공급자(DES provider)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과 사업주를 지원한다.

3) 장애인 일자리 유사사례

(1) Job in Jeopardy assistance

44) 장애인고용서비스(DES)는 그간 여러 개로 분산되었던 복잡한 프로그램을 (1)장애관리서비스(2010년 3월1일 이전에는 직업재활서비스)와 (2)장애지원서비스(2010년 3월 1일 이전에는 장애고용네트워크 disability employment network)로 단순화하였고, 직업능력평가 및 의뢰 과정 역시 간편하고 편리하게 구성하였다. 2011년 7월 1일부터는 JCA(Job Capacity Assessment)는 주로 장애연금지원 결정에 주로 사용되고 고용서비스에는 일차적으로 Employment Service Assessments(ESAts)를 통하여 면접을 통한 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odi.or.kr

장애,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직원이 있는 경우 장애 고용 서비스 (DES) 제공 업체가 지원하고 있다. 숙련된 장애인고용(DES)컨설턴트가 상해, 장애 또는 질병이 직원의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는 것을 돕기 위해 고용주는 물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직원을 지원하고 있다. 즉, 장애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고 직장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고 있다.

(2) National Work Experience Program

구직활동의 일환으로 장애인을 실제 작업장에 배치해 평생직장에 대한 경험을 갖게 하여 장애인들에게 직장 경험을 갖게 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고용주는 일주일에 25시간, 최대 4주까지 무급으로 장애인에게 직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가 직접 이를 시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적합한 직무에 배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적합한 직무를 추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고용주에게는 적합한 인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고용한 경우는 임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들은 직장 경험을 통해 어떻게 직장에서 적응하고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3)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 (CDP)

지역 개발 프로그램 (CDP)은 2015년 7월 1일에 시작된 원격 취업 및 지역 사회 개발 서비스로 호주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호주는 호주 원주민 등 언어적 차이가 존재하고 지역적 특성상 외딴 지역이 많아 노동정책을 일률적으로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호주 정부는 CDP를 통해 장애인들의 활동 범위를 유연하게 확장하고 다양한 기술을 연마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DP는 일 할 욕구가 있는 장애인 등 구직자들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나 활동과 연계하여 주고 그곳에서 주당 최대 25시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DP는 현재 1,000개가 넘는 지역사회를 포괄하고 있으며 호주 토지의 75 %를 차지하고 있다. CDP는 83,000명이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으로 참여하고 있

으며 약 3만5천명을 지원하고 있다. 즉, CDP는 지역사회 내 구직자, 고용주 및 각 기관 등을 위한 단일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4) JobAccess

JobAccess 는 2016년에 실시하기 시작한 것으로 장애 고용 서비스를 포함하여 장애 고용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비롯해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장애인 고용을 관리하거나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즉, 모든 장애인 고용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하는 JobAccess는 호주 사회복지국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재정적 지원, 작업장 개조, 직업 찾기 및 이직, 유연한 작업환경 조성, 직업 조언, 교육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웹사이트 개발에는 장애인, 고용주, 서비스 제공업체 및 산업단체들이 참여하여 만들어졌다.

(5) Australian Disability Enterprises (호주 장애인 기업)

호주 장애인 기업(Australian Disability Enterprises; ADE) 은 19세기부터 시작된 형태로 장애인 가족이 보호된 환경에서 장애인에게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195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 즉, 우리나라의 보호고용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 장애인을 위한 고용이 호주 정부의 국가 우선 과제로 부상하면서 보호고용이 아닌 비즈니스 서비스 모델로 전환되었다.

호주 장애인 기업은 지속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포장, 조립, 생산, 재활용, 스크린 인쇄, 식물 보육, 정원 관리 및 조경, 청소 서비스, 세탁 서비스 및 식품 서비스와 같은 업종을 하고 있다. 현재 약 20,000명의 사람들에게 지원 고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호주 사회 복지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호주 장애인 기업은 2019년을 목표로 국가 장애보험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Agency, NDIS)로 편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연간 1억80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여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공급자에게 비즈니스 생존 능력 자체 평가 도구의 개발 및 배포하고, 이사회 및 고위 관리자를 위한 전략적 거버넌스 워크샵을 개최하는 한편, NDIS 전환 컨설턴트 보조금 지급, 사례관리 보조금 지급, 직원들에 대한 임금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odi.or.kr

6 소결

지역고용정책에 관한 몇몇 해외사례를 살펴본 결과 사례국가들 사이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지역고용정책을 위한 자금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반면, 지방정부는 지역고용정책에 소규모 자금을 제한적으로 제공하거나 프로그램 · 서비스전달기관에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 실제 사례국가들 가운데 일본을 제외하면 지방정부가 자체자금으로 지역고용정책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가 자체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경우도 사업규모가 제한적이고, 중앙의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차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을 제외한 지방정부의 자체자금으로 지역고용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다만 일본의 경우 지방 수준(오사카 등)에서 광역-기초지자체 공동자금 조성으로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취로지원사업 등 독자적인 고용정책을 모색 · 실행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지방정부 재정의 취약성, 지방 정책추진역량 미흡, 중앙정부 지역사무소의 광범위한 운영 등을 고려할 때, 지역고용정책의 자금원천에서 높은 중앙정부 의존성은 단기간에 쉽게 변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취약한 지방정부 재정으로 실질적인 자체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또한 자체 프로그램의 기획·실행을 위한 지역역량을 끌어올리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금원천구조의 현실을 반영, 지역고용정책의 전달과정 및 평가에서 중앙-지방 사이에 일종의 긴장 · 갈등관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지역고용정책의 효율성과 성과 제고를 위한 방향 및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자금원천의 문제보다는 전달과정에서 지방의 재량권과 자율성이 어느 수준으로 보장되는 것이 적절한지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이다.

사례 국가 대부분은 중앙정부가 자신이 지원하는 자금을 활용 · 집행하는 지역에 대해 목적, 분야, 대상집단 등과 관련된 일정한 기준이나 조건을 부과하는 대신에 일정한 재량권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 중앙정부가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지역에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역주체들이 지역의 특성 · 여건을 잘 파악하고 있어서 지역고용정책의 프로그램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인식과 기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자금 원천문제와는 별개로 지역 재량권

확대 측면에서 분권화 흐름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역에 부여되는 재량권·자율성 정도, 중앙정부의 성과통제방식에서는 사례국가들 사이에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독일의 경우 지역의 전달기관(특히 지자체 잡센터)에 대한 재량권 정도는 비교적 큰 것으로 보이며, 영국은 일정한 틀 안에서 재량권을 보장하지만 비교적 엄격한 성과통제방식을 통해 중앙자금의 취지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반면 일본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방정부의 사업계획이 책정된 후 후생노동성의 동의를 거치는 등 지방의 재량권 행사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사례국가들 사이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중앙정부, 지역사무소, 지방정부, 산업계, 노조조직, 지역고용센터, 지역고용관련기관들을 포괄하는 폭넓은 지역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고용정책 거버넌스·전달체계를 가진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지역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위원회가 거버넌스 상위기구로서 지역고용정책을 입안·관리·감독하며, 그 아래에 지역고용센터를 비롯한 지역기관들이 정책전달을 담당하는 구조를 가진다. 그러나 지역고용정책 거버넌스·전달체계의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구조 · 성격, 구성 주체들의 위상·역할, 주도주체 등 여러 측면에서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무엇보다 지역고용정책의 거버넌스·전달체계를 주도하는 주체에서 국가별 차이가 크다. 영국에서는 지배구조와 전달체계 구성 권한이 지역에 위임되므로 지방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이며, 또한 전달체계에서는 잡센터플러스가 지역 파트너십의 일원으로 참여하지만 중앙정부 통제를 받는 지역사무소 성격으로 인해 주도적 역할보다는 보조적 역할에 그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연방고용센터 지역사무소(AA)와 지자체가 지역고용거버넌스를 주도하며, 전달체계에서는 잡센터가 핵심적 전달기관의 위상을 가진다. 일본의 경우 대부분 지역고용정책에서 지역(도도부현) 수준의 거버넌스는 지역의 노동국, 경제단체, 노조단체 등 지역주체들로 구성되는 지역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타 사례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협의회는 지역 수준에서 사업계획 책정·실시, 사업종료 후 평가, 사업중지·폐지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일본의 전달체계는 사업유형별로 차이가 있는데, 고용창출기금사업은 중앙정부 → 도도부현 → 시정촌→ 민간기업 위탁의 전달체계를 가지며, 취약계층 취로지원사업은 지방자치체가 중앙정부 자금을 받아 지역의 복지사무소와 헬로워크를 연계하여 집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고용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증대됨에 따라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정치인들이 일자리 문제를 중심적 의제로 다루는 경향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일자리창출, 고용서비스 등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프로그램의 집행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추세이며, 나아가 지역발전이나 사회보장 등의 영역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아직까지 자금 원천이나 사업기획 · 평가에 있어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최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실시하는 등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스스로 지역자원을 활용해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지역고용사업을 모색 실행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한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는 고용연계체계의 구축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는 지역의 장애인 고용체계는 복지부, 노동부를 축으로 지자체의 역할이 분절되 있는 상황이다. 즉, 지자체와 노동부 · 복지부의 연계를 통해 지역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정책과 방향을 교류하면서 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Ⅳ.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

1 경제활동 실태 총괄

2018년 5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2,495,043명 중 15~64세 연령의 장애인 경제활동인구는 689,308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52.5%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의 동일 연령 경제활동참가율보다 0.3%p 상승한 수치이다.

15~64세 전체 인구는 경제활동참가율 69.9%, 고용률 67.0%, 실업률 4.2%로 2017년 대비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은 각각 0.3%p, 0.4%p 상승하였으며 고용률은 전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15~64세 인구, 전체 인구 비교)

(단위: 명, %, %p)

구 분		15~64세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활률	실업률	고용률
			계	취업자	실업자				
장애인구	2014년	1,387,851	755,239	702,362	52,877	632,612	54.4	7.0	50.6
	2015년	1,381,918	727,485	666,345	61,140	654,433	52.6	8.4	48.2
	2016년	1,355,493	728,764	680,163	48,601	626,729	53.8	6.7	50.2
	2017년	1,382,558	721,961	680,170	41,791	660,597	52.2	5.8	49.2
	2018년	1,312,159	689,308	642,738	46,570	622,851	52.5	6.8	49.0
	증 감	-70,399	-32,653	-37,432	4,779	-37,746	0.3	1.0	-0.2
전체인구	2014년	36,082,000	24,591,000	23,667,000	924,000	11,491,000	68.2	3.8	65.6
	2015년	36,340,000	24,990,000	24,006,000	984,000	11,351,000	68.8	3.9	66.1
	2016년	36,492,000	25,167,000	24,198,000	969,000	11,325,000	69.0	3.8	66.3
	2017년	36,560,000	25,443,000	24,485,000	958,000	11,116,000	69.6	3.8	67.0
	2018년	36,793,000	25,711,000	24,633,000	1,078,000	11,082,000	69.9	4.2	67.0
	증 감	233,000	268,000	148,000	120,000	-34,000	0.3	0.4	0.0

주 1) 경활률(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100
2) 실업률 = (실업자 수/경제활동인구)*100
3) 고용률 = (취업자 수/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5월) 참조

2017년 전체 인구와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격차는 15세 이상에서 각각 26.9%p, 26.8%p인데 반해 15~64세에서는 17.4%p, 18.0%p로 나타났다. 실업률 격차는 15세 이상 -2.6%p, 15~64세 -2.6%p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15세 이상의 경우 취업, 실업의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는 922,897명(경제활동참가율 37.0%)으로 나타났다. 취업자는 861,648명으로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 비중인 고용률은 34.5%이며, 실업자는 61,249명으로 실업률은 6.6%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인구는 경제활동참가율 63.9%, 고용률 61.3%로 나타나, 장애 인구가 각각 20.0%p 이상 낮은 반면, 실업률은 4.0%로 장애인이 약 1.6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비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7%p 하락하였고, 같은 기간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은 각각 0.3%p, 0.4%p 상승한 반면, 고용률은 전년도와 동일한 61.3%로 나타났다.

〈표 Ⅳ-2〉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1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비교)

(단위: 명, %, %p)

구 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활률	실업률	고용률
			계	취업자	실업자				
장애 인구	2014년	2,449,437	970,600	906,267	64,333	1,478,837	39.6	6.6	37.0
	2015년	2,444,194	921,980	849,517	72,463	1,522,214	37.7	7.9	34.8
	2016년	2,441,166	941,051	880,090	60,961	1,500,115	38.5	6.5	36.1
	2017년	2,460,080	953,008	898,475	54,533	1,507,072	38.7	5.7	36.5
	2018년	2,495,043	922,897	861,648	61,249	1,572,146	37.0	6.6	34.5
	증 감	34,963	-30,111	-36,827	6,716	65,074	-1.7	0.9	-2.0
전체 인구	2014년	42,453,000	26,762,000	25,811,000	951,000	15,691,000	63.0	3.6	60.8
	2015년	42,975,000	27,211,000	26,189,000	1,022,000	15,764,000	63.3	3.8	60.9
	2016년	43,387,000	27,455,000	26,450,000	1,005,000	15,932,000	63.3	3.7	61.0
	2017년	43,735,000	27,828,000	26,824,000	1,003,000	15,907,000	63.6	3.6	61.3
	2018년	44,141,000	28,184,000	27,064,000	1,121,000	15,956,000	63.9	4.0	61.3
	증 감	406,000	356,000	240,000	118,000	49,000	0.3	0.4	0.0

주 1) 경활률(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100
2) 실업률 = (실업자 수/경제활동인구)*100
3) 고용률 = (취업자 수/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100
4) 증감은 '17년 대비 증감비율을 말함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5월) 참조

1) 주요 변수별 경제활동상태

우리나라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7.1%, 고용률은 44.1%인데 반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3.1%, 고용률은 21.4%로 남성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실업률은 남성 6.3%, 여성 7.4%로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남성은 74.5%, 여성 53.6%로 남성이 20.9%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성별 격차(24.0%p)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의 성별 격차 역시 전체 인구(19.8%p)보다 장애인의 경우(22.7%p)가 더 컸다. 또한 남성장애인의 고용률(44.1%)은 전체 인구의 여성 고용률(51.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 - 성별(2018년 5월 기준, 전체 인구 비교)

(단위: 명, %)

구 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활률	실업률	고용률
	인구 수	비중	소 계	취업자	실업자				
남성	1,442,391	57.8	679,694	636,557	43,137	762,697	47.1	6.3	44.1
여성	1,052,652	42.2	243,203	225,091	18,112	809,449	23.1	7.4	21.4
장애 인구	2,495,043	100.0	922,897	861,648	61,249	1,572,146	37.0	6.6	34.5
남성	21,673,000	49.1	16,146,000	15,474,000	672,000	5,527,000	74.5	4.2	71.4
여성	22,468,000	50.9	12,039,000	11,589,000	449,000	10,429,000	53.6	3.7	51.6
전체 인구	44,141,000	100.0	28,184,000	27,064,000	1,121,000	15,956,000	63.9	4.0	61.3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8년 5월) 참조

연령별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15~29세' 33.9%, '30~39세' 57.7%, '40~49세' 60.1%, '50~59세' 56.1%, '60세 이상' 24.5%로 나타났으며, 고용률은 '15~29세' 29.7%, '30~39세' 53.0%, '40~49세' 56.3%, '50~59세' 52.9%, '60세 이상' 22.9%로 나타나, '15~29세'와 '6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의 경우 '15~29세'에서 1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인구와 비교해 보면, '50~59세' 장애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전체 인구에 비해 약 22.0%p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0~39세 이상' 장애인

의 실업률은 8.2%로 전체 인구(3.7%)에 비해 4.5%p의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표 Ⅳ-4〉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 - 연령별(2018년 5월 기준, 전체 인구 비교)

(단위: 명, %)

구 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활률	실업률	고용률
	인구 수	비중	소 계	취업자	실업자				
15~29세	129,619	5.2	43,917	38,536	5,381	85,702	33.9	12.3	29.7
30~39세	137,907	5.5	79,570	73,028	6,542	58,337	57.7	8.2	53.0
40~49세	274,073	11.0	164,774	154,235	10,539	109,299	60.1	6.4	56.3
50~59세	494,877	19.8	277,758	262,022	15,736	217,119	56.1	5.7	52.9
60세 이상	1,458,566	58.5	356,878	333,827	23,051	1,101,688	24.5	6.5	22.9
15~64세	1,312,159	52.6	689,308	642,738	46,570	622,851	52.5	6.8	49.0
20~64세	1,275,253	51.1	686,302	639,738	46,564	588,951	53.8	6.8	50.2
장애 인구	2,495,043	100.0	922,897	861,648	61,249	1,572,146	37.0	6.6	34.5
15~29세	9,157,000	20.7	4,368,000	3,908,000	460,000	4,790,000	47.7	10.5	42.7
30~39세	7,390,000	16.7	5,831,000	5,616,000	215,000	1,559,000	78.9	3.7	76.0
40~49세	8,460,000	19.2	6,859,000	6,697,000	162,000	1,601,000	81.1	2.4	79.2
50~59세	8,426,000	19.1	6,550,000	6,379,000	171,000	1,876,000	77.7	2.6	75.7
60세 이상	10,708,000	24.3	4,577,000	4,465,000	112,000	6,131,000	42.7	2.4	41.7
15~64세	36,793,000	83.4	25,711,000	24,633,000	1,078,000	11,082,000	69.9	4.2	67.0
20~64세	34,018,000	77.1	25,487,000	24,430,000	1,057,000	8,533,000	74.9	4.1	71.8
전체 인구	44,141,000	100.0	28,184,000	27,064,000	1,121,000	15,956,000	63.9	4.0	61.3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8년 5월) 참조

15~29세를 청년층으로, 30~54세를 중년층으로, 55세 이상을 고령층으로 분류하여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청년층의 경활률, 고용률, 실업률은 고령층에 비해 각각 4.2%p, 1.9%p, 6.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의 고령층 고용률은 50.9%로 장애인 고령층보다 23.1%p 높고, 실업률은 2.6%로 장애인보다 3.7%p 낮은 수치이다.

〈표 Ⅳ-5〉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 - 연령계층별
(2018년 5월 기준, 전체 인구 비교)

(단위: 명, %)

구 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활률	실업률	고용률
	인구 수	비중	소 계	취업자	실업자				
청년층(15~29세)	129,619	5.2	43,917	38,536	5,381	85,702	33.9	12.3	29.7
중년층(30~54세)	608,787	24.4	357,422	334,576	22,846	251,365	58.7	6.4	55.0
고령층(55세 이상)	1,756,637	70.4	521,558	488,536	33,022	1,235,079	29.7	6.3	27.8
장애 인구	2,495,043	100.0	922,897	861,648	61,249	1,572,146	37.0	6.6	34.5
청년층(15~29세)	9,157,000	20.7	4,368,000	3,908,000	460,000	4,790,000	47.7	10.5	42.7
중년층(30~54세)	19,960,000	45.2	15,973,000	15,513,000	459,000	3,987,000	80.0	2.9	77.7
고령층(55세 이상)	15,024,000	34.1	7,844,000	7,643,000	201,000	7,180,000	52.2	2.6	50.9
전체 인구	44,141,000	100.0	28,184,000	27,064,000	1,121,000	15,956,000	63.9	4.0	61.3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8년 5월) 참조

장애정도별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경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3.9%, 고용률은 41.1%인데 반해 중증장애인은 각각 22.1%, 20.2%로 두 배 이상 낮게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의 실업률은 8.4%로 경증장애인(6.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Ⅳ-6〉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 - 장애정도별(2018년 5월 기준)

(단위: 명, %)

구 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활률	실업률	고용률
	인구 수	비중	소 계	취업자	실업자				
중증	787,264	31.6	173,653	159,033	14,620	613,611	22.1	8.4	20.2
경증	1,707,779	68.4	749,244	702,615	46,629	958,535	43.9	6.2	41.1
장애 인구	2,495,043	100.0	922,897	861,648	61,249	1,572,146	37.0	6.6	34.5

주) 중증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이 해당

장애유형별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지체장애를 제외한 신체외부장애인(뇌병변장애, 안면장애)의 고용률은 12.7%로 지체장애인(42.5%), 시각장애인(41.4%), 시각 외 감각장애인(31.8%), 신체내부장애인(24.8%), 정신적 장애인(20.6%) 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실업률의 경우 신체외부장애인(뇌병변장애, 안면장애) 12.5%, 정신적 장애인 10.6%, 시각장애인 7.2%, 신체내부장애인 6.0%, 시각 외 감각장애인 5.9% 순으로 나타나, 이러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경제활동참여 이후에도 직장(일자리)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7〉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 - 장애유형별(2018년 5월 기준)

(단위: 명, %)

구 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활률	실업률	고용률
		인구 수	비중	소 계	취업자	실업자				
신체외부	지체	1,251,749	50.2	564,549	531,608	32,941	687,200	45.1	5.8	42.5
	지체 외	246,875	9.9	35,753	31,293	4,460	211,122	14.5	12.5	12.7
감각	시각	250,978	10.1	112,035	103,916	8,119	138,943	44.6	7.2	41.4
	시각 외	316,335	12.7	107,110	100,743	6,367	209,225	33.9	5.9	31.8
정신적		295,805	11.9	68,217	60,975	7,242	227,588	23.1	10.6	20.6
신체내부		133,299	5.3	35,232	33,112	2,120	98,067	26.4	6.0	24.8
장애 인구		2,495,041	100.0	922,896	861,647	61,249	1,572,145	37.0	6.6	34.5

주)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는 뇌병변, 안면장애를, "시각 외 감각장애"는 청각, 언어장애를,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를, "신체내부장애"는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장애를 의미함

학력별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중졸 이하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5.9%, '고졸' 50.1%, '대졸 이상' 58.7%이며, 고용률은 '중졸 이하' 24.0%, '고졸' 46.5%, '대졸 이상' 55.7%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업률은 '고졸' 7.1%, '중졸 이하' 7.0%, '대졸 이상' 5.1%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와 비교해 보면, 대졸에서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전체 인구에 비해 각각 19.8%p, 19.6%p 낮게 나타났으며, 실업률은 1.21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표 Ⅳ-8〉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 - 학력별(2018년 5월 기준, 전체 인구 비교)

(단위: 명, %)

구 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활률	실업률	고용률
	인구 수	비중	소 계	취업자	실업자				
중졸 이하	1,462,403	58.6	378,158	351,705	26,453	1,084,245	25.9	7.0	24.0
고졸	713,451	28.6	357,330	332,104	25,226	356,121	50.1	7.1	46.5
대졸 이상	319,187	12.8	187,408	177,838	9,570	131,779	58.7	5.1	55.7
장애 인구	2,495,041	100.0	922,896	861,647	61,249	1,572,145	37.0	6.6	34.5
중졸 이하	10,882,000	24.7	4,314,000	4,197,000	119,000	6,567,000	39.6	2.8	38.6
고졸	16,569,000	37.5	10,762,000	10,306,000	455,000	5,808,000	64.9	4.2	62.2
대졸 이상	16,690,000	37.8	13,108,000	12,561,000	547,000	3,582,000	78.5	4.2	75.3
전체 인구	44,141,000	100.0	28,184,000	27,064,000	1,121,000	15,956,000	63.9	4.0	61.3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8년 5월) 참조

주요 인구통계학 변수별로 경제활동지표를 2017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약 2.5%p 하락하였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약 1.0%하락하였다. 실업률의 경우 남성, 여성 각각 0.8%p, 1.2%p 상승하였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모두 각각 2.4%p, 2.3%p 하락한 반면, 그 외 모든 연령대에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대부분 상승하였다. 실업률은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는 상승하였다.

장애정도별로는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실업률 모두 증가하였다. 경증장애인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율이 소폭 감소하였으며 경증장애인 고용율 하락폭의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률 증가폭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 외 신체외부 장애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실업률이 상승하였으며, 정신적 장애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소폭 상승하였다. 지체 장애, 시각 장애, 시각 외 감각장애, 신체 내부장애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하락하였다.

교육정도별로는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에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모두 하락하였으며, 실업률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9〉 주요 인구통계학 변수별 경제활동지표(2017년 조사 비교)

(단위: %, %p)

변 수	구 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2017년	2018년	증감	2017년	2018년	증감	2017년	2018년	증감
성별	남성	49.5	47.1	-2.4	5.5	6.3	0.8	46.8	44.1	-2.6
	여성	23.9	23.1	-0.8	6.3	7.4	1.2	22.4	21.4	-1.1
연령	15~29세	31.8	33.9	2.1	9.8	12.3	2.5	28.7	29.7	1.0
	30~39세	56.4	57.7	1.3	6.5	8.2	1.7	52.7	53.0	0.3
	40~49세	59.3	60.1	0.8	4.7	6.4	1.7	56.5	56.3	-0.3
	50~59세	55.1	56.1	1.0	4.6	5.7	1.1	52.6	52.9	0.4
	60세 이상	26.9	24.5	-2.4	6.5	6.5	0.0	25.2	22.9	-2.3
	15~64세	52.2	52.5	0.3	5.8	6.8	1.0	49.2	49.0	-0.2
	20~64세	53.5	53.8	0.3	5.8	6.8	1.0	50.4	50.2	-0.3
장애 정도	중증	21.1	22.1	1.0	7.7	8.4	0.7	19.5	20.2	0.7
	경증	46.9	43.9	-3.0	5.3	6.2	0.9	44.4	41.1	-3.3
장애 유형	신체 외부 지체장애	48.3	45.1	-3.2	5.0	5.8	0.9	45.9	42.5	-3.4
	신체 외부 지체 외	12.8	14.5	1.7	5.8	12.5	6.6	12.1	12.7	0.6
	감각 시각장애	46.5	44.6	-1.9	7.4	7.2	-0.2	43.1	41.4	-1.6
	감각 시각 외	35.0	33.9	-1.2	5.2	5.9	0.8	33.2	31.8	-1.4
	정신적	20.9	23.1	2.2	10.7	10.6	-0.1	18.7	20.6	2.0
	신체내부	27.1	26.4	-0.7	6.0	6.0	0.0	25.5	24.8	-0.7
지역	수도권	38.2	36.9	-1.3	5.5	5.2	-0.3	36.1	34.9	-1.1
	광역시권	35.8	36.4	0.6	5.1	10.8	5.7	34.0	32.5	-1.5
	기타 시도	40.7	37.4	-3.3	6.2	6.2	0.0	38.2	35.1	-3.1
교육 정도	중졸 이하	27.6	25.9	-1.7	5.2	7.0	1.8	26.2	24.0	-2.1
	고졸	51.7	50.1	-1.6	7.0	7.1	0.1	48.1	46.5	-1.5
	대졸 이상	60.9	58.7	-2.2	4.3	5.1	0.8	58.2	55.7	-2.5
전 체		38.7	37.0	-1.7	5.7	6.6	0.9	36.5	34.5	-2.0

주 1) 중증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이 해당

2)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는 뇌병변, 안면장애를, "시각 외 감각장애"는 청각, 언어장애를,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를, "신체내부장애"는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장애를 의미함

3)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권"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지역을 의미함(세종특별자치시는 전체 인구 통계와의 비교를 위해 "기타 시도"에 편입)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odi.or.kr

15세 이상 인구의 연령별, 성별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60세 이상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각각 15.8%, 14.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업률은 30~39세 여성장애인 23.6%, 15~29세 남성장애인 13.5%, 15~29세 여성장애인 10.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인구의 실업률은 15~29세 남성이 1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Ⅳ-10〉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 - 연령별, 성별(2018년 5월 기준, 전체 인구 비교)

(단위: 명, %)

구 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활률	실업률	고용률
		인구 수	비중	소 계	취업자	실업자				
15~29세	남성	81,452	3.3	27,694	23,942	3,752	53,758	34.0	13.5	29.4
	여성	48,166	1.9	16,222	14,593	1,629	31,944	33.7	10.0	30.3
30~39세	남성	95,877	3.8	61,107	58,925	2,182	34,770	63.7	3.6	61.5
	여성	42,031	1.7	18,463	14,103	4,360	23,568	43.9	23.6	33.6
40~49세	남성	192,355	7.7	132,339	124,246	8,093	60,016	68.8	6.1	64.6
	여성	81,718	3.3	32,435	29,989	2,446	49,283	39.7	7.5	36.7
50~59세	남성	327,130	13.1	214,477	201,905	12,572	112,653	65.6	5.9	61.7
	여성	167,749	6.7	63,282	60,118	3,164	104,467	37.7	5.0	35.8
60세 이상	남성	745,578	29.9	244,077	227,539	16,538	501,501	32.7	6.8	30.5
	여성	712,988	28.6	112,801	106,288	6,513	600,187	15.8	5.8	14.9
15~64세	남성	872,447	35.0	525,912	494,334	31,578	346,535	60.3	6.0	56.7
	여성	439,712	17.6	163,396	148,404	14,992	276,316	37.2	9.2	33.8
20~64세	남성	849,632	34.1	524,287	492,709	31,578	325,345	61.7	6.0	58.0
	여성	425,621	17.1	162,015	147,029	14,986	263,606	38.1	9.2	34.5
장애 인구		2,495,043	100.0	922,897	861,648	61,249	1,572,146	37.0	6.6	34.5
15~29세	남성	4,566,000	10.3	2,109,000	1,863,000	245,000	2,458,000	46.2	11.6	40.8
	여성	4,591,000	10.4	2,259,000	2,044,000	215,000	2,332,000	49.2	9.5	44.5
30~39세	남성	3,821,000	8.7	3,566,000	3,423,000	143,000	256,000	93.3	4.0	89.6
	여성	3,569,000	8.1	2,265,000	2,193,000	72,000	1,303,000	63.5	3.2	61.4
40~49세	남성	4,285,000	9.7	4,046,000	3,952,000	94,000	239,000	94.4	2.3	92.2
	여성	4,175,000	9.5	2,813,000	2,745,000	68,000	1,362,000	67.4	2.4	65.7
50~59세	남성	4,211,000	9.5	3,804,000	3,696,000	108,000	407,000	90.3	2.8	87.8
	여성	4,215,000	9.5	2,746,000	2,683,000	63,000	1,469,000	65.1	2.3	63.7
60세 이상	남성	4,789,000	10.8	2,621,000	2,540,000	81,000	2,168,000	54.7	3.1	53.0
	여성	5,919,000	13.4	1,956,000	1,925,000	31,000	3,963,000	33.0	1.6	32.5
15~64세	남성	18,536,000	42.0	14,785,000	14,142,000	643,000	3,751,000	79.8	4.3	76.3
	여성	18,258,000	41.4	10,927,000	10,491,000	435,000	7,331,000	59.8	4.0	57.5
20~64세	남성	17,117,000	38.8	14,686,000	14,053,000	633,000	2,431,000	85.8	4.3	82.1
	여성	16,902,000	38.3	10,801,000	10,375,000	425,000	6,101,000	63.9	3.9	61.4
전체 인구		44,141,000	100.0	28,184,000	27,064,000	1,121,000	15,956,000	63.9	4.0	61.3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8년 5월) 참조

연령계층별, 성별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고령층(55세 이상) 여성장애인 18.9%, 청년층(15~29세) 여성장애인 33.7%, 청년층(15~29세) 남성장애인 34.0% 등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고용률도 고령층 여성장애인 18.0%, 청년층 남성장애인 29.4%, 청년층 여성장애인 30.3% 등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실업률은 청년층 남성장애인이 1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년층 여성장애인 12.2%, 청년층 여성장애인 10.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인구와 비교해 보면,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은 중년층 여성이 각각 27.1%p, 30.1%p로 가장 큰 격차를 보였고, 실업률은 모든 연령계층에서 전체 인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Ⅳ-11〉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 - 연령계층별, 성별(2018년 5월 기준, 전체 인구 비교)

(단위: 명, %)

구 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활률	실업률	고용률
		인구수	비중	소 계	취업자	실업자				
청년층 (15~29세)	남성	81,452	3.3	27,694	23,942	3,752	53,758	34.0	13.5	29.4
	여성	48,166	1.9	16,222	14,593	1,629	31,944	33.7	10.0	30.3
중년층 (30~54세)	남성	423,485	17.0	285,160	271,140	14,020	138,325	67.3	4.9	64.0
	여성	185,303	7.4	72,263	63,437	8,826	113,040	39.0	12.2	34.2
고령층 (55세 이상)	남성	937,454	37.6	366,840	341,475	25,365	570,614	39.1	6.9	36.4
	여성	819,183	32.8	154,718	147,061	7,657	664,465	18.9	4.9	18.0
장애 인구		2,495,043	100.0	922,897	861,648	61,249	1,572,146	37.0	6.6	34.5
청년층 (15~29세)	남성	4,566,000	10.3	2,109,000	1,863,000	245,000	2,458,000	46.2	11.6	40.8
	여성	4,591,000	10.4	2,259,000	2,044,000	215,000	2,332,000	49.2	9.5	44.5
중년층 (30~54세)	남성	10,169,000	23.0	9,500,000	9,210,000	289,000	670,000	93.4	3.0	90.6
	여성	9,791,000	22.2	6,473,000	6,303,000	170,000	3,317,000	66.1	2.6	64.4
고령층 (55세 이상)	남성	6,937,000	15.7	4,538,000	4,401,000	137,000	2,400,000	65.4	3.0	63.4
	여성	8,087,000	18.3	3,307,000	3,242,000	64,000	4,780,000	40.9	1.9	40.1
전체 인구		44,141,000	100.0	28,184,000	27,064,000	1,121,000	15,956,000	63.9	4.0	61.3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8년 5월) 참조

장애정도별, 성별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중증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7.4%, 실업률 8.6%, 고용률 15.9%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중증 여성장애인이 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Ⅳ-12〉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 - 장애정도별, 성별(2018년 5월 기준)

(단위: 명, %)

구 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활률	실업률	고용률
		인구 수	비중	소 계	취업자	실업자				
중증	남성	462,192	18.5	117,041	107,284	9,757	345,151	25.3	8.3	23.2
	여성	325,072	13.0	56,612	51,748	4,864	268,460	17.4	8.6	15.9
경증	남성	980,199	39.3	562,653	529,273	33,380	417,546	57.4	5.9	54.0
	여성	727,580	29.2	186,591	173,342	13,249	540,989	25.6	7.1	23.8
장애 인구		2,495,043	100.0	922,897	861,647	61,250	1,572,146	37.0	6.6	34.5

주) 중증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이 해당

장애유형별, 성별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여성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각각 8.4%, 7.0%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실업률도 여성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인이 1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Ⅳ-13〉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 - 장애유형별, 성별(2018년 5월 기준)

(단위: 명, %)

구 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활률	실업률	고용률
		인구 수	비중	소 계	취업자	실업자				
지체장애	남성	728,079	29.2	426,794	405,488	21,306	301,285	58.6	5.0	55.7
	여성	523,671	21.0	137,755	126,120	11,635	385,916	26.3	8.4	24.1
지체 외 신체외부	남성	143,718	5.8	27,139	24,095	3,044	116,579	18.9	11.2	16.8
	여성	103,157	4.1	8,614	7,199	1,415	94,543	8.4	16.4	7.0
시각장애	남성	151,832	6.1	83,797	76,477	7,320	68,035	55.2	8.7	50.4
	여성	99,147	4.0	28,238	27,439	799	70,909	28.5	2.8	27.7
시각 외 감각장애	남성	169,364	6.8	71,044	65,921	5,123	98,320	41.9	7.2	38.9
	여성	146,974	5.9	36,068	34,823	1,245	110,906	24.5	3.5	23.7

구 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활률	실업률	고용률
		인구 수	비중	소 계	취업자	실업자				
정신적 장애	남성	167,926	6.7	44,133	39,624	4,509	123,793	26.3	10.2	23.6
	여성	127,880	5.1	24,085	21,352	2,733	103,795	18.8	11.3	16.7
신체내부 장애	남성	81,475	3.3	26,789	24,954	1,835	54,686	32.9	6.8	30.6
	여성	51,825	2.1	8,443	8,158	285	43,382	16.3	3.4	15.7
장애 인구		2,495,048	100.0	922,899	861,650	61,249	1,572,149	37.0	6.6	34.5

주)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는 뇌병변, 안면장애를, “시각 외 감각장애”는 청각, 언어장애를,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를, “신체내부장애”는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장애를 의미함

학력별, 성별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중졸 이하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7.5%, 고용률은 16.2%로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실업률은 고졸 여성장애인이 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인구와 비교해 보면, 고졸이하에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의 격차가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대졸이상의 경우 남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전체 인구와의 26.8%p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표 Ⅳ-14〉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 - 학력별, 성별(2018년 5월 기준, 전체 인구 비교)

(단위: 명, %)

구 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활률	실업률	고용률
		인구 수	비중	소 계	취업자	실업자				
중졸 이하	남성	692,267	27.7	243,565	226,620	16,945	448,702	35.2	7.0	32.7
	여성	770,136	30.9	134,593	125,085	9,508	635,543	17.5	7.1	16.2
고졸	남성	498,921	20.0	281,412	262,384	19,028	217,509	56.4	6.8	52.6
	여성	214,529	8.6	75,917	69,720	6,197	138,612	35.4	8.2	32.5
대졸 이상	남성	251,201	10.1	154,716	147,553	7,163	96,485	61.6	4.6	58.7
	여성	67,986	2.7	32,692	30,285	2,407	35,294	48.1	7.4	44.5
장애 인구		2,495,040	100.0	922,895	861,647	61,248	1,572,145	37.0	6.6	34.5
중졸 이하	남성	4,220,000	9.6	1,980,000	-	-	2,240,000	46.9	-	-
	여성	6,662,000	15.1	2,334,000	-	-	4,327,000	35.0	-	-
고졸	남성	8,559,000	19.4	6,305,000	-	-	2,253,000	73.7	-	-
	여성	8,011,000	18.1	4,456,000	-	-	3,555,000	55.6	-	-
대졸 이상	남성	8,895,000	20.2	7,861,000	-	-	1,034,000	88.4	-	-
	여성	7,795,000	17.7	5,248,000	-	-	2,547,000	67.3	-	-
전체 인구		44,141,000	100.0	28,184,000	27,064,000	1,121,000	15,956,000	63.9	4.0	61.3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8년 5월) 참조

연령별, 장애정도별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30~39세 경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81.9%로 가장 높은 반면, 60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10.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고용률 역시 30~39세 경증장애인이 76.2%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9.9%로 가장 낮다. 실업률은 15~29세 경증장애인 16.8%, 40~49세 중증장애인 11.5%, 30~39세 중증장애인 10.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Ⅳ-15〉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 - 연령별, 장애정도별(2018년 5월 기준)

(단위: 명, %)

구 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활률	실업률	고용률
		인구 수	비중	소 계	취업자	실업자				
15~29세	중증	103,137	4.1	31,033	27,817	3,216	72,104	30.1	10.4	27.0
	경증	26,481	1.1	12,883	10,718	2,165	13,598	48.6	16.8	40.5
30~39세	중증	73,371	2.9	26,689	23,866	2,823	46,682	36.4	10.6	32.5
	경증	64,537	2.6	52,881	49,162	3,719	11,656	81.9	7.0	76.2
40~49세	중증	107,668	4.3	32,694	28,932	3,762	74,974	30.4	11.5	26.9
	경증	166,405	6.7	132,081	125,303	6,778	34,324	79.4	5.1	75.3
50~59세	중증	160,707	6.4	46,971	44,410	2,561	113,736	29.2	5.5	27.6
	경증	334,172	13.4	230,789	217,613	13,176	103,383	69.1	5.7	65.1
60세 이상	중증	342,382	13.7	36,267	34,008	2,259	306,115	10.6	6.2	9.9
	경증	1,116,184	44.7	320,611	299,819	20,792	795,573	28.7	6.5	26.9
15~64세	중증	522,082	20.9	150,247	136,476	13,771	371,835	28.8	9.2	26.1
	경증	790,077	31.7	539,061	506,262	32,799	251,016	68.2	6.1	64.1
20~64세	중증	488,798	19.6	147,925	134,160	13,765	340,873	30.3	9.3	27.4
	경증	786,455	31.5	538,377	505,578	32,799	248,078	68.5	6.1	64.3
장애 인구		2,495,044	100.0	922,899	861,648	61,251	1,572,145	37.0	6.6	34.5

주) 중증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이 해당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중증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8.5%, 중증 신체내부장애인 15.2%, 중증 시각장애인 18.7% 등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고용률은 중증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인 7.6%, 중증 신체내부장애인 14.3%, 중증 시각장애인 16.6% 등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실업률은 경증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인이 13.3%로 가장 높았으며, 중증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인 11.0%, 중증 시각장애인 10.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Ⅳ-16〉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 -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2018년 5월 기준)

(단위: 명, %)

구 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활률	실업률	고용률
		인구 수	비중	소 계	취업자	실업자				
지체장애	중증	160,190	6.4	52,511	48,923	3,588	107,679	32.8	6.8	30.5
	경증	1,091,560	43.7	512,038	482,685	29,353	579,522	46.9	5.7	44.2
지체 외 신체외부	중증	153,525	6.2	13,065	11,627	1,438	140,460	8.5	11.0	7.6
	경증	93,350	3.7	22,688	19,666	3,022	70,662	24.3	13.3	21.1
시각장애	중증	46,910	1.9	8,749	7,809	940	38,161	18.7	10.7	16.6
	경증	204,069	8.2	103,286	96,107	7,179	100,783	50.6	7.0	47.1
시각 외 감각장애	중증	50,696	2.0	18,957	18,235	722	31,739	37.4	3.8	36.0
	경증	265,640	10.6	88,153	82,508	5,645	177,487	33.2	6.4	31.1
정신적 장애	중증	295,805	11.9	68,217	60,975	7,242	227,588	23.1	10.6	20.6
신체내부 장애	중증	80,139	3.2	12,153	11,463	690	67,986	15.2	5.7	14.3
	경증	53,161	2.1	23,080	21,649	1,431	30,081	43.4	6.2	40.7
장애 인구		2,495,045	100.0	922,897	861,647	61,250	1,572,148	37.0	6.6	34.5

주 1)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는 뇌병변, 안면장애를, "시각 외 감각장애"는 청각, 언어장애를,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를, "신체내부장애"는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장애를 의미함
2) 중증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이 해당

2) 취업자 현황

(1) 취업자 인적구성

장애인 취업자의 인적구성을 15세 이상 전체 장애인 인구분포와 비교해 보면, 성별로는 남성, 연령별로는 30~59세, 장애정도별로는 경증, 장애유형별로는 지체, 시각, 지역별로는 수도권, 기타 시도, 학력별로는 고졸, 대졸 이상의 비중이 실제 장애 인구에서의 비중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장애인 취업자 대비로는 여성, 15~29세, 60세 이상, 중증, 지체 외 신체외부, 시각, 시각 외 감각, 정신적, 신체내부, 수도권, 광역시권, 고졸, 대졸 이상 장애인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전체 취업자 분포와 비교하면, 남성, 50세 이상, 기타 시도, 중졸 이하 고졸의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7〉 취업자의 인구통계학 변수별 분포(전체 인구 비교)

(단위: 명, %)

변 수	구 분	전체 인구 취업자		장애 인구 취업자			전체 장애인 인구분포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17년 비율	
성별	남성	15,474,000	57.2	636,557	73.9	74.1	57.8
	여성	11,589,000	42.8	225,091	26.1	25.9	42.2
연령별	15~29세	3,908,000	14.4	38,536	4.5	4.2	5.2
	30~39세	5,616,000	20.8	73,028	8.5	8.7	5.5
	40~49세	6,697,000	24.7	154,235	17.9	18.7	11.0
	50~59세	6,379,000	23.6	262,022	30.4	30.1	19.8
	60세 이상	4,465,000	16.5	333,827	38.7	38.4	58.5
장애정도별	중증	-	-	159,033	18.5	16.8	31.6
	경증	-	-	702,615	81.5	83.2	68.4
장애유형별	신체 외부 지체	-	-	531,608	61.7	64.6	50.2
	신체 외부 지체 외	-	-	31,293	3.6	3.3	9.9
	감각 시각	-	-	103,916	12.1	12.0	10.1
	감각 시각 외	-	-	100,743	11.7	10.6	12.7
	정신적	-	-	60,975	7.1	6.0	11.9
	신체내부	-	-	33,112	3.8	3.6	5.3
지역별	수도권	13,530,000	50.0	363,112	42.1	41.1	41.6
	광역시권	4,992,000	18.4	153,402	17.8	17.6	18.9
	기타 시도	8,542,000	31.6	345,134	40.1	41.2	39.4
학력별	중졸 이하	4,197,000	15.5	351,705	40.8	41.9	58.6
	고졸	10,306,000	38.1	332,104	38.5	38.1	28.6
	대졸 이상	12,561,000	46.4	177,838	20.6	20.0	12.8
전 체		27,064,000	100.0	861,648	100.0	100.0	100.0

주 1) 중증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이 해당
2)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는 뇌병변, 안면장애를, "시각 외 감각장애"는 청각, 언어장애를,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를, "신체내부장애"는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장애를 의미함
3)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권"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지역을 의미함(세종특별자치시는 전체 인구 통계와의 비교를 위해 "기타 시도"에 편입)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8년 5월) 참조

(2) 취업자 주요특성

장애인 취업자 861,648명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는 583,095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67.7%이며, 비임금근로자는 278,553명으로 3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임금근로자 비중은 2017년 대비 2.1%p 증가한 수치이다. 전체 인구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74.6%로 장애인(67.7%)에 비해 6.9%p 높게 나타나, 장애인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 취업자의 세부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 38.7%,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1.8%, 임시근로자 18.6%, 일용근로자 10.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인구 취업자의 경우 상용근로자 50.8%, 임시근로자 18.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5.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Ⅳ-18〉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전체 인구 비교)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17년 비율
장애 인구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333,273	38.7	35.9
		임시근로자	160,140	18.6	17.6
		일용근로자	89,683	10.4	12.1
		소 계	583,095	67.7	65.6
	비임금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51,801	6.0	7.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88,059	21.8	23.5
		무급가족종사자	38,693	4.5	3.6
		소 계	278,553	32.3	34.4
	전 체		861,648	100.0	100.0
전체 인구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13,741,000	50.8	49.7
		임시근로자	4,984,000	18.4	18.9
		일용근로자	1,463,000	5.4	5.9
		소 계	20,187,000	74.6	74.5
	비임금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643,000	6.1	5.9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81,000	15.1	15.3
		무급가족종사자	1,152,000	4.3	4.3
		소 계	6,876,000	25.4	25.5
	전 체		27,064,000	100.0	100.0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8년 5월) 참조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중 임금근로자 비율은 32.0%인데 반해, 5~49인 94.3%, 50~299인 99.1%, 300인 이상 100.0%로 5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임금근로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그 비중이 높아지며, 임시근로자는 5~49인 규모, 일용근로자는 1~4인 규모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Ⅳ-19〉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 사업체 규모별

(단위: %, 명)

구 분		사업체 규모별				
		1~4인	5~49인	50~299인	300인 이상	모름/응답거절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11.9	52.6	73.7	71.5	54.8
	임시근로자	7.7	29.8	22.8	22.4	39.8
	일용근로자	12.4	11.9	2.6	6.1	5.4
	소 계	32.0	94.3	99.1	100.0	100.0
비임금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9.1	5.5	0.7	0.0	0.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8.9	0.1	0.2	0.0	0.0
	무급가족종사자	10.0	0.1	0.0	0.0	0.0
	소 계	68.0	5.7	0.9	0.0	0.0
전 체 (추정 수)		100.0 (383,489)	100.0 (294,481)	100.0 (112,617)	100.0 (64,834)	100.0 (6,227)

주) "사업체"는 기업체의 하부조직으로 본사·지점·공장·영업소·상점 등을 의미함

장애인 취업자의 직장(일자리) 산업은 '제조업'이 1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13.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0.4%), '도매 및 소매업'(9.8%), '건설업'(8.6%),의 순이다.

전체 인구에 비해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등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은 2017년에 비해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의 종사 비율이 증가한 반면, '건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운수

및 창고업'등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표 Ⅳ-20〉 취업자의 직장(일자리) 산업(전체 인구 비교)

(단위: 명, %)

구 분	장애인 취업자			전체 인구 취업자	
	추정 수	비율	'17년 비율	추정 수	비율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114,216	13.3	13.8	1,502,000	5.5
제조업	143,348	16.6	15.2	4,507,000	16.7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124	0.1	0.2	69,000	0.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1,622	0.2	0.6	121,000	0.4
건설업	73,724	8.6	9.8	2,035,000	7.5
도매 및 소매업	84,554	9.8	9.7	3,708,000	13.7
운수 및 창고업	50,193	5.8	6.0	1,396,000	5.2
숙박 및 음식점업	42,040	4.9	5.9	2,259,000	8.3
정보통신업	10,300	1.2	0.9	835,000	3.1
금융 및 보험업	17,147	2.0	1.7	838,000	3.1
부동산업	23,361	2.7	3.2	523,000	1.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6,416	1.9	1.5	1,102,000	4.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2,321	6.1	7.0	1,343,000	5.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6,106	6.5	6.7	1,158,000	4.3
교육 서비스업	31,448	3.6	2.9	1,847,000	6.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89,978	10.4	8.0	2,077,000	7.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4,994	1.7	1.1	436,000	1.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6,449	4.2	5.6	1,254,000	4.6
가구 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 활동	2,091	0.2	0.3	48,000	0.2
국제 및 외국기관	0	0.0	0.0	6,000	0.0
모름/응답거절	215	0.0	0.0	0	0.0
전 체	861,648	100.0	100.0	27,064,000	100.0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8년 5월) 참조

장애인 취업자의 직업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27.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무 종사자' 13.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3.1%,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12.9% 등의 순이다. 전체 인구 대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의 비율이 낮은 반면, '단순노무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의 비율은 높다.

장애인은 2017년에 비해 '사무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의 비율이 증가한 반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등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표 Ⅳ-21〉 취업자의 직업(전체 인구 비교)

(단위: 명, %)

구 분	장애인 취업자			전체 인구 취업자	
	추정 수	비율	'17년 비율	추정 수	비율
관리자	5,544	0.6	1.3	364,000	1.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65,452	7.6	8.0	5,513,000	20.4
사무 종사자	118,598	13.8	12.9	4,780,000	17.7
서비스 종사자	73,107	8.5	6.7	2,999,000	11.1
판매 종사자	72,512	8.4	7.9	2,987,000	11.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13,057	13.1	12.8	1,383,000	5.1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69,105	8.0	9.9	2,336,000	8.6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111,377	12.9	13.4	3,126,000	11.6
단순노무 종사자	232,894	27.0	27.1	3,578,000	13.2
기타 및 모름/응답거절	4	0.0	0.1	0	0.0
전 체	861,648	100.0	100.0	27,064,000	100.0

주) 기타에는 군인 등이 포함됨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8년 5월) 참조

취업자 직장(일자리)의 사업체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 취업자의 47.2%가 5~299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인구의 54.0%보다 낮고 2017년에 비해 0.6%p 낮은 비율이다.

〈표 Ⅳ-22〉 취업자의 직장(일자리) 사업체 규모(전체 인구 비교)

(단위: 명, %)

구 분	장애인 취업자			전체 인구 취업자	
	추정 수	비율	'17년 비율	추정 수	비율
1~4인	383,489	44.5	44.5	9,887,000	36.5
5~299인	407,097	47.2	47.8	14,620,000	54.0
300인 이상	64,835	7.5	6.0	2,557,000	9.4
모름/응답거절	6,227	0.7	1.6	0	0.0
전 체	861,648	100.0	100.0	27,064,000	100.0

주) "사업체"는 기업체의 하부조직으로 본사지점·공장·영업소·상점 등을 의미함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8년 5월) 참조

전체 장애인 취업자(일시휴직자 포함)의 31.9%가 지난 주 36시간 미만 일하였으며, 10.7%는 18시간 미만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의 경우 36시간 미만 취업자 비율이 15.7%, 18시간 미만 취업자 비율은 5.4%로 장애인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지난 주 36시간 미만 일한 비율은 2017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3〉 취업자의 지난 주 취업시간(전체 인구 비교)

(단위: 명, %)

구 분		장애인 취업자			전체 인구 취업자	
		추정 수	비율	'17년 비율	추정 수	비율
36시간 미만	1~17시간	92,187	10.7	11.2	1,464,000	5.4
	18~35시간	182,511	21.2	18.2	2,796,000	10.3
	소 계	274,698	31.9	29.4	4,260,000	15.7
36시간 이상		583,494	67.7	69.3	22,443,000	82.9
지난 주 일시휴직자		3,455	0.4	1.3	360,000	1.3
전 체		861,648	100.0	100	27,064,000	100.0
*2018년 평균 취업시간		38.3시간			42.5시간	
*2017년 평균 취업시간		39.8시간			43.5시간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8년 5월) 참조

장애인 취업자의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은 10년 3개월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10년 9개월보다 6개월 줄어든 수치이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가 5년 7개월, 비임금근로자가 20년 0개월로 비임금근로자가 약 4배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1~4인'에서 15년 2개월로 가장 길게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규모에서 비임금근로자 비율(93.6%)이 높은 것 때문으로 보여진다.

〈표 Ⅳ-24〉 취업자의 현재 직장(일자리) 근속기간 - 종사상 지위별, 사업체 규모별

(단위: 명, 년/개월)

구 분		추정 수	평균 근속기간	'17년 평균 근속기간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569,623	5년 7개월	6년 0개월
	비임금근로자	269,967	20년 0개월	19년 8개월
사업체 규모	1~4인	370,924	15년 2개월	16년 4개월
	5~49인	287,902	5년 4개월	5년 1개월
	50~299인	111,919	6년 7개월	7년 7개월
	300인 이상	63,973	10년 4개월	11년 3개월
	모름/응답거절	4,872	3년 0개월	2년 4개월
전체 장애인 취업자		839,590	10년 3개월	10년 9개월

주 1) 근속기간에 대해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함
2) "사업체"는 기업체의 하부조직으로 본사지점공장영업소상점 등을 의미함

장애인 취업자의 직장(일자리) 유형으로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자립작업장 등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는 2.7%, 공공근로, 희망근로, 복지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정부에서 창출한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6.9%. 공무원 교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일자리는 5.9% 등으로 나타났다.

〈표 Ⅳ-25〉 취업자의 현재 직장(일자리) 유형 - 종사상 지위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23,572	2.7	4.0	0.1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59,810	6.9	10.3	0.0
공무원, 교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일자리	50,963	5.9	8.7	0.1
그 외 일반사업체	727,302	84.4	77.1	99.8
전 체 (추정 수)	861,648	100.0	100.0 (583,095)	100.0 (278,552)

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에는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자립작업장 등이,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에는 공공근로, 희망근로, 복지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정부에서 창출한 일자리가 포함됨

3) 실업자 특성

(1) 실업자 인적구성

장애인 실업자의 인적구성을 15세 이상 전체 장애인 인구분포와 비교해 보면, 성별로는 남성, 연령별로는 15~59세, 장애정도별로는 경증, 장애유형별로는 지체 장애, 시각 장애, 지역별로는 광역시권, 학력별로는 고졸, 대졸 이상의 비중이 실제 장애 인구에서의 비중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장애인 실업자 대비로는 성별로는 여성, 연령별로는 15~59세 이상, 장애정도별로는 중증, 장애유형별로는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 시각 외 감각장애, 지역별로는 광역시권,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대졸 이상 장애인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전체 인구 실업자 분포와 비교하면, 성별로는 남성, 연령별로는 40세 이상, 지역별로는 기타 시도,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고졸의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6〉 실업자의 인구통계학 변수별 분포(전체 인구 비교)

(단위: 명, %)

변 수	구 분	전체 인구 실업자		장애 인구 실업자			전체 장애인 인구분포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17년 비율	
성별	남성	672,000	59.9	43,137	70.4	71.4	57.8
	여성	449,000	40.1	18,112	29.6	28.6	42.2
연령별	15~29세	460,000	41.0	5,381	8.8	7.5	5.2
	30~39세	215,000	19.2	6,542	10.7	10.1	5.5
	40~49세	162,000	14.5	10,539	17.2	15.0	11.0
	50~59세	171,000	15.3	15,736	25.7	23.7	19.8
	60세 이상	112,000	10.0	23,051	37.6	43.8	58.5
장애정도별	중증			14,620	23.9	23.1	31.6
	경증			46,629	76.1	76.9	68.4
장애유형별	신체 외부 지체			32,941	53.8	55.7	50.2
	신체 외부 지체 외			4,460	7.3	3.3	9.9
	감각 시각			8,119	13.3	15.9	10.1
	감각 시각 외			6,367	10.4	9.5	12.7
	정신적			7,242	11.8	11.8	11.9
	신체내부			2,120	3.5	3.8	5.3
지역별	수도권	616,000	55.0	19,833	32.4	39.2	41.6
	광역시권	239,000	21.3	18,596	30.4	15.5	18.9
	기타 시도	266,000	23.7	22,821	37.3	45.3	39.4
학력별	중졸 이하	119,000	10.6	26,453	43.2	38.0	58.6
	고졸	455,000	40.6	25,226	41.2	47.2	28.6
	대졸 이상	547,000	48.8	9,570	15.6	14.8	12.8
전 체		1,121,000	100.0	61,249	100.0	100.0	100.0

주 1) 중증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이 해당
2)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는 뇌병변, 안면장애를, "시각 외 감각장애"는 청각, 언어장애를,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를, "신체내부장애"는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장애를 의미함
3)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권"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지역을 의미함(세종특별자치시는 전체 인구 통계와의 비교를 위해 "기타 시도"에 편입)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8년 5월) 참조

(2) 실업자 주요 특성

① 실업자의 과거 취업경험

장애인 실업자 중 과거 취업경험이 있는 실업자는 전체의 89.5%로 전체 인구(91.8%)에 비해 2.3%p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에 비해서도 1.9%p 상승한 수치이다.

최근 1년 이내 취업경험이 있는 비율은 55.0%로 이는 전체 인구의 69.3%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표 Ⅳ-27〉 실업자의 과거 취업경험(전체 인구 비교)

(단위: 명, %)

구 분	장애인 실업자			전체 인구 실업자	
	추정 수	비율	'17년 비율	추정 수	비율
과거 취업경험 있음	54,835	89.5	87.6	1,029,000	91.8
1년 이내 취업 유경험자	30,161	55.0	42.4	713,000	69.3
1년 이전 취업 유경험자	24,674	45.0	57.6	316,000	30.7
과거 취업경험 없음	6,414	10.5	12.4	92,000	8.2
전 체	61,249	100.0	100.0	1,121,000	100.0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8년 5월) 참조

과거 취업경험이 있는 실업자가 직장(일)을 그만 둔 이유로는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또는 장애상태의 악화)'가 전체의 27.2%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14.4%)'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12.3%)',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건강문제)'(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28〉 과거 취업경험이 있는 실업자의 직장(일)을 그만둔 사유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14,922	27.2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건강문제)	4,678	8.5
기타 개인가족적 사유	541	1.0

구 분	추정 수	비율
정년퇴직	2,035	3.7
연로	1,351	2.5
일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움	2,780	5.1
임금이 낮아서	1,311	2.4
임금 이외 근로조건의 문제	1,014	1.8
근무환경의 문제	1,443	2.6
직장의 휴업, 폐업	3,671	6.7
명예·조기퇴직, 정리해고	2,904	5.3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7,918	14.4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	6,737	12.3
더 좋은 일자리로 이직(창업)하기 위해	1,793	3.3
지속적인 근무의 어려움(휴식 필요)	571	1.0
장애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952	1.7
기타	215	0.4
전 체	54,835	100.0

주) 과거 취업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과거 취업경험이 있는 실업자가 전에 다니던 직장(일)을 살펴보면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가 전체의 88.0%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38.2%), '제조업'(26.2%), '도소매, 음식 숙박업'(12.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32.3%로 가장 많고, '기능, 기계조작 종사자'(31.5%), '사무종사자'(1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부재정지원 일자리(공공근로 등)'는 9.7%, '공무원, 교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일자리'는 5.1%로 나타났으며 사업체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체 비율이 81.0%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실업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주된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이 전체의 19.6%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근무환경이나 근무시

간 등이 맞지 않아서‘(14.6%), ’구직(취업, 창업) 정보접근의 어려움‘(12.7%), ’수입이나 임금이 맞지 않아서‘(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29〉 실업자의 실업상태 지속이유(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학력, 경력(경험), 기술 부족(자격 제한)	2,908	4.7
수입이나 임금이 맞지 않아서	6,861	11.2
근무환경이나 근무시간 등이 맞지 않아서	8,941	14.6
구직(취업, 창업) 정보접근의 어려움	7,800	12.7
취업알선기관 및 서비스 부재, 접근의 어려움	3,500	5.7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12,027	19.6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아서	4,819	7.9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건강문제)	5,934	9.7
심리적 불안감이나 초조함(자신감 결여)	2,550	4.2
신체기능의 제한	5,284	8.6
이동능력의 제한	0	0.0
의사소통의 제한	627	1.0
기타	0	0.0
전 체	61,249	100.0

② 희망하는 일자리

장애인 실업자 61,249명 중 임금근로를 희망하여 구직하고 있는 사람은 90.3%이며,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은 9.7%로 나타났다.

실업자의 42.4%가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및 기타’에 종사하고자 하며, 다음으로 ‘제조업’ (23.9%), ‘도소매, 음식 숙박업’(15.1%)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 중 ‘단순노무 종사자’ 희망 비율은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능, 기계조작 종사자’ 27.8%, ‘서비스, 판매 종사자’ 20.9%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0〉 실업자의 취업을 희망하는 고용형태, 산업, 직업

(단위: 명, %)

변 수	구 분	추정 수	비율
희망 고용형태	임금근로	55,326	90.3
	비임금근로	5,923	9.7
희망산업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2,060	3.4
	제조업	14,638	23.9
	건설업	2,118	3.5
	도소매, 음식 숙박업	9,225	15.1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및 기타	25,958	42.4
	전기, 운수, 통신, 금융, 환경	7,250	11.8
희망직업	관리자, 전문가	4,318	7.0
	사무 종사자	7,515	12.3
	서비스, 판매 종사자	12,807	20.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	0.0
	기능, 기계조작 종사자	17,049	27.8
	단순노무 종사자	19,561	31.9
전 체		61,249	100.0

주 1)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및 기타"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가구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 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전기, 운수, 통신, 금융, 환경" = 전기, 가스, 중기 및 수도사업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운수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2) "관리자, 전문가" = 관리자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기능, 기계조작 종사자" =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실업자가 희망하는 직장(사업체)의 종류를 살펴보면, 공공근로, 복지일자리 등의 정부재정지원 일자리가 24.3%, 보호작업장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4.4%로 나타났으며, 절반 이상의 실업자들이 그 외 일반사업체(66.9%)에 근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1〉 실업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직장(사업체) 종류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2,410	4.4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13,469	24.3
공무원, 교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일자리	2,428	4.4
그 외 일반사업체	37,019	66.9
전 체	55,326	100.0

주 1) 희망 고용형태를 "임금근로"로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에는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자립작업장 등이,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에는 공공근로, 희망근로, 복지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정부에서 창출한 일자리가 포함됨

실업자의 희망 근로시간 형태는 '전일제 근로' 67.6%, '시간제 근로' 32.4%로 나타났다.

〈표 Ⅳ-32〉 실업자의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시간 형태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전일제 근로	37,379	67.6
시간제 근로	17,947	32.4
전 체	55,326	100.0

주) 희망 고용형태를 "임금근로"로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실업자가 시간제 근무를 희망하는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장애, 건강등 개인사정으로' 81.5%, '아이를 돌보려고' 11.8%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33〉 실업자가 시간제 근무를 희망하는 주된 이유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아이를 돌보려고	2,112	11.8
가사일 때문에	0	0.0
학업을 위하여	123	0.7
전일제 직장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1,090	6.1
다른 일(직장)을 같이 하려고	0	0.0
장애, 건강등 개인사정으로	14,622	81.5
기타	0	0.0
전 체	17,947	100.0

주) 희망 고용형태를 "임금근로"로 응답하고 근로시간 형태를 "시간제 근로 "로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실업자의 희망 월평균 소득에 대해 응답받은 결과, '200~300만원 미만'이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150~200만원 미만' 27.4%, '100~150만원 미만' 15.7%, '50~100만원미만' 15.1%, 50만원 미만' 2.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34〉 실업자의 희망하는 월평균 소득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50만원 미만	1,399	2.3
50~100만원미만	9,259	15.1
100~150만원미만	9,622	15.7
150~200만원미만	16,802	27.4
200~300만원미만	18,853	30.8
300만원 이상	5,241	8.6
모름/응답거절	73	0.1
전 체	61,249	100.0

실업자 중 일반적인 근로가 가능한 비율은 57.5%, 단시간 또는 단순한 근로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2.5%로 나타났다.

〈표 Ⅳ-35〉 실업자의 주관적 근로 가능 정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일반적인 근로가 가능	35,212	57.5
단시간 또는 단순한 근로가 가능	26,037	42.5
전 체	61,249	100.0

주 1) "근로가능정도"는 본인판단에 따른 주관적 근로능력임
주 2) "일반적인 근로가 가능" 은 일자리에서 통상적인 수준의 일을 종일(하루8시간)할 수 있는 상황임
주 3) "단시간 또는 단순한 근로가 가능" 은 간단한 돈벌이가 가능한 수준임

2 지역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

지역별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거주 장애인의 고용률은 34.9%, 광역시권(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은 32.5%인데 반해 기타 시도(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는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참가율은 '기타 시도'가 37.4%로 '수도권'(36.9%)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광역시권'은 36.4%로 가장 낮았다. 실업률의 경우 '광역시권'이 1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Ⅳ-36〉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 - 지역별(2018년 5월 기준, 전체 인구 비교)

(단위: 명, %)

구 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활 률	실업 률	고용 률
	인구 수	비중	소 계	취업자	실업자				
수도권	1,039,033	41.6	382,945	363,112	19,833	656,088	36.9	5.2	34.9
광역시권	472,441	18.9	171,998	153,402	18,596	300,443	36.4	10.8	32.5
기타 시도	983,569	39.4	367,955	345,134	22,821	615,614	37.4	6.2	35.1
장애 인구	2,495,043	100.0	922,898	861,648	61,250	1,572,145	37.0	6.6	34.5
수도권	21,951,000	49.7	14,145,000	13,530,000	616,000	7,806,000	64.4	4.4	61.6
광역시권	8,611,000	19.5	5,232,000	4,992,000	239,000	3,379,000	60.8	4.6	58.0
기타 시도	13,579,000	30.8	8,810,000	8,542,000	266,000	4,771,000	64.9	3.0	62.9
전체 인구	44,141,000	100.0	28,184,000	27,064,000	1,121,000	15,956,000	63.9	4.0	61.3

주)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권"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지역을 의미함(세종특별자치시는 전체 인구 통계와의 비교를 위해 "기타 시도"에 편입)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8년 5월) 참조

지역별, 성별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수도권 거주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21.6%, 20.5%로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실업률은 광역시권 거주 남성장애인이 1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인구와 비교해 보면, 수도권 여성장애인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21.6%)은 수도권 거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53.8%) 보다 32.2%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7〉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 - 지역별, 성별
(2018년 5월 기준, 전체 인구 비교)

(단위: 명, %)

구 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활률	실업률	고용률
		인구 수	비중	소 계	취업자	실업자				
수도권	남성	609,352	24.4	289,980	275,134	14,846	319,372	47.6	5.1	45.2
	여성	429,681	17.2	92,965	87,978	4,987	336,716	21.6	5.4	20.5
광역시권	남성	292,125	11.7	130,935	115,564	15,371	161,190	44.8	11.7	39.6
	여성	180,316	7.2	41,063	37,838	3,225	139,253	22.8	7.9	21.0
기타시도	남성	540,913	21.7	258,779	245,859	12,920	282,134	47.8	5.0	45.5
	여성	442,655	17.7	109,175	99,275	9,900	333,480	24.7	9.1	22.4
장애 인구		2,495,042	100.0	922,897	861,648	61,249	1,572,145	37.0	6.6	34.5
수도권	남성	10,730,000	24.3	8,103,000	-	-	2,627,000	75.5	-	-
	여성	11,221,000	25.4	6,042,000	-	-	5,179,000	53.8	-	-
광역시권	남성	4,197,000	9.5	2,987,000	-	-	1,212,000	71.2	-	-
	여성	4,413,000	10.0	2,245,000	-	-	2,168,000	50.9	-	-
기타시도	남성	6,745,000	15.3	5,056,000	-	-	1,689,000	75.0	-	-
	여성	6,835,000	15.5	3,752,000	-	-	3,082,000	54.9	-	-
전체 인구		44,141,000	100.0	28,184,000	27,064,000	1,121,000	15,956,000	63.9	4.0	61.3

주)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권"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지역을 의미함(세종특별자치시는 전체 인구 통계와의 비교를 위해 "기타 시도"에 편입)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8년 5월) 참조

권역별 취업자의 사업체 유형을 알아보면, 모든 권역에서 일반사업체에 근무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광역시의 경우 공공근로나 복지일자리 등과 같은 재정지원일자리에 근무하는 비율이 타 권역에 비해 조금 높았다.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odi.or.kr

〈표 Ⅳ-38〉 권역별 취업자 사업체유형

(단위: 명, %)

구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과 같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공공근로, 복지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과 같은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공무원, 교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일자리	그 외 일반사업체	전체
수도권	12053	20121	20864	310074	363112
	3.3	5.5	5.7	85.4	100.0
광역시 (인천제외)	4995	15732	14015	123014	157756
	3.2	10.0	8.9	78.0	100.0
기타시도	6524	23957	16084	294215	340780
	1.9	7.0	4.7	86.3	100.0
전체	23572	59810	50963	727303	861648
	2.7	6.9	5.9	84.4	100.0

주)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권”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지역을 의미함(세종특별자치시는 전체 인구 통계와의 비교를 위해 “기타 시도”에 편입)

장애인 취업자의 직장(일자리) 산업을 권역별로 알아보면,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제조업’ 20.3%이 가장 많았으나, 기타시도의 경우 '농업, 임업, 및 어업'의 비중이 28%로 가장 높았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는 '제조업'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이 12.3%를 차지했으나 광역시의 경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과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0.7%로 나타나 권역별 장애인 취업자의 일자리 산업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든 권역에서 공통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Ⅳ-39〉 권역별 취업자의 직장(일자리) 산업 현황

(단위: 명, %)

	수도권	광역시 (인천제외)	기타 시도	전체
모름/무응답	215	0	0	215
	0.1	0.0	0.0	0.0
농업, 임업, 및 어업	11365	7104	95317	113786
	3.1	4.5	28.0	13.2
광업	0	0	430	430
	0.0	0.0	0.1	0.0
제조업	73875	30198	39276	143349
	20.3	19.1	11.5	16.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833	102	189	1124
	0.2	0.1	0.1	0.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50	376	1196	1622
	0.0	0.2	0.4	0.2
건설업	32967	14996	25761	73724
	9.1	9.5	7.6	8.6
도매 및 소매업	44683	14438	25432	84553
	12.3	9.2	7.5	9.8
운수 및 창고업	24260	10568	15365	50193
	6.7	6.7	4.5	5.8
숙박 및 음식점업	18495	7148	16396	42039
	5.1	4.5	4.8	4.9
정보통신업	8831	950	520	10301
	2.4	0.6	0.2	1.2
금융 및 보험업	8358	2680	6108	17146
	2.3	1.7	1.8	2.0
부동산업	12729	2223	8409	23361
	3.5	1.4	2.5	2.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438	1915	6063	16416
	2.3	1.2	1.8	1.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0429	9875	12017	52321

	수도권	광역시 (인천제외)	기타 시도	전체
	8.4	6.3	3.5	6.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5938	20094	20074	56106
	4.4	12.7	5.9	6.5
교육 서비스업	13115	7359	10974	31448
	3.6	4.7	3.2	3.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3684	16809	39486	89979
	9.3	10.7	11.6	10.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494	1359	7141	14994
	1.8	0.9	2.1	1.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7432	8640	10376	36448
	4.8	5.5	3.0	4.2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생산 활동	920	921	250	2091
	0.3	0.6	0.1	0.2
전체	363111	157755	340780	861646
	100.0	100.0	100.0	100.0

주)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권"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지역을 의미함(세종특별자치시는 전체 인구 통계와의 비교를 위해 "기타 시도"에 편입)

권역별 취업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광역시는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각 28.6%, 33.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각 15.0%를 차지하였다. 반면, 기타시도는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의 비율이 27.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이 22.4%로 뒤를 이어 권역별로 취업자의 직업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모든 권역에서 단순노무 종사자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직업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0〉 권역별 취업자 직업

(단위: 명, %)

	수도권	광역시(인천제외)	기타시도	전체
관리자	2947	2166	431	5544
	0.8	1.4	0.1	0.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0518	11127	23807	65452
	8.4	7.1	7.0	7.6
사무 종사자	66007	20240	32351	118598
	18.2	12.8	9.5	13.8
서비스 종사자	22596	13294	37216	73106
	6.2	8.4	10.9	8.5
판매 종사자	33473	12614	26425	72512
	9.2	8.0	7.8	8.4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1132	8357	93568	113057
	3.1	5.3	27.5	13.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6302	12547	20255	69104
	10.0	8.0	5.9	8.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56393	24429	30554	111376
	15.5	15.5	9.0	12.9
단순노무 종사자	103744	52979	76171	232894
	28.6	33.6	22.4	27.0
군인	0	4	0	4
	0.0	0.0	0.0	0.0
전체	363112	157757	340778	861647
	100.0	100.0	100.0	100.0

주)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권"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지역을 의미함(세종특별자치시는 전체 인구 통계와의 비교를 위해 "기타 시도"에 편입)

3 소결

이번 장에서는 장애인 경제활동상태를 총괄적으로 알아보고, 이에 따른 취업자와 실업자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지역별 현황조사를 통해 각 권역별 장애인 일자리 특성을 분석해보았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경제활동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 5월 기준 15~64세 전체 인구는 경제활동참가율은 2017년 대비 0.3%p 상승하였고, 실업률은 1%p 상승하였으나 고용률은 0.2%p 상승에 그쳤다. 장애인은 만 15세 이상의 경우 실업률은 6.6%로 나타났으나 전체 인구의 실업률은 4.0%로 장애인의 실업률이 1.6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요 인구통계학 변수별 경제활동지표를 2017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남성과 여성 모두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하락하였으며 실업률의 경우 남성, 여성이 각각 0.8%p, 1.2%p 상승하였으며, 연령대 별로도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는 상승하여 장애인의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취업자의 주요특성을 살펴보면 장애인 임금근로자는 전체 인구의 임금근로자 비중에 비해 6.9%p 낮은 비중 보여 장애인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수 있다. 직장(일자리)산업은 '제조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에 비해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등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취업자의 직장에서의 직업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27.0%로 가장 많았다. 전체 인구 대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의 비율이 낮은 반면, '단순노무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의 비율은 높아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노무직으로 일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실업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 연령별로는 15~59세, 장애정도별로는 경증, 장애유형별로는 지체 장애, 시각 장애, 지역별로는 광역시권, 학력별로는 고졸, 대졸 이상의 비중이 실제 장애 인구에서의 비중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장애인 실업자 대비로는 성별로는 여성, 연령별로는 15~59세 이상, 장애정도별로는 중증, 장애유형별로는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 시각 외 감각장애, 지역별로는 광역시권,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대졸 이상 장애인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전체 인구 실업자 분포와 비교하면, 성별로는 남성, 연령별로는 40세 이상, 지역별로는 기타 시도,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고졸의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취업경험이 있는 실업자가 직장(일)을 그만 둔 이유로는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또는 장애상태의 악화)'가 전체의 27.2%를 차지하였다.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실업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주된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이 전체의 19.6%를 차지하였다. 실업자가 희망하는 직장(사업체)의 종류를 살펴보면, 공공근로, 복지일자리 등의 정부재정지원 일자리가 24.3%, 보호작업장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4.4%로 나타났으며, 절반 이상의 실업자들이 그 외 일반사업체(66.9%)에 근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의 희망 근로시간 형태는 '전일제 근로' 67.6%, '시간제 근로' 32.4%로 나타났으며 실업자가 시간제 근무를 희망하는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장애, 건강등 개인사정으로' 81.5%, '아이를 돌보려고' 11.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업자의 42.4%가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및 기타'에 종사하고자 하며, 다음으로 '제조업' (23.9%), '도소매, 음식 숙박업'(15.1%)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 중 '단순노무 종사자' 희망 비율은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능, 기계조작 종사자' 27.8%, '서비스, 판매 종사자' 20.9%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지역별 현황조사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은 '기타 시도'가 37.4%로 '수도권'(36.9%)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난 반면, '광역시권'은 36.4%로 다소 낮았다. 실업률의 경우 '광역시권'이 1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성별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수도권 거주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21.6%, 20.5%로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실업률은 광역시권 거주 남성장애인이 1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인구와 비교해 보면, 수도권 여성장애인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21.6%)은 수도권 거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53.8%) 보다 32.2%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취업자의 사업체 유형을 알아보면, 모든 권역에서 일반사업체에 근무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광역시의 경우 공공근로나 복지일자리 등과 같은 재정지원일자리에 근무하는 비율이 타 권역에 비해 조금 높았다. 장애인 취업자의 직장(일자리) 산업을 권역별로 알아보면,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제조업' 20.3%이 가장 많았으나, 기타시도의 경우 '농업, 임업, 및 어업'의 비중이 28%로 가장 높았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는 '제조업'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이 12.3%를 차지했으나 광역시의 경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과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0.7%로 나타나 권역별 장애인 취업자의 일자리 산업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든 권역에서 공통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권역별 취업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광역시는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각각 28.6%, 33.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장치 ·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5.0%를 차지하였다. 반면, 기타시도는 '농립어업 숙련 종사자'의 비율이 27.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이 22.4%로 뒤를 이어 권역별로 취업자의 직업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모든 권역에서 단순노무 종사자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직업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경제활동상태 총괄 현황을 전국과 권역별로 살펴본 결과, 장애인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특별한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수행되고 있으나 실제 장애인 일자리나 고용문제 등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을 찾기가 어렵다.

대표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수행하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경우도 지역자치단체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추진계획 수립, 예산 지원, 사업수행기관 지원 · 관리 · 지도 점검 · 평가, 사업 실적 취합, 사업진행 및 결과 보고, 지역특화 장애인일자리 및 배치기관 개발 등을 추진해야 함에도 매년 지차체의 직무별 참여현황과 배치기관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환경정리 및 장애인주차구역계도 등의 직무참여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배치기관도 공공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반복참여 문제와 일반사업체로의 이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지역의 환경과 고용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업종과 직종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장애인 일자리 정책 수립에 있어 지역의 환경과 여건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Ⅴ. 지역중심의 장애인일자리 창출 방안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odi.or.kr

1 지역중심의 일자리 현황 논의

앞서 장애인 맞춤 일자리 지원을 위해 각 지역별 일자리 정책과 특성을 정리하고 통계자료를 통해 장애인의 고용현황을 분석하였다. 이에 17개 지역의 일자리 정책 현황과 장애인 고용 통계자료를 함께 매칭하여 지역별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Ⅴ-1〉과 같다.

고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권(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지역)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순서로 정리하였다.

우선 지역별 일자리 정책을 보면, 수도권, 광역시권, 기타 시도 구분없이 지역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도 자체예산과 더불어 중앙정부 지원, 민간, 기타 재원을 통해 추진되고 있었다. 다만 다양한 지역중심의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정책은 장애인일자리사업만을 통해 추진되고 있어 별도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정책에 장애인이 포함되지 않고 소외된 듯 하게 보인다. 청년 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 여성일자리 등 대상별 지역중심의 추진전략과 실천과제를 제시하였음에도 이러한 대상별 정책에 장애인이 특별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이외 장애인이 언급되거나 별도의 제도를 갖고 있는 곳이 있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역특성에 기초한 정부협력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대구광역시의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별도의 직무지도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대전시 직영체계로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무지개복지센터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는 장애인 공공일자리 창출(신규)이 핵심과제로 제시되었으나 사업의 세부내용을 보면, 기존의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었다. 경상남도의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 외 장애인근로자 일자리 나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지역별 장애인 고용 특성을 보면, 먼저 지역별 취업자 비율은 수도권과 광역시권에서는 전체 인구와 장애인구 비율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기타 시도의 경우에는 전체 인구 취업자 비율(31.6%)보다 장애인구 취업자 비율(41.2%) 약 10%p 높

게 나타났다. 실업자 비율 역시 기타 시도에서 전체 인구 실업자 비율(23.7%) 보다 장애인 실업자 비율(45.3%)이 20%p 이상 높게 나타나 다른 지역과 다른 특성을 보였다. 또한 지역별 취업자의 사업체 유형을 보면, 수도권 지역의 장애인은 보호고용으로의 취업이 전체 평균보다 0.6%p 높은 반면, 기타 시도의 경우 0.8%p 낮게 나타났고, 정부재정지원 일자리로의 취업은 광역시가 전체 평균 보다 3.1%p 높게 나타나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성을 보였다. 장애인의 일자리 산업유형에서 특별히 차이가 나는 것은 농업,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기타 시도가 전체 평균 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 종사하는 비율은 광역시가 전체 평균의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기타시도로 갈수록 보호고용의 비율이 낮아지며, 광역시는 재정지원사업인 장애인일자리를 상대적으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Ⅴ-1〉 지역별 일자리 정책 특성 및 장애인 경제활동 특성

지역	일자리 추진전략	장애일자리정책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일자리 특성
서울 특별시	●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 뉴딜일자리 민간연계 강화 -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 정부협력형 일자리 사업 추진 ●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 - 청년-기업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 - 여성일자리 창출 및 역량 강화 - 복지 수혜 대상자 맞춤형 일자리 제공(어르신, 장애인, 저소득) ● 미래형 스마트산업 육성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 - 혁신성장과 글로벌 창업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 도시재생 캠퍼스타운 등 지역거점 기반 일자리 창출 - 문화예술인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 시정분야별 주요사업 민간일자리 창출 -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고용기회 확대 - 시·구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성과 제고 - 청년 취업지원 공간 확충 및 서비스 확대	- (장애인일자리사업)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일자리 2,240개 - 정부협력형 일자리(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생산적 일자리 창출, 장애인 및 결혼이주여성등의 취약계층이 사업대상	15세이상 인구: 382,947명 취업자: 120,934명 비경제활동인구:256,003명 장애인 고용률: 31.6%	-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제외한 지역특성에 기초한 정부협력형 일자리(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인천 광역시	● 일자리시스템혁신 - 일자리 거버넌스 활성화 - 데이터 기반의 열린 일자리 행정 구현 ●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 인천형 혁신성장 산업 육성	장애인일자리사업	15세이상 인구: 135,346명 취업자: 48,729명 비경제활동인구: 81,998명 고용률: 36.0%	- 장애인일자리사업 이외 장애인을 위한 지역특화 사업은 없음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역	일자리 추진전략	장애일자리정책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일자리 특성
	- 글로벌 도시 인천공항 경제권 구축 -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 구축 -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지원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맞춤형 일자리지원 - 대상별(청년, 여성, 어르신, 신중년)일자리 지원 - 원도심 균형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수요자 맞춤형 인력양성 ● 행복한 일자리 만들기 -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기반 조성 - 고용안정 및 근로 여건 개선			
경기도	● 직접창출형(공공일자리, 공익적 민간일자리) 공공일자리 - 안전·기본질서·정의 실현을 위한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 지도, 단속분야 일자리창출로 공정한 사회 기반 마련 공익적 민간일자리 -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일로 道 재정이 필요한 민간 일자리 발굴 확대 - 버스분야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사업 등 고용기여형 일자리	장애인복지일자리	15세이상 인구: 520,740명 취업자: 193,449명 비경제활동인구:318,088명 장애인 고용률: 37.1%	- 장애인일자리사업 이외 경기도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 -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직무지도원 배치 사업을 실시 1,152,100백만원

지역	일자리 추진전략	장애일자리정책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일자리 특성
	- 4차 산업혁명 대비 ·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일자리 - 산업규제, 불합리·불공정 규제의 신속한 개선 -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통해 일자리 창출 사업 발굴 - 공공인프라 구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부산 광역시	● 사업유형은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으로 구분함 공공(직접일자리, 공무원채용), ● 민간영역(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일자리인프라, 기업유치)이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	15세이상 인구: 168,142명 취업자: 53,326명 비경제활동인구:109,969명 고용률: 31.7%	- 장애인일자리사업이외 장애인을 위한 지역특화 사업은 없음
대구 광역시	● 대구형 청년일자리 (산업혁신)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 투자유치 (기업혁신)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 기업 육성 (고용혁신) 지역 특화 맞춤형 모델 추진 ● 민간일자리 창출지원 (창 업) 구상에서 성공까지 단계별 창업지원 (고용서비스) 맞춤형 인력양성 / 취업지원 (고용질 개선) 고용 친화 / 환경 개선 지원 ● 일자리 안전망구축 (직접일자리) 복지 확대 일자리 안전망 구축 (중 장 년) 전문직 퇴직자 / 사회공헌 지원 (취약계층) 여성일자리 / 어르신 일자리 ● 일자리 중심 시정 운영	장애인일자리사업	15세이상 인구: 117,338명 취업자: 32,939명 비경제활동인구: 76,640명 고용률: 28.1%	지역일자리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유일하며 경기도와 같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직무지도원 지원 사업을 실시

www.koddi.or.kr

지역	일자리 추진전략	장애일자리정책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일자리 특성
	(영향평가) 신산업 / 대형 프로젝트 평가 (성과관리) 일자리 통계 관리 / 실적평가 (전략회의) 일자리 전략 회의 / 포럼 운영			
광주 광역시	● 인프라혁신 - 시정 기획·집행·평가 등 일자리 중심 개편 ● 맞춤형 일자리 - 청년, 여성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지속가능한 일자리 -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질 개선 - 노사상생 문화와 비정규직 근로여건 개선	장애인일자리사업	15세이상 인구: 67,627명 취업자: 22,559명 비경제활동인구: 43,523명 고용률: 33.4%	- 장애인일자리사업이외 장애인을 위한 지역특화 사업은 없음
대전 광역시	● 경제성장 기반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지역정착 청년 일자리 종합 지원 - 복지일자리 확충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일자리 확대 -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 일자리 질 개선 ● 일자리 추진 체계강화	장애인일자리사업 무지개복지센터 장애인 일자리 창출	15세이상 인구: 70,367명 취업자:27,738명 비경제활동인구:40,032명 고용률:39.4%	- 대전시 직영체제로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무지개복지센터로 장애인일자리 창출
울산 광역시	● 혁신주도형 일자리 사업육성 ● 일자리 인프라 구축 ● 대상별 취업지원 ● 실, 퇴직자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 ● 소상공인 지원으로 일자리 유지 ● 문화, 관광의 서비스 산업화 ● 따뜻한 일자리사업 추진	장애인일자리사업	15세이상 인구: 48,967명 취업자: 16,841명 비경제활동인구: 30,280명 고용률: 34.4%	- 장애인일자리사업이외 장애인을 위한 지역특화 사업은 없음

지역	일자리 추진전략	장애일자리정책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일자리 특성
강원도	● 안정적 일자리 ● 든든한 일자리 ● 따뜻한 일자리 - 청년친환형 일자리 서비스 확대 - 일자리수요 계층별 맞춤형 지원(노인, 여성, 신중년, 장애인) -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기회 확대 - 남북경협 기반 접경지역 일자리 회복	장애인일자리사업	15세이상 인구: 98,499명 취업자: 32,642명 비경제활동인구: 62,147명 고용률:33.1%	- 장애인일자리사업이외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사업은 없음
충청북도	● 내일의 고용환경 변화대응 ● 내일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청년 일자리 인프라 견실화 및 역량 강화 - 여성 경력개발·유지 친화적 환경 조성 - 중장년 지속가능한 일자리 역량확보 -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창의적 일자리 창출 ● 내일의 좋은 일터 만들기 ● 내일의 일자리 거버넌스 재구조화 - 지자체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 수행·기획 기능이 강조됨에 따라 (가칭) “충북형 일자리” 발굴	- 장애인일자리사업	15세이상 인구: 94,158명 취업자: 29,784명 비경제활동인구:62,039명 고용률:31.6명	- 장애인일자리사업이외 장애인을 위한 지역일자리 사업은 없음
충청남도	● 취업애로계층의 일자리창출 ● 풍요로운 삶의 일자리 창출 ● 경제성장 주도 ● 일자리 창출 ● 고르게 창출되는 일자리 ● 도민 중심 고용서비스	장애인일자리사업	15세이상 인구: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고용률:	- 장애인일자리사업이외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사업은 없음
세종시	● 시민중심 일자리정책 추진 및 인프라 구축 ● 스마트산업, 4차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장애인일자리사업	15세이상 인구: 10,487명 취업자:4,355명	- 장애인일자리사업이외 장애인을 위한

www.koddi.or.kr

지역	일자리 추진전략	장애일자리정책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일자리 특성
	●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창업키움센터로 젊은 일자리 창출 - 경력단절여성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 노인일자리 확충 및 사회활동지원 - 꼭 일하고 싶은 일자리 환경 조성		비경제활동인구:6,008명 고용률:41.5%	일자리사업은 없음
전라 북도	●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특화 일자리 ● 미래 혁신을 주도하는 성장 일자리 ● 삶의 품격을 높이는 활력 일자리 ● 더불어 잘 사는 포용 일자리 - 취업계층일자리 지원(신중년, 경력단절여성, 경력연계형 노인일자리, 장애인 공공일자리 신규 창출, 저소득층 공공일자리 신규 창출,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사회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 결혼이민자 신규 일자리 창출 - 한발 더 다가가는 공공일자리	장애인일자리사업	15세이상 인구: 126,367명 취업자:60,120명 비경제활동인구:64,144명 고용률:47.6%	- 장애인 공공일자리 창출(신규)이 핵심과제로 제시되었으나 사업 세부 내용은 기존의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설명하고 있음
전라 남도	● 인구절벽, 열악한 산업구조 극복을 위한 선도 일자리 3만개 창출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남형 일자리 모델' 발굴 및 확산 ● 3대 일자리 영역, 10대 핵심과제의 마중물 창출 ●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효율화 등 성과기간 일자리사업 추진 ● 전남형 종합 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혁신	장애인일자리사업	15세이상 인구: 140,357명 취업자:57,474명 비경제활동인구:81,539명 고용률:40.9%	- 장애인일자리사업이외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사업은 없음
경상 북도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창출 - 재정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 구직자 취업지원 -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장애인일자리사업	15세이상 인구: 169,979명 취업자:48,489명 비경제활동인구:117,263명 고용률:28.5%	- 장애인일자리사업이외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사업은 없음

지역	일자리 추진전략	장애일자리정책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일자리 특성
	● 맞춤형 직업훈련 - 고용시장에 맞는 맞춤형 인력양성 ● 창업지원 -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 공공행정 지원 - 행정지원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 민간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			
경상 남도	● 스마트 일자리 확산 ● 맞춤형 일자리 강화 - 청년 취·창업 기반 강화 - 신중년 일자리 확충 - 노인 일자리 확대 - 여성 Job-life 개선 ● 사회적 일자리 확대 - SOC 일자리 확충	- 장애인일자리사업 - 장애인근로자 일자리 나눔사업	15세이상 인구:180,203명 취업자:57,296명 비경제활동인구:117,695명 고용률:31.8%	장애인일자리사업외 장애인근로자 일자리 나눔사업 시행
제주도	● 일자리 인프라구축 ● 공공일자리창출 ● 민간일자리창출 ● 일자리 질 개선 ●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청년, 여성, 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장애인일자리사업	15세이상 인구: 34,247명 취업자:11,868명 비경제활동인구:21,261명 고용률:34.7%	- 장애인일자리사업이외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사업은 없음

www.koddi.or.kr

2 장애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 모델 개발

1) 지역 맞춤형 일자리 모델 설계 방향

지역별 일자리 정책과 장애인의 고용 및 실업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목적은 “지역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장애인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을 확대”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로는 첫째, 장애유형별 정도별 특성을 반영하고 전문성 활용이 가능한 일자리 수요 발굴, 둘째, 직업재활 서비스를 통한 촘촘한 디딤돌 역할 강화, 셋째, 지역의 장애인 일자리 주도 역량 강화, 넷째, 사업 차별화 및 시너지 제고로 제안하였다.

〈표 Ⅴ-2〉 지역중심 장애인 일자리사업 모델 설정 방향

① 장애유형별 정도별 특성 반영 및 전문성 활용이 가능한 일자리 수요 발굴	② 직업재활을 통한 촘촘한 디딤돌 역할
· 청년, 노인과 다른 장애특성 및 정도를 반영한 일자리 성격 · 다양한 일의 목적과 근무 형태가 존재 · 장애인과 지역사회 모두의 공유가치 창출 수요 발굴	· 단순직종(환경미화, 주차보조 등) 일자리 매칭 지양 · 직업상담 및 평가, 교육, 조직화, 일자리로 연결되는 종합지원의 디딤돌 구축 · 인식전환, 수요맞춤, 현장중심의 커리어 모색 교육 · 활동·일자리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조직화 지원
③ 지역의 장애인 일자리 주도 역량 강화	④ 사업 차별화 및 시너지 제고
· 지역별 적합 일자리 수요 발굴지원 · 지역별 특성과 장애인 개개인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정책대응 · 지역의 예산 관리 자율권의 확대 · 지역 주도의 상향적 추진체계 구축	· 행정안전부 기존 인프라 및 사업과의 연계 강화 · 직접 일자리 뿐 아니라 간접 지원 강화 ·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일자리로의 연계 확대 · 지자체 여건을 고려한 지원내용·방식·규모, 추가사업 연계

장애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의 특성은 일의 목적이 경제활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보람과 가치 등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전일제뿐 아니라 장애특성을 고려한 시간제, 프로젝트 단위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적용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새로운 일,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가치를 경험하는 계기로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특성과 장애인의 욕구를 충분히 사정한 일자리를 창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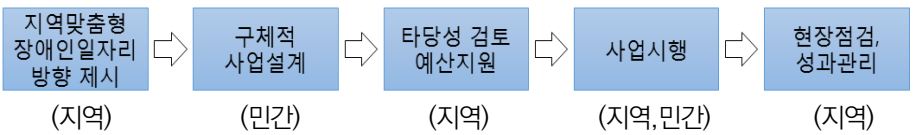
일자리 발굴에 있어서도 장애인과 지역 모두의 공유가치를 추구하는 일을 중심으로 수요를 발굴한다.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관련 일자리 사업은 중앙, 즉 보건복지부의 추진계획과 예산배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순직무(환경정리, 주차보조 등)와 그에 맞는 소득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장기적으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직업적 특성을 충분히 사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 지역문제 해결 및 공동체에 기여할수 있는 일자리 발굴과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내 네크워크(지역내 직업재활전문기관)를 활용하여 배치기관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운영 충돌 최소화(장애인 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등)를 위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요 발굴 방법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중앙과 지역차원(지자체)의 공동 발굴이 요구되며 그 동안 진행되었던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수범사례 발굴 및 권역별 현장 토론회, 장애인 당사자 간담회, 민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대대적인 지역일자리 수요 발굴이 요구된다.

〈표 Ⅴ-3〉 장애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 수요 발굴 방법

발굴방법	수행주체
해외 지역맞춤 장애인 일자리 사업 및 신규 직업군 조사(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중앙
지역맞춤 일자리 발굴 연구 수행(지역 정책연구원)	중앙, 지역
일자리 전문가 인터뷰 및 파트너 기관 일자리 제안 접수	중앙, 지역
일자리 공모 대회 및 제안 플랫폼 운영	중앙, 지역
일자리 수요처 기업, 단체, 협회, 중간자원기관과의 협의	지역
지자체별 정책 스터디 및 지역 자원조사를 통한 일자리 발굴	지역
일자리 발굴 목적의 일자리 사업 운영(가칭 지역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기획)	지역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지자체는 지역 민간기업이나 사회적경제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발굴하며, 장애인 매칭과 지원 등의 밀착 관리 등을 통한 자율적·경쟁적 사업을 추진하며 중앙부처는 사업 예산 지원 등의 마중물을 제공하고 성과중심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그림 V-1] 사업추진 개요

2) 장애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 기본유형 설계

장애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 기본 유형을 제안해 보면, 크게 지역사회서비스형과 지역취업지원형으로 구분한다.

먼저 지역사회서비스형은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목표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여 장애인 일자리로 연계를 하는 사업이다. 또한, 현장경험을 통한 장애인의 직무역량 강화와 함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한다. 사업의 특징으로는 환경미화나 주차단속등과 같은 단순 공공근로형 일자리를 지양하며 지역주민의 수요가 큰 사회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문화, 교육, 돌봄, 환경, 안전 등)를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민간공모 등을 통해 발굴한다. 또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하는 경우도 지원한다.

다음으로 지역취업지원형은 지역의 사회적경제와 마을사업장(마을기업, 농어업법인 등)과의 매칭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추구하는 사업이다. 지역취업지원형은 지역 경제·사회·문화활동을 영위하는 법인·단체(사회적경제조직, 지역 중소·향토기업, 지역 우수사업체, 영농·영어조합법인)중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발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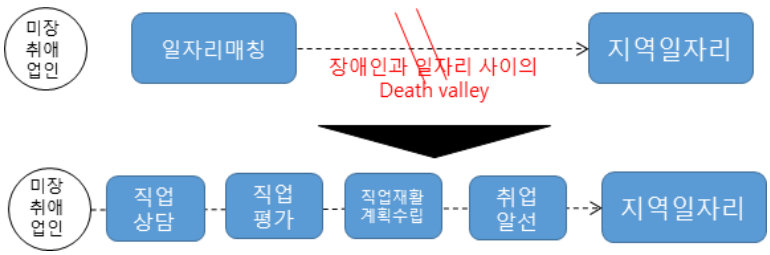
〈표 Ⅴ-4〉 장애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 분류

구분	장애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안)	
분류	지역사회서비스형	지역취업지원형
특징	단순 생계보조형 일자리가 아닌,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문제 해결

3) 장애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 모델 운영 방향

장애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는 낮은 생산성의 단순 노무에 치우치지 않도록 직업재활전문가를 두고 직무개발 및 배치 등의 촘촘한 디딤돌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단순 일자리 매칭만으로 이뤄지지 않으므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지역사회 조직화·네트워킹 등의 입체적 지원체계구축 등을 통한 직업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직업재활전문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한 지원체계구축이 요구되는데 직업상담, 평가,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전문적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의 직업재활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참여자 선발 및 직무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배치기관 선발과 배치기관 내 직무분석을 통해 참여자 배치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Ⅴ-2] 장애인의 개별 욕구와 지역일자리 사이의 디딤돌 역할

3 장애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방안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이 지역사회내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타재정지원일자리사업과의 차별성이 필요하다. 이 사업은 그 대상이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직업 현장에서의 적응도, 적합한 직업연계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직무지도원과 같은 전문인력 지원과 전문직업재활서비스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내 장애인복지관, 단체, 협회 등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은 필수적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형태가 계속적인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비정규직이나 아웃소싱 형태로 근무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참여 종료 후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전이 확률이 매우 낮아 또다시 실업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즉 구성된 직무들이 민간기업과의 연계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또한, 직업재활전문기관과의 연계와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장애유형이나 정도에 따른 직무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치기관은 주민센터나 사회복지기관, 공공기관 등의 의무감에 따른 배치가 강요되고 있어 직무의 습득과 활용도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 사업이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고용현황을 전문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참여자의 모집과 선발 배치, 관리의 단계에서 장애인의 직업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직업재활 전문인력이 투입되었을때 보다 양질의 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배치 후 적응지원 및 지속적인 직무지도를 통해 참여자의 현장 적응도를 향상하고 사업 이후 고용유지를 위한 체계적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즉, 이 사업의 대상이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직업 현장의 적응과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직무지도원과 같은 직업재활 전문인력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직무지도원이 장애인의 직업적응과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현장 경험과 성과를 통해 보고되었다. 이 사업이 상향식 분권형 사업을 표방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앙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자체 예산 배정을 통해 직무지도원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표 Ⅴ-5〉 장애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

구분	일자리유형	
분류	지역사회서비스형	지역취업지원형
배치 기관 (안)	·지역 공공서비스 질 향상 목적 ·지역주민의 수요가 큰 사회서비스 분야 ·문화, 교육, 돌봄, 환경, 안전 등	·지역 고용특성 반영 ·사회적경제분야(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마을 기업 비영리단체 등 ·지역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창업 자금 지원 등

필요 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지원방안
직업 연계	지역사회 취업체 개발(전문기관 활용), 국가 주도의 고용정책 확대, 취업연계 인력(전담인력)
직무 지도	전담인력을 통한 적응지원 및 직무지도 실시
직무 분석	직업재활 전문인력을 통한 전문적인 직무분석 및 표준매뉴얼 개발
직무 기술	직업재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수행 직무에서 요구되는 기술수준을 참여자가 적합하게 갖추고 있는지 사전 확인
교육	지역사회 전문기관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배치기관 대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 전문인력을 통한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교육
직무 배치	장애인 개인의 직업역량 적성 등을 고려한 직무배치

지역의 직업재활전문기관 연계	지자체의 직무지도원 지원

참고문헌

김민, 김준영, 주희진, 조희진, 이수연, 정수연(2016). 장애인일자리사업 평가체계 구축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강동욱, 이미정, 김원호, 김혜정, 신직수(2017).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의 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김진우 (2010). 영국 장애 소득보장체계의 현황 및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김태영, 백진, 이범준, 백재환(2018).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방안. 일자리기획단.

나운환, 박경순, 정승원, 강윤주, 최영광, 김춘만 (201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성과와 발전방안.

나운환, 이혜경 (200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연구, 15(1), 1-23.

남용현, 최종철, 류정진, 이일행, 윤형경. (2011). 장애인 고용정책 재원 합리화 방안. 연구자료, 27-31.

박혜원, 김호진, 방종관, 임예직, 유완식, 김언아.(2017).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박혜원, 임예직, 이기영, 김광직, 김언아.(2018).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201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유완식, 장창엽, 김용탁, 변민수, 홍자영, 윤형경 (2010). 장애인 고용정책의 변천과 의무고용제도의 발전 방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이규용, 강병식(2012). 지역일자리사업의 현황과 쟁점-중앙부처의 지역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월간노동리뷰(2012.2월호), 75-91. 한국노동연구원.

이영성(2009). 인구, 총일자리, 산업별 일자리 사이의 인과관계. 국토연구(62).

최종철(2004). 일본 장애인고용촉진 정책의 변화와 과제: 최근의 입법동향 및 고용현황을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14(2), 39-50.

厚生労働省(2010) 使用者による障害者虐待の状況調査

厚生労働省(2013)障害者雇用促進法の概要

厚生労働省(2015)障害者雇用促進法の概要

厚生労働省(2016), 平成28 年 障害者雇用状況の集計結果

厚生労働省, & 高齢. (2013). 解説編 障害者雇用促進法の概要 (特集 障害者雇用). 月刊人事労務, 25(4), 4-9.

BIH(2016). BIH-Jahresbericht 2015/2016.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2017) Portfolio Budget Statements 2017-18 - Budget

Related paper NO.1.15A.
Lienemann, C. (2012). Berufliches Rehabilitationssystem von jungen Menschen mit Behinderun in Deutschland. 국립특수교육원 제19회 국제세미나 자료집-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의 국제 동향, 29-57.
Sommer, J. & Gericke, Th. & Fischer, B. & del Estal (2015). Rahmenbedingungen fuer den Uebergang aus Werkstaetten fuer Menschen mit Behinderungen(WfbM) auf den allgemeinen Arbeitsmarkt. Landesamt fuer Soziales und Versorgung.
http://www.interval-berlin.de/documents/InterVal,%20Gericke_Juni%202015_Brandenburger %20WfbM-Studie.pdf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장애인 맞춤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역일자리 탐색 연구

발 행 일 : 2019년 10월
발 행 인 : 최경숙
발 행 처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5층
Tel. 02-3433-0600
Fax. 02-3433-9567
http://www.koddi.or.kr
편집·인쇄 : 한국나눔복지연합회

ISBN 978-89-6921-343-3 93300

※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무단 복사하는 것을 금합니다.